

200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2002. 1~12

머 리 말

이 요약집은 우리 연구원이 2002년도 중 완료한 연구사업의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연구 내용의 요점만을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관심 있는 과제의 연구보고서가 더욱 활용되도록 하려는 데 발간의 목적이 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은 지식·환경·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농업 부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초연구, 산업으로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강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강화, 통상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 남북한·동북아 교류 증대에 대비한 중단기 정책개발을 위해 타 출연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국제기구,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연구협력 확대와 교류 추진을 연구의 기본 방향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요약집에는 이들 연구결과 83과제를 8분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농산업경제연구 분야에는 「주요 과채의 주산지 구조와 지역 간 경쟁력 분석」 등 21과제, 농촌발전연구 분야에는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 변화와 발전」 등 17과제, 농업관측정보 분야에는 「농업전망 2003」 등 5과제, 농정연구 분야에는 「북한의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등 19과제, 산림정책연구 분야에는 「산촌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 방향」 등 3과제, 신농업·농촌 특별대책연구 분야에는 「DDA협상 이후를 대비한 신농업·농촌 특별대책」 등 3과제, 벤처농기업 창업보육센터는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1과제, 단기정책개발연구 분야에는 「미얀마 농업마케팅 개선사업」 등 14과제의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기관 여러분과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준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요약집이 우리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3.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차 례

1. 농산업경제연구

1. 1. 주요 과채의 주산지 구조와 지역 간 경쟁력 분석	3
1. 2.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분석	6
1. 3.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10
1. 4. 농산물 공동출하 유형별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15
1. 5. 지역 단위 농업환경모형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18
1. 6. 2001 식품수급표	21
1. 7.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시행방안 연구	23
1. 8. 지속가능농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26
1. 9. 소득보전직불제 시행방안 연구	29
1.10. 마산항 농산물 수출물류센터건설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37
1.11. 충주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 연구	42
1.12.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녹차산업의 발전방향	46
1.13. 선인장 국제시장 조사 및 수출 확대방안	49
1.14. 고양 화훼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방안연구	52
1.15. 농협 유통활성화사업 컨설팅	57
1.16.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62
1.17.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	66
1.18. 전통장류의 수출확대 방안 연구	69
1.19. 청과물 품질등급화의 경제성 평가 및 정착방안 연구	72
1.20. 폐영농자재의 발생 및 수거 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76
1.21. 농업인력육성사업 평가	80

2. 농촌발전연구

2. 1.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85
2. 2.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90
2. 3.	농촌마을의 리더십 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	94
2. 4.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97
2. 5.	농업 관련 NGO의 농정참여에 관한 연구	101
2. 6.	조건불리지역 발농업 직접지불제 세부시행방안 연구	104
2. 7.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수립 연구	107
2. 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11
2. 9.	소래지구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개발계획	114
2.10.	구병리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개발계획	117
2.11.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	120
2.1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방안 연구	124
2.13.	도·농 통합형 농촌정주기반 구축방안 연구	128
2.14.	농촌폐비닐 적정배출과 종합적인 수거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132
2.15.	물관리 생력화 기술 개발의 경제성 분석	135
2.16.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137
2.17.	수산부분 직접지불제의 농업 부문 적용사례연구	140

3. 농업관측정보

3. 1.	농업전망 2003	147
3. 2.	농업·농촌경제동향분석	151
3. 3.	쇠고기 유통 및 소비 행태 분석	153
3. 4.	한국의 채소수급동향 조사	157
3. 5.	제천시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연구	158

4. 농정연구

4. 1. 북한의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165
4. 2. KREI 북한농업동향	168
4. 3.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세감축효과 분석	171
4. 4. 세계농업정보	174
4. 5. 주요국의 WTO 농산물협상 제안서 분석 및 대책수립	176
4. 6.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180
4. 7.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농업 부문 대응방안	184
4. 8. 북한의 농업발전 계획 수립 연구	187
4. 9. 농업종합자금제도의 비전과 장단기 발전전략	191
4.10. 북한 농업 및 농정 동향 분석	204
4.11. 남북한 당국자 간 농업협상을 위한 의제개발 및 대응방안 ..	207
4.12. 주요 GM 작물의 경제성 및 소비자 선호도 분석	211
4.13. WTO 농업협상에 농업의 비교역적 사항 반영 방안	214
4.14.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방안 연구	217
4.15. 과수농가의 투자결정 모형과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220
4.16. 채소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	224
4.17. 농업정보 응용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227
4.18. 농장관리·농장재정·사회문화 지표 및 농업정책 개발연구 ...	232
4.19.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교역 및 농업협력 방안연구	235

5. 산림정책연구

5. 1. 산촌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241
5. 2.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임산물 교역과 대응 방안 연구 ...	245
5. 3. 중국의 밤 산업 동향	249

6. 신농업·농촌 특별대책연구

- 6. 1. DDA협상 이후를 대비한 신농업 농촌 특별대책 255
- 6. 2. WTO뉴라운드 대비 농업·농촌 발전과제 259
- 6. 3. 새로운 농촌건설을 위한 농촌개발과 복지 증진대책 연구 262

7.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 7. 1.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267

8. 단기정책개발연구

- 8. 1. 미얀마 농업마케팅 개선사업 273
- 8. 2. 2002 수확기 쌀시장 안정화 방안 277
- 8. 3.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및 2002년 쌀산업
안정대책 연구 280
- 8. 4. 개도국의 농업연구개발 국제공동연구 283
- 8. 5. 월간 농업농촌경제동향 286
- 8. 6.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288
- 8. 7. 구제역 파급 영향 분석 291
- 8. 8.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94
- 8. 9. 마늘산업의 당면 문제와 대책 296
- 8.10. 과일·과채·채소·축산·수급 및 반응함수 추정 300
- 8.11. 멕시코의 농업구조 분석과 한-멕시코 FTA 평가 304
- 8.12. 미국과 일본의 농업소득 안정정책 307
- 8.13. 북고성군 온실농장 협력사업 사례와 정책과제 311
- 8.14.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 부문 대책 314

1. 농 산 업 경 제 연 구

주요 과채의 주산지 구조와 지역 간 경쟁력 분석

연구자 : 박현태, 김연중, 한석호

연구기간 : 2002. 1 ~ 2002.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80년대 이후 소득증가와 더불어 고급원예작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채소 농가와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시설채소 중에는 과채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채류는 대체로 주산지가 형성되어 생산되고 있는데,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산지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채류의 수급균형을 통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주산지에 대한 기본자료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과채류의 주산지 분포와 주산지별 생산구조를 파악하고, 산지의 변화 동향과 원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주산지별 경쟁력 분석을 통해 주산지 변화를 전망하고, 주산지 발전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연구 대상 품목은 과채류 가운데 생산액 비중이 큰 수박(19%), 딸기(18%), 오이(13%), 참외(12%) 등 4개 품목이다. 4개 품목이 전체 과채류 생산액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과채류 주산지의 분포는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한 작물별 점유율을 고려하여 총 1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품목별 주산지 변화는 집중도 지수를 분석지표로 하였고, 주산지별 경쟁력 분석의 지표로 수익성과

산지 간 경쟁력지수를 활용하였다.

3. 주요 연구내용

- 주요 과채류 수급 현황과 과제
- 주요 과채류 주산지 구조
- 주산지 변화 요인과 경쟁력 분석
- 주산지 변화 전망과 발전 방향

4. 과채류 주산지의 특성

일반적으로 주산지는 타 지역보다 특정 작물의 생산이 집중되어 있고, 어떤 통합된 체제에 의해 생산되어 타 지역보다 생산력이 높으며,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주산지는 고정되어 있고, 영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있다. 또한 주산지는 생산지역의 타 지역 이동뿐만 아니라 주산지 내에서도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과채류의 경우도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각지에 많은 주산지가 형성되었고, 앞으로도 변동될 것이다. 그러나 과채류의 경우는 다른 작물에 비해 주산지 변화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채류는 시설재배가 대부분이고 자본·기술 집약적이라는 특성이 있고, 고정된 시설에 의해 생산시기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주요 과채류의 주산지 변화전망

과채류의 주산지는 해당 주산지의 경제적 입지 조건과 주산지 내부의 대응능력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연구 대상 품목의 주산지 변화를 전망해 보면, 수박은 소비의 주년화가 진행되면서 공급체계도 바뀌어 동일 주산지 내에서도 축성작형, 반축성작형, 억제작형 간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지재배 수박에 대한 수요 감소로 고창 지역은

쇠퇴하고 노지역제작형 및 시설억제작형 도입이 가능한 봉화, 음성지역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외는 현재의 성주, 함안, 고령지역 등에서 생산·유통기술이 우위에 있는 성주지역과 성주 인근지역으로의 집중화가 예상된다.

노지재배 오이 주산지인 현행 여주, 포천 등에서 노지역제작형에 유리한 연천, 홍천, 제천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시설재배 오이의 전통적 주산지인 구례, 고흥, 광양, 창녕 등은 장기간 재배에 의한 연작피해, 시설의 노후화, 기술의 진부 등으로 정체할 전망이다. 춘천, 부여, 공주, 평택 등이 새롭게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6. 과채류 주산지 발전방향

원예농산물의 과잉기조가 나타나고,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이 대두됨에 따라 주산지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산지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생산조건하에서 과채류의 수요변화에 대응한 품종 및 작형 선택 등 생산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생산·유통활동의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 주산지의 출하량 점유율이 시장교섭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규모 산지가 될 수록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으로 생산 및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고, 등급화·표준화 등을 통해 품질을 높여 다른 산지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갈 수 있다.

주산지 육성은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으로는 과채류의 생산 및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주산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심이 기본 요체가 된다. 더불어 주산지를 둘러싼 지방정부, 중앙정부, 농업기술센터, 품목시험장, 농협 등의 지원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분석

연구자 : 김성용, 이계임

연구기간 : 2002. 1 ~ 2002. 11

1. 연구의 목표

이 연구는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를 다양한 지표와 모형을 가지고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농가소비와 농가소득과의 관계,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의 차이, 농가 유형별 소비지출 구조의 차이,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와 결정 요인 등에 관한 몇 가지 가설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함으로써 농가소비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 1) 농가 소비지출의 변화
 - 농가 평균소비성향의 변화
 - 농가 소비지출구조의 변화
- 2) 농가 유형별 소비지출 구조
 -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의 구조와 특징
 - 농가 유형별 소비지출구조의 비교
- 3) 농가 소비지출 분포의 불균등도 분석
 - 불균등도 지수와 불균등도의 요인 분해
 - 소비지출 분포의 불균등도 변화 추이
 - 지출항목별 불균등도의 변화 추이
 - 가구 유형별 소비지출 불균등도의 변화 추이

3. 연구결과

1) 농가 소비지출의 특징

1996~2000년 농가의 평균소비성향은 76.9%로 도시근로자 가구(72.4%), 일본 농가(78.2%)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농가 소비율의 변동 폭이 커서 불안정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농가의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나 일본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에 기인한다. 1999~2000년간 항목별 농가 소비지출액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농가 소비지출규모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구조도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소비지출을 목적별로 분류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필수재에 대한 지출보다 선택재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비내구재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내구재에 대한 지출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농가세대별 소비지출의 구조를 살펴보면 농가 소비지출 규모는 가구주의 연령과 함께 확대되고 있지만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정점으로 축소되고, 가족부양 부담이 가장 큰 40대 후반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비지출 규모가 가장 큰 농가 유형은 화훼농가이었으며, 반면 지출규모가 가장 낮은 농가 유형은 밭농사 가구로 다른 유형의 농가에 비해 특히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지대별로는 도시근교지역 농가의 지출규모가 가장 높고, 산간지역 농가의 지출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평가

농가 소비지출과 농가소득의 불균등 정도를 계산한 결과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농가소득의 불균등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하면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가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를 지출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매년 교육비, 교양오락비, 기타잡비가 상위 4위 내의 높은 불균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매년 가장 낮은 지출 불균등도를 보인 항목은 교통통신비, 광열수도비, 식료품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농가 소비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농가소비함수 추정 결과 소득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소비지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계소비성향은 0.22~0.26으로 추정되었다. 순자산 증가는 소비지출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산형태별로는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높아 소비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유동자산은 단기소비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가계성 부채와 생산성부채 모두 단기소비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특히 가계성 자금용으로 차입되는 가계성 부채가 소비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와 농업경영자금 등으로 차입되는 생산성 부채도 자산 증가를 통해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그룹별 소비함수 추정 결과 노령농가의 한계소비성향은 0.31로 비노령농가의 0.19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당기 가처분소득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잉여 적자가구의 소비함수 추정 결과 농가잉여 적자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 및 자산 증가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별로 구분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소비 행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의 한계소비성향은 지출형태별로 서비스(0.20) > 비내구재(0.023) > 내구재(0.017)의 순서이며, 지출 목적별로는 선택재(0.20) > 필수재(0.043)이었다. 순자산의 증가도 지출 형태별로는 서비스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필수재보다 선택재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농가소비 분석의 함축성

농가소득과 소비에 관한 다른 나라의 연구와 유사하게 농가소비가 농가소득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의 평균소비성향은 도시근로자 가구나 일본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나 소득안전망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농가소비함수 추정 결과 농가소비는 단기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산 및 부채 등 순자산 변동에 유의적으로 반응하므로, 농가의 신용력 제고 및 금융창구 확대, 투융자 지원 등 금융·재정 관련 정책은 단기 소비는 물론 중장기 소비수준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농가의 한계소비성향은 0.22~0.26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특정 연도에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경우 소비 증가보다 생산 및 자산 확대 등으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유동성제약은 부채상환부담, 낮은 신용평가 등으로 자유롭게 차입하지 못하여 소비의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농가 중 22~24%는 이러한 상황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농가잉여 적자가구의 경우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소비 확대 효과가 타 가구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및 금리차별화 정책 등은 소비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령가구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정책보다 소득지원 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가 그룹별로 소비 행태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정책 대상을 차별화 하여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때 농가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연구자 : 전창곤, 조명기, 정정길

연구기간 : 2002. 1 ~ 2002.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은 개혁·개방화와 함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유통정책과 관련 제도가 빠르게 변화됨으로써 농산물 유통체계도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1990년대 산지와 소비지에 다양한 종류의 시장과 유통시설이 건설되고 각종 상인이 크게 증가하여 유통체계가 다원화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농산물 도매시장(批發市場)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한편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중국 농산물의 국내시장 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향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의 농산물시장과 유통 관련 연구성과가 없어 대중국 농산물 유통, 수출 및 경쟁력 제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중국 농산물 유통·수출정책 수립을 위해서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분석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우리나라 농업생산·유통·수출 분야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농산물 유통연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중국 농업 및 유통구조의 변화

중국의 농업은 제1차5개년계획(1953) 이후 1979년 개혁개방까지 국가공업화를 위한 잉여자금, 식량, 원자재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농업생산은 식량작물 위주의 재배업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1978년 12월 개혁개방정책의 공식 채택 이후 인민공사 철폐(‘83)와 개별 농가 경영청부제(家庭承包(責任制)經營)의 산업화 성숙실행으로 농업 부문의 균형발전과 비농업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농업 생산액에서 재배업의 비중이 급감하고, 축산업, 수산업 비중 증가하였으며, 현재 농업생산성 증대로 대부분 품목에서 수급균형 유지, 곡물 등 일부 품목은 구조적 공급과잉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농업 및 유통정책의 흐름을 보면 1949년 건국 이후 공유화·국유화기(1949~1957)를 거쳐 유통구조의 국영독점화기(1958~1978), 유통구조 개혁기(1979~1985), 상업체제개혁의 탐색기(1986~1988), 治理整頓政策하 유통구조 개혁(1989~1992), 유통시장 개방과 외국투자 허용기(1992~2000)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농업 및 유통정책의 배경과 방향은 고질적인 농산물의 수급불균형 개선, 우량품종 보급과 품질향상 등 질적 변화 추구, 시장조절 기능의 확대, 지역적 생산조정, 생태환경 복원, 농촌인구의 비농업 분야 이농유도와 경영규모 확대, 농산물 시장정보체계 확립, 식품안전 및 품질표준체계 확립, 농업산업화 경영체제의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3. 중국 농산물시장 및 유통체계

건국 이후 소유관계가 공유제로 전환되고, 시장 담당주체는 국영상업기구가 전담하는 통제적 유통체제가 형성되었으며, 농산물 유통체제는 수매할당제 실행하여 농산물 유통체계의 기본 골격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체제는 생산력 수준의 저위, 1인당 농업자원 부족, 재래식 농법의존, 자급자족 영세농 구조, 영농조직의 낙후성, 상품경제의 저

위수준, 시장기능 왜곡, 상업기구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과 책임의 불명확, 책임경영 부재, 생산의욕 감소, 유통비용 증가, 소비자 불만, 국가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후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산물 공급이 대폭 증가되면서 자율적 경영, 수매가격 상향조정, 각종시장 증가, 지역 간 교역증가 현상이 나타났으며, 1996년 이후 식량생산량은 5억 톤 이상으로 공급이 수요량을 초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소득증가로 농산물 수요와 소비량이 대폭 증가되고, 상품경제 관리 및 교역방법의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시장 및 유통체계의 변화로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새로운 유통패러다임이 형성되고, 다양한 농산물시장의 형성되고 농산물품목 및 규격의 다양화와 지역 간 교역규모가 확대되었다. 즉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산물 유통업과 농산물 시장의 발전으로 현재 전환기적인 다주체, 다업종 유통구조와 다양한 시장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시장정보, 품질표준체계, 검사·검측체계 등이 빠르게 확립되고 있다.

4. 중국의 시장단계별 농산물 유통체계

산지 생산·유통체계는 '79년 이후 가격개혁과 자유시장 판매 이후 개별 농가 생산책임제(가정승포제)로 전환되면서 '83년 청과물 할당수매제도 폐지, '85년 전 품목 통일수매·할당수매제도 폐지 등 통일생산·공급체제에서 개별 농가의 자유생산·출하체제로 전환되었다. 1988년 중국 정부는 신선채소 생산·공급정책으로 菜藍子工程(부식품공급프로젝트)을 추진함으로써 농산물공급의 안정화·원활화를 위해 각지에 생산 및 유통기지 건설하고, 채소시장의 개방화와 가격정책을 개혁하였다. 산지상인의 종류에는 지방중매상인(수집반출상)과 전송판매업자 대표적이다. 지방중매상인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성출하기에 농가나 소시장을 순회하면서 농산물을 수집하여 지방도매시장 등으로 출하하고 있다. 그리고 전송판매업자는 대규모 수집반출상 역할 수행, 소시장이나 산지도매시장 도매상

에게 농산물을 구매하여 대도시 소비지 도매시장에 공급하는 상인이다.

소비지 도매유통체계의 경우 '87년 전국 10대도시 채소유통체제 개혁으로 채소유통의 규모화·시설화를 추진, 도매시장 건설과 유통질서 확립 및 상행위의 규범화를 추진하였다. 현재 전국에 약 2,000개소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으며, 도매시장의 건설·운영 주체별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제3섹터 형태 등 다양하다. 도매시장의 종류에는 크게 산지형과 소비지형, 전문도매시장형과 종합도매시장형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품목별 전문도매시장이 많이 건설·운영되고 있다. 도매시장 유통 참여자는 산지도매시장의 경우 생산자, 지방중매상인(산지수집상), 시장 내 중매인(도매상인), 소매상인 등이 혼재하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 도매시장의 경우 근교 생산자, 전송판매업자(직접판매도함), 시장 내 도매상(중매인), 소매업자 등이다.

소비지 유통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각종 시장이 난립하여 적정한 시장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효율적인 유통체계의 미확립과 적자경영 시장이 속출하고 잇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규모화와 투자주체의 다원화에도 시장건설에 대한 통일적인 표준화나 규범성, 통제성, 조절성 등이 부족하여 맹목적 건설 양상이 지배적이다. 도매시장간 시장정보의 흐름이나 교류가 폐쇄적·봉쇄적, 도매시장 적정규모, 입지, 지역성 등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도시 소매유통기구에는 집무시장(자유시장)이 가장 대표적이며, 할인점과 같은 현대적인 유통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민간 운영의 물류센터나 배송센터 등도 증가 추세이다. 集貿市場은 대도시 상설재래시장으로 계획경제 하에서는 채시장에게 기능이 이전되었으나 개혁개방 후 활성화되어 가장 중요한 소매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집무시장, 초시 등 외에 민간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 운영하는 물류센터나 배송센터 등의 건설·운영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92년 7월 5개 경제특구에 1~2개의 합자 또는 합작의 외자 소매기업 진출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여 사실상 유통시장 개방화가 시작

되었다. '95년 6월 이후 외국 유통기업(월마트, 까르푸 등)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한편 중국의 농산물 물류 실태는 수확 후 처리기술의 낙후 및 관련 시설과 장비 미흡으로 유통 중 감모, 손실, 상품성 저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생산량은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공수준은 전체적으로 평균 약 20% 내외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농산물 수송 및 표준규격화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산지의 경우 대부분의 출하 형태는 벌크 상태로 출하되고 있으며, 출하용기는 대바구니, 손수레, 마차, 3륜차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가단위의 포장규격화는 전무한 실정이며, 일부 과일류의 포장은 산지수집상이 수집후 개별 선별 및 포장으로 소비지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 소매유통체계의 급변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포장, 등급화, 선별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산지수집상 중심의 포장·등급화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5. 중국 농산물 유통체계 및 전망

중국 농산물 유통체계는 현재 유통주체 및 유통기구의 다양화, 유통경로의 다원화, 유통업종의 다양화, 상이한 유통조직과 시장의 공존 등으로 전환기적인 복잡한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농산물 유통체계는 도매시장과 집무시장 주도 유통체제 확립되면서 다양한 시장과 유통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장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정보체계, 품질표준체계, 검사체계 등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유통의 다양한 조직화와 경영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농산물시장 유통질서에 대한 규범화와 불공정·불법거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유통은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매시장망이 형성되고 통일된 유통체계로 변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는 지역 중심의 시장망과 다양하고 복잡한 유통체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공동출하 유형별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연구자 : 허길행, 김경필

연구기간 : 2002. 1 ~ 2002.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농업은 구조적으로 경영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규모의 비경제’로 전반적으로 유통 효율성이 낮으며 이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공동출하이다. 공동출하 및 공동계산 추진효과의 중요성 때문에 공동출하에 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공동출하 발전단계에 따른 유형별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공동출하의 발전단계에 따른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고 발전제약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농산물의 효율적인 공동출하 확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판매가격 제고효과

일반출하 가격에 대비한 공동계산 출하 시 판매가격 제고효과는 개략적으로 작목반 단위의 복숭아 16~18%, 조합단위 배 23%, 조합단위 포도 13%, 연합단위 배는 25%, 작목반 단위의 오이는 25%, 조합단위 참외는 16%, 작목반 단위의 상추는 100%, 조합단위 대파 33%, 당근 4%, 감자 103% 정도, 연합판매사업의 풋고추 품목은 1% 정도의 판매가격 제고 효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대략 20~30% 정도의 판매가격 제고효과가 발생하였다.

3. 유통비용 절감효과

공동계산으로 출하하는 유통비용은 일반적으로 일반 출하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계산 시의 유통비용이 일반출하에 비해 높게 나타난 사례는 충북음성 감곡농협 작목반단위 복숭아 품목이 1.8%p, 경기안성과수농협의 연합사업 배 품목 7.7%p, 강원홍천 내촌농협의 작목반단위 오이 2.1%p, 경북성주 대가농협 참외 3.1%p, 경북성주 수륜농협 작목반단위 상추 15%p, 강원연합사업 풋고추가 3.6%p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출하에 비해 공동계산 시 유통비용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례는 경북상주 외서농협 조합단위 배 1.9%p, 충남 아산원협 조합단위 포도 5.4%p, 강원 대관령원협의 조합단위 대파, 당근은 각각 8.0%p, 1.3%p, 경북김천 조마농협의 감자는 5.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농가 수취가격 제고효과

공동계산 출하시 판매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제한 농가의 실질적인 수취가격 제고 효과를 살펴보면, 과일류에서 복숭아 18.8%, 배 30.0%, 포도 25.6%, 배(연합판매)는 13.5%, 과채류 오이 34.9% 참외가 18.9%, 채소류에서 상추는 35.0%, 대파는 70.1%, 당근은 7.0%, 감자는 118.0%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풋고추(연합)는 2.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동계산 출하는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유통비용을 제한 후 농가 수취가격도 일반출하에 비해 높아 경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5. 경제외적 효과

생산자 측면에서는 판로개척 및 지속적 거래 가능, 생산기술 향상 및 반원간 결속강화, 소득안정효과, 생산품의 고품질화, 공동출하 시 절감노동력 활용 등으로 나타났다.

농협 측면에서는 조합 판매사업 실적증대, 조합의 전반적인 사업능력 향상, 판매사업 활성화 및 신용 구매사업 촉진, 조합의 정체성 확인 및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인식전환, 조합의 유통시설 활용 제고, 지역 내 자원활용 극대화 및 이중 조합간 협동력 강화 등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6. 공동계산 출하의 성공 및 실패요인

공동계산 출하의 주요 성공요인은 공동계산 추진 작목 개발 및 주산지여건 활용, 희생적이고 유능한 지도자 발굴 및 육성, 조합원의 이해와 협동심, 건실한 작목반 육성 및 지원, 참여 농가의 수익성 및 편익 제공,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 시스템 개발, 조합에 적정한 수익제공 등으로 요약된다.

공동계산 출하의 실패요인들은 지속적인 상품성 유지의 어려움, 물량 확보 및 지속적 공급의 어려움, 참여농민들 간의 불신, 지속적인 편익제공의 실패, 지도자의 열의 상실 등으로 나타났다.

7. 공동계산 확대 전략

공동계산을 확대하기 위한 공통적인 활성화 전략으로는 지역농업의 육성과 주산품목의 육성, 농협 지도사업의 강화, 농협 경영효율성 제고, 조합의 수익성 확보로 제시할 수 있다. 발전단계별 추진전략은 주산품목 발굴 및 새로운 작목 도입 단계, 작목반 중심의 공동계산 추진단계, 조합 중심의 공동계산 추진단계, 조합간 연합 및 시·도 단위의 확장단계별 전략으로 구분된다.

지역 단위 농업환경모형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연구자 : 김창길, 강창용

연구기간 : 2002. 1 ~ 2002.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지역 단위의 농업환경 여건 파악을 위한 요인추출과 관련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물질균형모형을 기초로 환경오염 부하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농업환경모형의 정교화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 단위 농업환경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역 단위 농업환경모형의 구조를 다룬 장에서는 지역 단위 농업환경모형의 기본개념과 기본구조를 제시하였고 또한 지역 단위 농업환경분석을 위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였다. 지역 단위 농업환경부하 분석을 다룬 장에서는 농업생태계 물질순환의 이론적 기초와 지역 단위 물질순환 구조 및 지역 단위 농업환경부하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다룬 장에서는 양평군과 진천군의 농업환경부하 실태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지역 단위 농업환경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으로 최적관리방안의 도입, 전 과정분석의 도입, 지역 단위 자연순환형 농업 시스템 구축, “레인보우 플랜”의 벤치마킹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모형 정교화를 위한 자료 및 지표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선행연구결과와 관련 분야 전문가, 정책담당자 및 선도농업인 등의 심층면담 및 의견수렴을 거쳐 체계화된 농업환경모형을 기초로 양평군과 진천군의 사례 분석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양평군의 경우 2000년 기준 작물의 양분요구량은 질소 1,172톤, 인산 513톤, 칼리 702톤으로 NPK 성분 총량은 2,388톤이나 화학비료 사용량은 인산 1,152톤, 인산 409톤, 칼리 519톤으로 NPK 총량은 2,080톤으로 나타났다. NPK 양분요구량에 대한 화학비료의 충족도는 87.1%로 작물의 양분요구량을 충족키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양분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NPK 양분 총량 기준으로 132.7%의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과잉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엔트로피를 증가시켜 지역 단위 환경부하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인산 성분의 과다 투입으로 논과 밭 토양 모두 인산집적 문제가 심각하여 특별한 토양 및 작물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진천군의 경우 2000년 기준 작물의 양분요구량은 질소 1,160톤, 인산 507톤, 칼리 687톤으로 NPK 성분 총량은 2,354톤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화학비료 사용량은 질소성분의 경우 작물 양분요구량의 61.9%를 초과한 1,878톤, 인산 성분은 6.4% 초과한 539톤, 칼리 성분은 8% 초과한 742톤으로 NPK 평균 34.2% 초과한 3,159톤으로 나타났다. 화학비료와 함께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양분 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과잉양분 공급도는 성분별로 질소 115.4%, 인산 110.7%, 칼리 83.7%로 NPK 성분 총량 평균으로는 10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정된 농경지에 작물의 양분요구량 수준을 초과한 과잉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이 지역의 엔트로피를 증가시켜 환경부하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밭 토양에서 인산성분의 과다 투입으로 인산집적 문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두 사례 지역 모두에서 한정된 농경지에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과도한 양분 투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역학 제1법칙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화학적 비료 투입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야 하며, 또한 가축 사육두수는 지역 단위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농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화학비료 투입이 지속되는 한 가축분뇨의 재활용과 관련 자원화 방법 외에 바이오 가스 이용 등 대체적인 방법을 도입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단위 농업자원환경의 최적관리를 위해서는 경종과 축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작물의 양분공급원을 화학비료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지역순환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는 유기농업-유기축산의 새로운 환경친화적 농업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 단위 농업환경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으로 제시된 최적관리방안(BMP)의 도입 및 운용, 전 과정분석(LCA) 제도의 도입, 지역 단위 자연순환형 농업 시스템 구축, 「레인보우 플랜」의 벤치마킹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은 향후 지역 단위 친환경농업 시스템 정착을 위해 새롭게 제시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단위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 단위 농업환경모형의 정교화와 실용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총체적 양분흐름, 화학비료의 유실량, 시설재배지의 양분 유출, 농산부산물물의 농지환원 유기물량, 비료의 작물 흡수량, 친환경농법별 환경영향 평가, 농업생태계의 에너지 흐름 파악 및 농약이용의 환경영향 평가 부문 등에 관한 주요한 파라미터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001 식품수급표

연 구 자 : 이계임, 김성용

연구기간 : 2002. 9 ~ 2002. 12

- (1) 식품공급 : 2001년 민간소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식품공급측면에서도 식용곡물 공급은 감소하고 축산물, 유지류, 과일류 등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2001년도 국민 1인 1일당 식품공급량은 아래와 같다.

곡 류	: 433.0g (전년도의 457.1g보다 5.3% 감소)
서 류	: 23.9g (전년도의 32.2g보다 25.8% 감소)
두 류	: 28.1g (전년도의 29.4g보다 4.4% 감소)
설 탕 류	: 54.7g (전년도의 48.9g보다 11.9% 증가)
채 소 류	: 451.4g (전년도의 454.6g보다 0.7% 감소)
과 실 류	: 114.8g (전년도의 111.4g보다 3.1% 증가)
육 류	: 104.6g (전년도의 102.8g보다 1.8% 증가)
우 유 류	: 148.2g (전년도의 135.0g보다 9.8% 증가)
어 패 류	: 99.1g (전년도의 84.1g보다 17.8% 증가)
유 지 류	: 46.5g (전년도의 43.6g보다 6.7% 증가)

(2) 영양공급

- (가) 에너지 : 2001년도의 총공급 에너지는 국민 1인 1일당 2,994kcal로서 전년도의 3,010kcal보다 16kcal가 감소하였다.

- 곡류로부터 1,578kcal가 공급되어 전년도의 1,665kcal보다 87kcal가 줄어들었다. 쌀로부터는 945kcal가 공급되었는데, 이는 전체 공급 에너지의 31.6%로서 전년도의 33.1%에 비해 1.5%포인트

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 동물성 식품의 공급 에너지는 1인 1일당 469kcal로서 전년도의 431kcal 보다 38kcal가 늘었으며, 전체 공급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전년도의 14.3%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하였다.
- 공급에너지의 영양소별 구성비율은 단백질 13.2%, 지방질 25.3%, 당질 61.5%이다.

(나) 단백질 : 2001년도 단백질 총공급량은 국민 1인 1일당 98.5g으로 전년도의 97.1g보다 1.4g 증가하였다. 동물성 단백질은 45.2g으로 전체 단백질의 4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공급량보다 4.0g 증가한 것이며 전체 단백질에 대한 비율은 전년도의 42.4%에 비해 3.5%포인트가 증가하였다.

(다) 지방질 : 2001년도 지방질의 총공급량은 84.0g으로서 전년도의 80.1g보다 3.9g 증가하였다. 전체 지방질 공급량 중 동물성 지방질은 26.0g으로서 전년도보다 1.9g 증가하였으며, 지방 총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0%로 전년도의 30.2%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하였다.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시행방안 연구

연구자 : 이정환, 김명환, 김정호,
박동규, 오내원, 임정빈,
서진교, 안병일

연구기간 : 2002. 3 ~ 2002. 6.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반면 연속된 풍작과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증가로 공급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재고량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재고량이 증가하면 재정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계절진폭이 축소되어 민간유통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민간유통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수확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농업인은 적정가격 보장과 정부수매 확대를 요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의 쌀 수입방식에 대해 2004년도 중에 재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관세화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개방 폭은 현재 수준보다 확대되어 쌀소득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한 소득안정화 및 구조개선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2005년까지는 재고량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 민간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급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급조정 및 재고관리, 소득안정,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쌀산업 발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수급조정 및 재고감축 정책 방향

2002~05년에 명목가격이 연간 3%까지 하락하도록 재고를 관리하여 재배면적 감소와 소비증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시장가격이 연간 3% 정도 하락할 경우 2005년도 국내가격은 관세화시 중국산 수입가격에 근접하여 쌀 수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벼 재배면적도 줄어들고, 1인당 소비량 감소율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2~05년에 발생하는 과잉공급량 약 600만석을 대북지원 등으로 특별 처분하여 재고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5년 이후에는 수급균형이 이루어져 과잉 공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쌀 생산농가 소득지원제도 확립

가격하락에 대응한 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농가경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지급단가를 2002년 수준에서 고정하여 병행하도록 한다.

소득보전직불은 이전 3개년 단위면적 당 평균조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당년 실질조수입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방식이며, 기준조수입에는 직불보전액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불액을 사전에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여 기금을 형성하도록 한다.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AMS 여유분 확보가 필요하며, AMS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수매제도는 축소되어야 한다. 수매량 축소로 인한 수확기 가격하락과 유통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쌀시장 안정 지원정책

수매량 감소에 대응하여 수탁거래 물량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위해 정부는 농가에 유통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유통업체에는 운영 자금을 수탁거래 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곡거래소를 설립하여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양곡거래소는 기준가격을 제공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

공공비축물량을 소비량의 12~15%로 설정 운영하여 국내외의 일시적 공급부족에 대응하도록 한다. 2005년경까지는 재고가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공공비축제 시행은 2005년 이후가 될 것이다.

5. 쌀산업 구조개선과 경쟁력 지원정책

경영규모가 확대되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기 임차농지, 인접 농지에 대해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금리인하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노령 경영주의 농지가 유동화되도록 경영 이양직불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로 고품질 브랜드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지별, 품종별, 완점립비율 표시제를 도입하여 고품질쌀에 대한 판단기준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RPC간 통폐합이나 사업연합을 통해 시·군 행정단위로 규모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미질 향상을 위해 규모화된 RPC를 중심으로 건조저장시설 확충과 시설현대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농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자 : 김창길, 김정호

연구기간 : 2002. 3 ~ 2002. 9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행평가 및 새로운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2002. 8. 26~9. 4,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에 대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과 관련 농업 부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요 연구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분야별 작업지침(『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분야별 작업지침』, 2001. 9)에 제시된 사항을 기초로 접근하였다.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을 다룬 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 및 의의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다룬 장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의 논의동향을 기술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국내외 예측과 전망에서는 국내외 주요 예측기관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관련된 지표의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평가에서는 농업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지표 개발, 지속가능지표에 의한 이행평가 등을 다루었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에서는 전략의 기본골격과 전략 추진단계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은 아직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UN의 「의제 21」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환경파괴적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농업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농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기초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농업생산활동”으로 규정하였다.

UN에서는 1992년 리우 선언 및 실천계획인 「의제 21」을 채택하였고, 리우 선언 이후 10년간의 성과평가 및 「의제 21」 이행 가속화를 위한 선언문 채택을 위해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가 개최(2002. 8.26~9.4)될 예정이며, 이에 대비한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정책평가 및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관해서는 1990년대 이후 UN, WTO, OECD, FAO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또한 미국은 「2002 농업법」에서 환경보전보장 프로그램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고, 일본은 1999년 “지속성이 높은 생산방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지속가능농업법)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과 이들 농가에 관련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일반 농업정책 및 친환경농업정책의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농업 부문 지속가능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이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의 기본 틀은 비전, 목표, 원칙, 실행계획 및 정책수단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음. 전략수립의 기본원칙은 통합적 접근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 수익자부담의 원칙, 공동부담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등 다섯 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10년간(2002~2010년)의 전략추진 단계와 관련 제1단계

(2002~2003)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기반을 조성하는 기초확립단계, 제2단계(2004~2007)는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실적에 대한 이행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지는 도약단계, 제3단계(2008~2010)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과평가 및 정착단계로 설정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전략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성 제고, 지속가능한 농업 정착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환경친화적 R&D, 기술보급 및 교육확대, 지속가능지표개발·농업환경 D/B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및 국민적 합의형성 등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분석, 전략적 선택, 전략 실천 등 3단계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 연구결과는 주로 전략적 분석과 전략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환경성·경제성·사회성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농업정책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선택된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프로그램(action programs)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보전직불제 시행방안 연구

연구자 : 김명환, 사공용, 윤석원,
박동규, 오내원

연구기간 : 2002. 6 ~ 2002. 9

1.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 쌀 공급과잉과 수입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쌀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단위면적당 조수입 감소의 일정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급격한 소득 하락 충격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벼 증산 효과를 유발하게 되므로 최근의 재고과잉기조 하에서는 생산중립적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으로 예정된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로 개방될 경우, 개방 초기에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수입량은 적을 것이나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량은 늘어날 것이며, 이때는 생산과 연계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하여 증산을 유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규모가 영세하거나 생산비가 높은 농가들의 퇴출을 지연하는 효과를 가진다. 정책간의 상충을 극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강화 및 영세농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수혜 대상 모집단인 벼 재배농가의 수는 2001년 당시 105만 4천호로 전체 농가 수의 77.8%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 농가들의 개별적인 정보 수집을 필요로 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설계는 많은 행정비용이 요구되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2.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방안

< 대상농지 >

-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대상농지는 (1안) 논농업 직접지불제 기준연도(1998~2000) 대상농지 중 시행연도의 벼 경작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과, (2안) 논농업 직접지불제 기준연도(1998~2000) 대상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두 대안 모두 농가당 상한 면적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규모화 역행 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1안)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연도에 벼 경작을 한 논에 한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전작이나 휴경에 대해서는 미지급하는 벼 생산연계적인 방식으로써 전작물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노는 땅에 돈 준다는 국민정서 상의 문제도 적을 것이다. 그러나 벼 식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행정비용이 수반되며, 가격하락에 대한 보전 수준이 높을수록 벼 증산을 유인하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생산조정제가 시행될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이다.
- (2안)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연도의 경작 여부나 품목 여부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생산중립적 방식이다. 이 대안은 보조금 지급에 의한 벼 증산요인이 적고 벼 식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행정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나, 전작물 시장을 왜곡하고 노는 땅에 돈 준다는 국민정서 상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상농업인 >

- 대상농업인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연도에 대상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 보전기준연도 >

-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연도에 있어서 보전기준연도는 특이치에 대한 보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전 5년의 기준조수입을 기준으로 최고·최저년도치를 제외한 3년로 하되, 시행 첫해에는 전년 기준조수입, 2~4년차에는 각각 이전 2~4년 기준조수입 평균으로 한다.

< 기준조수입 >

- 단위면적당 기준조수입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보전액을 결정하는 기초로서, (1안)은 기준가격에 기준단수를 곱한 단위면적당 판매수입 추정액, (2안)은 (1안)의 시장판매수입 추정액과 정부보조금(소득보전직불금, 논농업직불금)의 합계로 할 수 있다.
- (1안)은 가격에 물량을 곱한 시장판매 차원에서의 조수입 개념이며, (2안)은 (1안)의 시장판매 조수입에 농가가 받은 정부보조금을 더한 가계 차원에서의 조수입 개념이다. (1안)의 방식으로 소득보전된 매년의 조수입 하락 폭은 가격 하락 폭과 같아 보전비율에 따라 가격하락의 충격을 2~3년 연기시키는데 그친다. (2안)의 방식으로 소득보전된 매년의 조수입 하락 폭은 가격 하락 폭보다 작아 가격하락의 충격을 시차로 더 완화시킴으로써 농가의 적응이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것이다. (2안)은 시장판매 조수입 하락분에 보전비율 만큼의 보전액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급되었던 정부보조금(소득보전직불 및 논농업직불)에 보전비율을 곱한 액수를 또 지급하게 되어 논리상 중복 보전이 되는 문제가 있으나, 논농업 직불제 단가가 인상될 경우 소득보전직불 단가가 그에 상응하여 줄어들므로, 정치적 결정에 의한 논농업직불 단가 인상 요인을 없애는 효과를 갖는다.
- 기준가격은 농가가 벼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시기와 형태의 가격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10월~익년 1월의 신곡 전국평균 산지 조곡가

격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평균가격보다는 도별, 군별 가격이 보다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신뢰성 있는 지역별 가격통계가 미비되어 있으며, 같은 군내라도 읍면별, 마을별, 품종별로 가격 차이가 있고, 장기적인 가격 하락 폭이 지역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역별 가격통계정보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전국평균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준단수 역시 도별, 군별 단수의 통계오차가 크고 읍면별, 마을별, 품종별로 편차가 크므로 전국평균 논벼 단수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단수가 매년 기상에 따라 변동되므로 기준연도의 단수로 기준단수를 고정시키는 대안도 가능한데, 이는 가격하락 효과만을 소득보전직불 대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벼농사에 대한 재해보험제도가 없고 재해보상도 미흡한 현실에서, 기준단수를 기준연도에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매년의 기준단수를 적용하는 것이 조수입 하락에 대한 보전이라는 소득보전직불제의 목적에 더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보험제가 도입되거나 재해보상제가 강화될 경우에는 기준연도의 단수를 기준단수로 고정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보전비율 >

- ① 조수입 하락에 대한 소득보전의 정도, ② 재정소요 및 AMS 한도, ③ 재배면적(수급) 전망을 판단지표로 할 때, (1안) 보전기준연도의 정부보조금 미포함한 기준조수입 기준 시에는 보전비율을 80% 이상 가급적 높게 책정하고, (2안) 보전기준연도의 정부보조금 포함한 기준조수입 기준 시에는 보전비율 70%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급액 >

-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직불금 지급액은 대상농지면적에서 가격지지를 받은 약정수매량에 해당하는 추정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기준조수입 하락분과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자가소비분까지 제외하는 것은 농가별로 자가소비량을 조사하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자가소비분도 시장판매의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가소비분은 소득보전직불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대상농업인 부담금 >

-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가입자의 부담금이 없을 경우 대상농업인을 제한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시장판매량이 적어 직불금의 의미가 실제로 거의 없는 다수의 영세농들을 다 관리하여야 하는 행정수요가 많으므로, 부담금을 내도록 하여 행정수요를 줄이고 대상농지의 하한선 제약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예상 외로 가격하락폭이 커 소득보전직불을 위한 예산소요가 AMS를 초과하게 될 경우 농업인 부담금을 단기적으로 조정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 농업인의 부담금 수준은 (1안) 기준조수입의 일정 비율(예; 0.5~1%, 나머지 재정)을 부담하는 것과, (2안) 기준조수입 하락분의 70%까지는 기준조수입의 일정 비율(예; 0.5 ~1%)을 농업인이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농업인이 일정액을 부담할 경우 보전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안이 가능하다.

< 자원조성 및 운영방식 >

- 매년 가격 및 단수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소요예산 전망이 어려우므로 자원조성 및 운영은 일반회계보다는 정부기금 또는 민간계정(농협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 제도 개선방안

< 논농업 직접지불제 >

-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논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이므로 지급단가가 매년 조정될 명분이 약하다. 지급단가는 향후 일정 기간 현재의 수준으로 고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경영규모 2ha까지만 지급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는 규모화에 역행하며 논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대상농지 중 논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으로 편입하여 운영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밭농업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농가가 친환경영농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보다는 비료 보조를 폐지하여 농가 스스로 친환경영농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가의 일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료 보조를 일시에 폐지하기보다는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약정수매제 >

- 약정수매제도의 수확기 물량 흡수기능 및 소득 효과가 줄어들고 있지만 AMS가 약정수매제에 소진되고 있다. 농가소득 측면에서 약정수매제보다 유리한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약정수매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 2004년까지는 약정수매제를 유지하되 수매량을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만큼 감축하도록 하며, RPC 등 민간유통업체의 용자

수탁사업 활성화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 중장기적으로 AMS가 줄어들고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약정수매제는 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WTO 체제 하에서의 허용대상정책인 시가수매, 시가방출방식의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생산조정제 검토 >

- 쌀의 공급과잉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균형을 도모할 경우 가격하락폭이 커져 농가소득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며, 2004년의 쌀 재협상 시 UR 협정문 상의 관세화 유예조건인 효과적 생산제한조치(effective production restricting measures)가 필요하다(UR 농업협정문 annex 5 section A 1항 c).
-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증산 효과를 차단하고, 관세화유예를 위한 협상입지를 강화하되, 부작용이나 역기능(임차지 환수, 생산조정예산 급증, 제도 중단 어려움 등)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 생산조정제 대안으로서 (1안)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대상농지 중 휴경하는 필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유인을 차단하되, 인센티브는 소득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상향조정(예; 일반 필지 70~80%, 휴경필지 80~90%)하도록 하고, 휴경을 원칙으로 하되 경관작물·사료작물 재배는 허용한다.
- (2안)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와 연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3년간 생산조정을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생산조정 장려금 지급한다. 3년간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WTO의 허용대상정책화하며(UR 농업협정문 annex 2의 10항의 ‘시장판매용 생산에서 3년 이상 제외하는 농지 등 생산요소에 대한 구조조정보조’는 green box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쌀 재협상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중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 생산조정 장려금은 개별 농가 신청 시에는 임차료(2001년 전국평균 임차료 241만원/ha)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인 200만원/ha 내외로 하고, 마을 단위 집단화 신청 시에는 임차지 회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농작업의 효율화, 감시비용이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순수익과 임차료의 중간 수준인 300만원/ha 수준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산항 농산물 수출물류센터건설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자 : 전창곤, 허길행, 조명기,
김경필

연구기간 : 2001. 8. ~ 2002.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농업생존전략에서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증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농업 여건의 공급과잉 구조로의 전환으로 수출 증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수출규모의 영세성과 불안정성, 수출품목의 비지속성, 시장의 편중성, 수출경쟁력의 열세, 수출업체의 영세성, 수출선도기업 및 수출 브랜드 부재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개척과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고비용·저효율적인 수출물류구조를 저비용·고효율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마산시와 광양시에 농산물 수출전문 물류센터를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마산시를 포함한 경남지역과 경북 지역은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 특히 시설채소류와 과실류 등의 대규모 주산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한국 농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마산항 농산물 수출물류센터가 타 물류센터에 비해 경쟁력을 높이고, 경남지역 및 전국적인 수출농산물의 물류센터로서 선도적이고 차별적인 목적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출물류센터의 합리적인 건설방향과 건설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농산물 수출물류 실태 및 문제점

산지유통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면 수확 후 상품화시설의 부족과 상품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선별의 신뢰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개별선별, 비품질규격화, 인력선별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포장기술 및 포장재가 낙후되어 있으며, 수출농산물의 브랜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출시장에서 구매신뢰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생산자들의 수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수출업체의 영세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내외 운송실태의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물량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 저온수송체계의 미비, 신선농산물 90% 이상 부산항 집중, 저온터미널 미구축과 품질저하, 수출검사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3. 수출물류센터 컨셉 및 주요 기능

수출물류센터의 기본컨셉은 경남 및 국내 농산물 전문 수출물류기지로서 농산물 교역 및 수출물류의 직접수행 및 대행시설, 수출농산물의 종합 상품화와 브랜드화 기지, 수출농산물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운영 기지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수출의 종합정보센터 기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지 등이다.

수출물류센터의 주요 기능은 첫째, 수출농산물 종합상품화 기능이다. 이것은 구매(계약, 매취)한 농산물을 차별화된 수출농산물로 상품화하는 기능으로 품질규격화, 포장규격화, 브랜드화 등이 포함된다. 수출농산물의 상품화 유형 및 차별화는 운영 주체 직접구매 상품화 유형, 상품화와 수출업무 수탁, 수출업체·생산자의 상품화 위탁, 수출업체·생산자의 직접 상품화 유형 등이 있다.

둘째, 수출농산물의 브랜드화 기능이다. 수출농산물의 브랜드화 형태는 물류센터 공동 브랜드화, 물류센터 또는 위탁자 브랜드 선택, 수출업체 자체 브랜드화가 가능하다. 국제적 상품화와 브랜드 창출이 물류센

터의 핵심기능으로 수출물류의 내용은 철저한 품질규격화에 의한 상품 차별화이다.

셋째, 농산물 수출 및 교역창구 기능이다. 형태에는 직접 구매한 수출 농산물 수출업무 유형, 위탁에 의한 수출대행 유형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수출시장 개척 및 국제교역 컨설팅 기능으로 경남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국제교역 중개기능, 수출업체나 생산자에 대한 수출 및 시장개척 컨설팅 기능, 시장개척과 수출농산물 홍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수립 기능, 해외 주요 바이어 초청 및 교육기능 등이 있다.

넷째, 농산물 수출정보센터 기능이다. 이것은 물류센터의 국제화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정보센터 기능과 수출농산물 시장정보와 동향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분산 기능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전자상거래 기능이다.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실물 거래와 병행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시장 및 국내시장에 대한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4. 수출물류센터 사업물량 확보 및 사업전개

사업활성화와 사업성 확보는 운영 주체의 사업물량 확보능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주요 수출단지와 계약과 제휴를 통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규모화된 전문 수출단지 육성과 단지에 대한 경영 컨설팅, 유통정보, 금융기능 등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물류센터 서비스 강화와 제도적 지원과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출지원제도를 물류센터 이용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출 관련 지원을 물류센터 이용과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과 수매유통자금, 시장개척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수출물류비 지원 등과 물류센터 이용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수출물류센터 이용의 유리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부산항 이용에 대비하여 마산항 이용의 유리성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농산물 확보권역은 제1차 권

역으로 마산시 지역, 경남지역권 대상 품목 주산지를 설정하고, 제2차 권역으로는 취급 대상 품목의 경남전역의 주산지와 경북지역 주산지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업전개에 따라 타 수출물류센터와의 품목전문화를 통한 전국권으로의 확대도 필요하다.

수출물류센터의 상품화 전략방향은 품질규격화를 통한 품질인증과 브랜드화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존 수출상품과의 철저한 차별화를 통한 성공적인 브랜드화이다. 국제시장 지향적 상품화 전략으로 가격경쟁력 확보와 품질경쟁력 확보 및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수출마케팅 전략으로 차별화·브랜드화 상품의 수출시장 인지도 제고전략과 브랜드의 조기 포지셔닝 확립을 위한 목표시장 설정이 필요하다. 수출마케팅 전략에는 상품전략, 가격전략, 유통전략, 촉진전략 등이 차별화되어야 될 것이다.

단계별 사업전개 계획은 사업기간은 2001~2006년까지이며,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이 계획되어 있으며, 1단계사업의 성과에 따라 단계적 사업 확장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초기부터 원활한 물류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활성화와 사업성확보를 위한 단계별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사업의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효율적 물류계획에는 팔레트화에 의한 ULS 도입, 하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기계화 일관성원칙, 하역시설의 표준화 및 연동성 확보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신선도유지 및 일관저온유통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저장 시설이 필요하고, 구매자 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선별·소분포장 장비도 입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 시스템 확립과 검역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5. 수출물류센터 거래량 및 시설규모

마산항 수출물류센터는 당초 부지 3,000평, 건평 580평 규모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 같은 계획규모에 대한 취급가능물량은 연간취급량 9,436톤, 취급금액 30,559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마산항 수출물류센

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취급물량은 경남지역 수출 농산물(채소, 과일)의 약 40% 정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출물류센터의 필요 연간취급량은 14,174톤, 취급금액은 49,894백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수출물류센터의 적정 시설규모는 730평으로 추정되었으며, 시설형태별로는 집배송 및 상품화시설 330평, 필수지원시설 220평, 기타지원시설 180평으로 배분되었다.

6. 운영 주체 선정 및 관리방안

운영 주체는 수출물류센터의 사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운영 주체의 구비능력으로는 사업 부문 조기활성화와 사업성확보, 수출시장 조기 포지셔닝 확립, 시장개척·유지, 전문경영능력, 마케팅능력, 투자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어진다. 운영 주체의 선정은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재적 운영 주체는 생산자단체, 수출기업, 개설자 등이 있다. 설립 형태는 단독형태와 컨소시엄 형태가 가능하다. 지역 생산자단체(지역조합, 전문조합, 전문조직) 또는 수출기업이 단독 운영 주체가 되는 경우보다는 물류센터의 사업적·기능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단독보다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격평가 결과 단독주체보다는 컨소시엄 형태의 점수가 훨씬 높게 평가되었다. 컨소시엄 형태는 생산자단체(지역조합, 전문조합, 생산자조직)와 수출기업간 컨소시엄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출기업의 컨소시엄 주체로서 농산물 국영무역업체 또는 경남지역 농산물 수출전문 공기업의 참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운영 주체로서 마산지역 대표적인 생산자단체의 참여가 매우 바람직하다. 운영 주체 선정은 건설공사 이전에 완료되어 건설 과정에서 운영 주체의 의견 반영이 이루어지고 운영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출물류센터는 운영 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주체로서 개설자의 직접 운영개입은 불필요하다.

충주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 연구

연구자 : 최지현, 박석두, 이철현,
박시현, 김병률

연구기간 : 2001. 8 ~ 2002. 9

1. 연구 배경과 목적

충주시는 도농통합시로서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8%에 불과하지만 13개 읍면의 농촌 지역이 존재하여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발전이 필수적이다. 충주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주시 지역의 농업자원과 특성에 대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충주시의 의뢰를 받아 충주시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 방향 및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와 절차

이 연구는 2001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03-2010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 내용은 크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의 기본 구상, 부문별 개발계획, 추진전략 등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추진 절차는 먼저, 충주시 지역 여건과 농업의 현황·특성·변화전망 등을 조사 분석하고 마을 단위 개발수요를 조사하여 충주시 농업·농촌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다음 개발의 기본 방향과 핵심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부문별·품목별 발전 방안과 중점사업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투융자계획과 추진 체계를 제시하였다.

3. 충주시 농업·농촌의 여건과 비전 및 과제

충주시는 남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중부내륙 남북축과 동서축의 고속교통망이 만나는 십자형 교통의 중심지로서, 월악산·남한강·수안보 온천 등의 자연관광자원과 스키장·골프장·리조트 등의 관광시설을 갖춘 천혜의 관광지이기도 하다. 충주시의 농업은 청정 자연환경과 풍부한 수자원, 연간 45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수도권과 1시간대의 접근성과 십자형 고속도로망 등의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관광농업·환경농업·특화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는 관광과 농업이 연계되지 못하고, 환경농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하며, 지역 농협은 13개 읍면별로 분립되어 그 유통 기능이 저조한 한편 사과 외에는 지역브랜드의 명성을 얻은 농특산물이 없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충주시 농업의 여건과 특성 및 제약요인 외에 각 마을의 이장을 비롯한 농가의 개발수요를 조사하고,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 전망을 감안하여 충주시 농업·농촌의 발전전략과 비전을 설정하였다. 발전전략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을 위해 사과·복숭아·밤·고추 등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충주시의 얼굴상품으로 육성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환경농업·관광농업을 육성하여 충주시의 농업·농촌과 지역경제가 상호 유기적 연관 속에서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서 농지자원 관리, 생산기반 정비, 인력개발, 특화작목과 생산단지 육성, 지역 브랜드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4. 부문별 개발계획

국내외 농산물시장 전망, 충주시의 농업 여건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충주시의 주력 특화품목으로 사과와 복숭아, 얼굴상품으로 고추와 밤을 선정하였다. 그 외 한우와 양돈은 품질향상을 통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쌀과 채소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품질을 고급화하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약용누에와 약초·산채 등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충주시의 환경농업은 농가의 수와 기술 및 인식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나 국내외 환경농업의 확대 전망과 지역 간 경쟁력을 고려할 때 환경농업은 충주시의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의 한 축이다. 충주시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 도입, 환경농업단지의 육성, 토양정보의 전산화와 토양검정체계 확립, 환경농산물의 브랜드화와 판로개척 등을 과제로서 제시하고 친환경 쌀·잡곡·채소 생산단지 육성사업을 투자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충주시의 도농교류와 그린투어리즘 또한 현재는 미개발 상태라 할 수 있으나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어 발전 잠재력은 어느 지역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충주시 농업발전의 기본 방향으로서 관광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린투어리즘의 발전 배경과 경과, 목적과 추진계획 작성 절차, 유형과 구성요소, 시설·경관과 농업공원의 정비 방향 및 주체, 추진체제와 운영 주체 등에 관해 검토한 다음 투자사업으로서 농업공원 조성, 주말농장 임대사업, 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 그린투어리즘 마을 지원, 관광단지 파머즈마켓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으로서 산지유통시설의 강화, 생산자 책임제 브랜드 관리,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물류개선 등을 제시하였고, 농산물가공업체의 시설자금과 원료구입자금 지원, 농산물수출단지의 육성과 수출장려금 지원, 농업인의 정보화를 위한 PC 교육과 장비의 지원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을 제시하였다.

충주시의 논외 생산기반정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전체 농지의 51%를 차지하는 밭의 기반정비는 저조한 상태이다. 논 기반정비는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며, 밭 기반정비는 양적으로 확대하면서 정비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한다. 용수개발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계획대로 시행하고 보강개발과 수계연결 및 용수로 연장 등을 추진하며, 환경친화·다목적 기반정비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농업인력 육성의 핵심은 신규취농인력의 확보와 기존 농업인력의 경

영·기술·정보 능력 향상이다. 이를 위해 농업인 학습조직을 육성하고 농가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신규취농·귀농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선도농업인을 육성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연수인력으로 활용토록 하고, 어린이농사체험장과 여성농업인대학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분야에서는 생활편의시설의 적정입지, 환경친화적 정비사업 추진, 도시민에 열린 농촌의 정비, 마을 단위 개발역량의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다음, 마을 가꾸기시범사업,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의 정비, 건강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 여가·체육시설의 확충, 농촌대중교통망의 정비, 농촌경관조성사업 등을 투자사업으로 제시하였다.

5. 투융자계획과 추진체제

2000-2002년에 이루어진 연평균 520억원의 충주시 투자사업을 재원별·사업별로 분석·평가한 다음 이 연구에서 제시한 29개 신규 투자사업의 소요액(총 444억원)을 추산하고, 그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계획 추진기구로서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 등 추진체제를 제시하였다.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녹차산업의 발전방향

연 구 자 : 박문호, 임송수

연구기간 : 2002. 3 ~ 2002. 9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목적은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한 대책의 수립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WTO재협상 전략의 제시와 녹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발전 방안의 모색에 있다. 녹차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녹차의 생산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단순한 식품생산에 그치지 않음. 최근 주산지뿐만 아니라 재배가 가능한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녹차를 중점작물로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WTO/DDA재협상 결과에 따른 시장개방 수준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녹차의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주요 연구내용

- 국내녹차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세계 녹차산업의 동향과 전망
- WTO/DDA 농협협상의 영향 평가
-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녹차산업의 발전전략

3. 연구결과

녹차산업이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WTO 협상에서 쿼터량, 쿼터의 관세율, 수입관리 측면에서 수입녹차의 국내시장점

근을 최대한 억제하여, 국내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WTO전략은 녹차의 국제 경쟁력을 하루빨리 높이는 것임. 국내 녹차산업의 경쟁력이 커지면 우리나라 협상 입지가 자동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한층 탄력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생산자를 비롯해 산업계, 연구계, 학계, 정부 등의 총체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녹차산업을 산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경관, 문화, 관광, 지역경제 발전 등 NTCs 측면에서 재인식하고 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접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WTO 협상전략 면에서는 관세율과 관련해 최소한의 감축 결과를 가져오는 UR 방식을 주장해야 함은 물론, 녹차가 민감 품목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협상 주체인 정부가 녹차를 민감 품목으로 인식할 때에 농업협상에서 녹차산업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주장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쿼터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녹차의 국내가격과 세계가격의 큰 격차 및 국내 수입수요를 감안할 때 쿼터의 확대는 수입을 더욱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녹차의 수입관리 방식 곧 과거 수입실적에 근거한 지금의 수요자 추천방식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경직성을 높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장단점을 고려한 개선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녹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첫째, 녹차의 품종화를 통하여 다원의 성목화 기간 단축과 생육의 균일화로 다수확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비용절감차원 만이 아니라 선진적인 재배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모화 및 생산기반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차 가공의 공동화·기계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지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시장 관리 면에서 보면, 고급차 중심의 생산을 통하여

값싼 수입차를 시장에서 분리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수입관리 측면에서 농약잔류물 기준치 강화와 함께, 국산 녹차의 안전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무농약 유기재배기술의 보급을 통하여 외국산과의 차별화 대책이 요구된다. 여섯째,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소비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제품개발과 소비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끝으로, 적극적인 지자체의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녹차 산업은 전국적인 산업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산업이지만, 산지에서는 다른 어떤 작목 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각 지자체에서는 품목 차원이라기보다는 지역진흥대책 차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선인장 국제시장 조사 및 수출 확대방안

연구자 : 박현태, 박문호, 권오복,
박영구

연구기간 : 2002. 4 ~ 2002.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동안 선인장산업은 수출 지향적 발전전략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인 생산상의 특수성과 중국, 터키 등 후발국의 수출 시장 참여 등으로 현재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우리 선인장산업의 발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현행 선인장 수출체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당면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네덜란드, 미주 등 주요 수출시장을 조사하여 시장별 특성과 전망을 파악하고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추진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선인장류에는 접목선인장, 일반선인장, 다육식물 등까지 포함되나 이 연구에서는 수출의 주요 품목인 접목선인장을 중심으로 하였다. 해외시장 조사는 간접조사와 연구진의 직접조사를 병행하였다. 간접조사는 네덜란드와 미주지역을 대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현지 무역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직접조사는 네덜란드, 미주,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주요 연구내용

- 선인장산업의 현황과 교역동향
- 선인장의 수출기반 분석
- 주요 수출시장의 특성과 전망
- 선인장 수출확대 전략
- 정책건의

4. 선인장 수출상의 문제

첫째, 가격경쟁 열위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접목선인장은 생산의 특성상 노동집약적이고, 주로 도시근교 임차지 생산으로 중국, 터키 등 후발국에 비해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둘째, 10월 이후에는 수입업자가 수입을 기피함에 따라 국내 수출물량이 적체되어 농가의 경영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선인장 재배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신 품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 수준이 낮은 등 고품위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다. 넷째, 선인장의 수출시장 구조가 소수 바이어 주도로 형성되어 있어 영세한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교섭력이 취약하다. 더욱이 협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수출업체간의 공동대응 노력도 부족하다. 다섯째, 최근 운송비 절감을 위해 선박운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장기간 운송에 따른 품질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섯째, 현재의 수출 형태는 반제품 위주의 수출로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가 낮고, 연중 수출을 어렵게 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수출성과에 안주하여 해외시장 정보나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5. 선인장 수출 전망과 과제

선인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을 볼 때, 향후 발전전망이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접목선인장의 수출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만 본 정도로 추정되는데, 접목선인장의 상품적 특성 때문에 수

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한된 시장하에서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접목선인장 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가 과거 일본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나 이제는 방어적인 입장에 서 있다. 성숙기를 계속 연장하기 위한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의 선인장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경쟁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세계 화훼류의 소비시장 구조가 종전의 대량소비 시장에서 고품질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비시장 조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수출상품보다 색상의 선명도가 우수하면서 균일한 상품, 다양한 형태의 품종개발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최고의 수출상품 (premium grafted cactus)을 생산해야 한다. 둘째,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접목활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선박운송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농가의 생산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제품 위주 수출형태에서 완제품 위주 수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기존 바이어와 수출농가·업체간에 상호 이해를 넓히고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출업체간의 내실화를 위해 수출협회의 운영을 개선하고, 국제시장에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간에 연대를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여섯째, 농가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잠재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농가를 중심으로 한 수출조직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인장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제들은 선인장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어느 한 주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선인장농가, 조합, 수출업체, 국공립연구소,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각 주체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고양 화훼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방안연구

연구자 : 전창곤, 조명기, 김경필,
김원태

연구기간 : 2001. 6 ~ 2002.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양시 화훼산업은 UR 대응품목으로 육성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화훼산업의 주산지 형성과 함께 수출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수출농가 화훼산업은 재배면적 및 농가, 생산량, 생산액 등에서 전국의 약 10% 내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훼 전체 수출액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 화훼산업은 생산·유통·수출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화훼농가의 우수한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고양시의 세계 꽃박람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상징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 화훼산업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시설현대화 투자에도 불구하고 경영규모의 영세성, 생산시설의 낙후성, 규모화와 조직화의 취약성, 지역특화 산업화 및 수출상품화 기반 구축의 미흡 등으로 상대적 경쟁력 저하요인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영세·분산적인 고양시 화훼산업의 경영을 규모화·조직화·전문화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화훼산업을 경쟁력 있는 고양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고품질·고부가가치 수출상품 생산과 고효율·저비용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양 화훼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2. 고양시 화훼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고양시는 1990년 이후 UR에 대응하여 소득작목으로 화훼생산을 권장, 시설현대화 등에 힘입어 재배면적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1998년 IMF 이후 재배포기, 작목전환 등으로 재배면적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양시의 화훼생산면적은 2001년 당시 411ha로서 전국 생산면적의 6.8%, 경기도 생산면적의 3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영규모는 900평미만 농가가 전체 화훼재배농가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경영 농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경영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양시의 화훼재배농가의 71%인 860호가 임차농으로서 불안한 생산기반으로 인해 장기적인 생산계획과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수확 후 공동선별, 포장 등 상품화시설 부족과 규격화·브랜드화 등 상품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근교의 노동집약적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중국, 동남아 등 노동력이 비교적 저렴한 후발국가와의 가격경쟁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에 고품질 상품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수출업체간의 과당경쟁, 정보교환의 부재 등 수출업체 위주의 수출 구조로 농가단위의 대외교섭력이 극히 취약한 실정이며, 수출시장이 일본, 대만 등 동남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수출품목도 국화, 장미, 선인장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출시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3. 화훼단지 기능 및 사업

화훼단지 조성·운영계획 기본 방향은 기존 화훼단지 및 타 수출단지와의 차별화와 기능 특화, 화훼도시로서의 국내외적 인지도 제고 및 상징산업화 구축, 고양시 화훼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화훼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에 대한 보완 및 선도기능 유지, 화훼단지의 조기활성화 및 참여자의 사업성 확보, 고양시 화훼상품 물류체계의 획기적 개선이다.

화훼단지의 기본 컨셉은 고품질·고부가가치 수출화훼류 전문 재배단지, 고양시 화훼류 수출 전문 물류기지, 고양시 화훼류 수출 및 국내유통 종합정보센터 기지, 화훼류 전자상거래 기지, 수출물류의 보완적 기지 등이다. 이에 따라 화훼단지의 핵심기능은 선도농가 중심 수출유망 화훼류 전문재배단지 기능, 고부가가치 수출화훼류 생산기지 기능, 수출 화훼류 상품화 기능, 수출화훼류 브랜드화 기능, 화훼류 수출 및 국내외적 교역창구 기능 등이다. 그 외 공적 및 보조적 기능으로 수출업체와 생산자(단체)에 대한 선도기능, 지역 화훼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능, 고양시 산업정책과의 연계 기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 기능 등이다.

화훼단지 사업부문으로는 먼저 고품질 화훼류 재배·생산사업으로 개별 생산자간 수평적 통합 형태의 재배·생산 유형, 개별 생산자 독립적 재배·생산 유형이 있다. 다음으로 화훼류 종합 상품화(수출상품화)사업이다. 상품화사업의 유형은 개별 생산자간 수평적 통합형태 조직에 의한 공동상품화와 생산된 상품을 개별 농가가 독립적 유형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화훼수출 및 수출물류 사업부문에는 화훼단지 품목별 운영주체가 수출업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수출상품에 대해 직접 수출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와 단지 내 입주하는 수출회사가 수출업무를 전담 또는 대행하는 유형이 있다.

4. 화훼단지 품목 및 배치계획

입주품목 선정 기준은 품목별 화훼류 재배면적 및 성장추세, 고양시 품목별 재배·생산비중, 품목별 수출 실적 및 수출 동향, 고양시 화훼 재배농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화훼단지 입주품목은 선인장(접목선인장 및 일반선인장), 서양란(호접, 심비디움), 절화류(국화, 장미), 관엽류(소품, 벤자민), 분재를 선정하였다.

입주경영체의 적정규모는 기존 경영규모와 노동력, 화훼단지 입주 시 조사 대상 농가 평균 희망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입주농가의

적정 평균경영규모는 선인장 900평, 장미 1,200평, 국화 1,200평, 관엽류 1,000평, 호접란 800평, 심비디움 1,300평, 분재 500평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입주농가의 적정 경영규모 범위는 선인장 700~1,500평, 관엽류 800~1,200평, 호접란 600~900평, 심비디움 1,000~1,400평, 국화 1,000~1,500평, 장미 1,000~1,500평, 분재 300~600평으로 설정하였다.

적정 입주농가 수는 평균 선인장 18농가, 장미 11농가, 국화 11농가, 관엽 12농가, 난 12농가, 분재 6농가이다. 그리고 경영규모의 차이를 고려한 품목별 적정 입주농가 수는 선인장 10~23농가, 장미 및 국화 각각 8~13농가, 관엽류 10~15농가, 호접란 13~20농가, 심비디움 9~12농가, 분재 5~10농가이다. 품목별 평균 입주면적은 선인장 16,200평, 장미 13,200평, 국화 13,200평, 관엽 12,000평, 난 12,000평, 분재 3,000평 등 총 70농가 69,600평 이다. 그리고 단지별 입주품목은 주교동 단지에는 선인장(접목 및 일반) 및 관련시설, 원당동 단지에는 관엽(소품, 벤자민), 난(양란 : 호접란, 심비디움), 절화류(국화, 장미), 분재로 설정하였다.

5. 화훼단지 입주 및 경영계획

입주경영체(농가)는 화훼단지의 운영·사업적 특성, 입주농가의 사업영역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정 시 입주농가(단체)의 구비능력은 전문 재배기술, 경영 및 마케팅능력, 수출상품화 능력, 판매처 확보 능력, 시장 개척·유지능력, 시설 및 초기 투자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 입주농가(운영주체)의 선정방법은 먼저 언론매체, 인터넷, 구·동사무소 등을 통한 공개모집 후 화훼단지 운영특성과 관련 구체적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지표는 재배경력 및 재배면적, 수출경험 및 실적, 경영안정성 여건(자가 또는 임대비율), 경영주 연령, 초기 및 추가 투자능력, 경영주 채무구조, 조직화참여 여부, 전문경영능력, 상품화능력, 경영의 지속성 여부, 수출시장개척 능력 등을 고려해야 된다.

입주농가의 조직화는 법적으로는 화훼단지의 조성목적을 원활히 달성

하고 입주농가가 상대적으로 원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형태가 바람직하다. 품목에 따라 개별 농가의 의사에 따라 농업회사법인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상으로는 재배·생산은 개별 농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생산 후 상품화·판매·수출 등 유통전략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입주농가의 선정과 조직화는 시설설치 단계 이전에 조직하여 입주와 관련한 품목별 조직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품목에서 대부분의 조사 대상 농가는 입주농가의 영농면적 확보방법이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적정규모로 입주농가에게 임대하는 방법을 희망하고 있다. 재배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은 전액 입주농가가 일시에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과 용자를 적정비율로 조정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 시설투자비에서 경영의 지속성과 경영결과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대부분의 입주 희망농가가 자부담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초 임대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초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시는 입주자의 경영여건, 단지 내 지속적 영농의사 여부, 사업성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양과 재임대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협 유통활성화사업 컨설팅

연구자 : 조명기, 전창곤, 박문호

연구기간 : 2002. 6 ~ 2002.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협동조합의 유통활성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점에 대한 개선 방향 및 조합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회원조합이 중·장기적으로 책임 있는 경제사업 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에 4개 조합(강원도 인제군 기린농협, 황성군 청일농협, 경남 하동군 화개농협, 횡천농협)이 직면하고 있는 유통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주요 컨설팅 내용은 가공제품(두부, 산나물)에 대한 연구 및 판매방안(기린농협),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청일농협), 녹차 가공사업 마케팅 활성화 방안(화개농협), 밤 수출을 위한 상품화 방안(횡천농협)에 대한 상품성 제고 방안, 유통비용 절감 방안, 안정적인 판로확보 방안,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컨설팅이 이루어 졌다.

3. 기린농협

두부 가공사업 발전방향

- 현재 기린농협의 두부 판매사업은 큰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

는 전적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적정 판매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데 있음. 따라서 두부 가공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큰 해결방안은 판매처 확대에 있음. 이를 위해,

- 지역 이미지를 살리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포장재 개발
- 품질이 우수한 기능성 제품 개발
-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 마케팅 활동 강화
 - 단기적으로는 두부 전문 판매업체에 판매 위탁함으로써 조기에 적자경영에서 벗어남
 -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사업을 도 또는 군 단위 지역의 연합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함

□ 산나물류 유통사업 발전방향

- 자연산 산나물은 연중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등 수급조절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출하시기 조금만 조정할 수 있다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를 위해,
- 지역이미지를 살리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포장재 개발
- 출하조절을 통한 가공 및 저장상품 개발
 - 산나물류의 수급조절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산채류 병·통조림, 산채 가는소금절임류, 산채 김치류, 다양한 산채 음료, 산채 건조품, 냉동 산채류, 산채 차 및 산채 술 등의 개발이 요구됨
 - 기린농협에는 저온저장고가 있으나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산나물 채취 기간 단기간이지만 저장상품을 개발·판매한다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임

4. 청일농협

□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

- 현재 청일농협의 더덕 및 도라지 판매사업은 큰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전적으로 구매, 저장, 판매 중 발생하는 감모에 의한 것으로써 유통 중 감모를 줄이는 것이 청일농협의 유통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큰 해결 방안임. 이를 위해,
 - 원료 구매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함
 - 저온저장고의 효율적 활용
 - 가공제품의 개발
 - 1차 가공제품인 깐더덕, 깐도라지 생산 확대
 - 상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즉석 조리 가공제품 및 야외용 조미 가공제품(여행용, 안주용 등) 개발·보급 필요
 - 선물용 및 주정용으로 개발한 민속주류
 - 저온유통체계 확립
 - 상온 상태에서의 판매대 판매는 감모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하절기에는 저온 판매대 판매가 바람직함

5. 화개농협

□ 녹차가공사업 활성화 방향

- 품질고급화를 통하여 고급차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추진
 - 화개 지역은 청정지역이며, 야생차의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국내 타 지역에 비하여 품질고급화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품질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상황임
- 제품개발의 다양화
 - 최근 녹차수요는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으며, 녹차에 대한 인식도 종전의 기호품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마시기 쉬운 녹차음료의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 농협매장 중심에서 탈피하고 일반매장 개척
 - 늘어나고 있는 녹차생산량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기존 농협 시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등 일반시장에도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함
- 대리점 관리 시스템 확보 및 홍보전략 수립
 - 판매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대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6. 횡천농협

- 횡천농협 유통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관내의 생산품목은 다양하나 연중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품목이 없어 조합단독 물량으로는 시장교섭력을 제고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상품성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지 유통시설이 미흡하여 대부분이 원형 상태로 출하되고 있는 것임. 둘째, 품목별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규모화·상품화가 미흡하여 시장 포지셔닝이 확립되지 못하고,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임. 셋째, 조합원의 고령화에 따른 참여의식 결여, 낮은 상품화 인식 등으로 포전매매 비중이 높아 유통사업 규모화·공동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 조합의 밤 수출사업의 문제점은 수출 구조의 불안정성과 수출시장 확대의 제약, 수출에 대한 인식부족, 생밤 위주의 단순 수출과 낮은 채산성, 단순상품화에 의한 저부가가치화, 수출상품의 품질저하, 중개상 의존적 수출 구조, 상품화시설의 미흡과 수출물류의 문제점, 상품화 작업환경의 낙후성, 상품화물량의 소규모, 수출지원 체계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음
-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업물량의 규모화로 유통사업 공동화 추진, 군 단위 연합작목반 중심의 공동유통활동 전개, 군 단위

연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산지유통시설의 확보 등을 들 수 있음

- 밤 수출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밤 사업규모의 확대와 공동상품화 추진, 횡천농협 중심의 단계별 연합사업 추진, 밤 수출 상품화와 비용절감을 위한 기계화·자동화 상품시설 설치, 수출 밤 상품화 작업장의 환경개선, 수출 밤 가공형태 및 상품의 다양화, 상품성 향상을 위한 품종선택 및 단계적 수목갱신 등임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 구 자 : 전창곤, 조명기, 김원태

연구기간 : 2001. 7 ~ 2002.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5년 가락동도매시장이 공영도매시장으로 최초로 개장된 이후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 도매유통의 중추적 유통기구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유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관련 제도적 요인 등으로 도매시장이 상대적 고비용·저효율 유통기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경쟁적 유통기구 출현, 시장의 유통량 증가, 이용자의 선호도 변화, 소매1업체 이용기피, 거래물량 감소, 참여자 경영난 심화 현상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내부적인 물류 및 법적·제도의 문제점 노출로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도매시장의 현안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하에서 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의 효율적인 유통기구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급변하는 내외부적 유통 환경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기구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도매시장 운영체계 및 현황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운영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관리주체는 개설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공사(지방공사), 특별한 경우 농안법에 의해 규정된 공공출자법인이 시장관리자로 지정된다.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는 농산물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는 수탁판매가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도매시장 거래방법은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하는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 정가매매나 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공영도매시장, 일반법정시장 및 민영도매시장을 포함한 도매시장의 총거래물량('01)은 6,379천 톤(유사 및 공판장제외)으로 '00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시장별 물량 비중은 공영, 일반법정, 민영이 각각 92.6%, 6.9%, 0.5%를 차지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의 총거래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시장별 증가 추세 둔화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며, 시장별 평균 거래량은 약간 감소추세이다.

3. 도매시장 유통개혁

1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은 '94년 5월 농안법 파동 이후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을 발표('94.9.1)하면서 시작되었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지정도매법인의 상장수수료인하로 출하자 부담경감, 경매 투명성제고 및 출하자 최저가격 제시제 도입, 중매인제도를 중도매인 제도로 개선하여 물류의 원활화, 중매인의 도매거래 원칙, 개설자의 비상장거래 허가, 전 품목 상장거래로 거래질서 확립, 공영도매시장의 조기건설과 유사시장의 제도권내 흡수, 유통경로 다원화 대책 등이 포함되었다.

2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은 '97년 4월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의 유통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1단계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이다. 주요 개혁내용은 공영도매시장 건설·개장의 지속적 추진,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 도매시장 기록상장 근절과 상장거래 예외제도 활용, 전산경매로 거래의 공정성 제고,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 포함되었다.

3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제1단계 및 2단계 유통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98년 7월 종합적인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거래방식 다양화와 출하선택폭 확대, 도매시장 건설 완료 및 기존시장 시설보완, 고비용 구조 개선과 부조리 근절, 포장화 및 규격화 적극 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4. 도매시장의 변화전망

도매시장을 둘러싼 유통 환경 변화요인은 수요 및 소비구조의 변화, 생산 및 공급구조의 변화, 소매유통구조의 변화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 전환, 경쟁적 유통기구(종합유통센터)의 확충, 지식정보화시대와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확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도매시장과 경쟁기구간 기능 등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이 마련되고, 운영 시스템과 물류체계가 개선되면 우리나라의 생산 및 소비구조 하에서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은 일정 기간 그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산지 직구입 증대, 종합유통센터 등 경쟁기구의 확충 등으로 도매시장의 절대적 비중은 점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유통체계는 기존의 도매시장 중심체계와 대형 유통업체 및 도매물류회사(종합유통센터)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5. 도매시장 문제점과 경쟁력 강화방안

현재의 도매시장 문제점은 크게 도매시장 기능·물류상 문제점, 운영·제도상의 문제점, 도매시장 물류문제점,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문제점으로 대별된다. 대표적인 도매시장 운영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도매시장 표준하역비제도, 도매시장 비상장거래제도 도입 등에 따른 운영 주체간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점 등이 있다. 도매시장 기능의 문제점으로는 현행 도매시장 기능의 단순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그 외 운영 주체의 문제점, 거래제도의 문제

점, 시장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물류문제점 등이 도매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및 물류개선으로 도매시장의 기능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획기적 물류기능 강화로 저비용·고효율화 기반 구축, 도매시장 전산정보 네트워크화 추진, 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 도매시장 운영 주체 개선, 도매시장별 차별화와 기능 특화 등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안법이 재정비 되어야 될 것이다.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

연구자 : 성명환, 서종혁, 전창곤,
김경필, 허주녕

연구기간 : 2000. 12 ~ 2002. 12

이 연구는 농가의 소득을 유지 및 증대시키고 개방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따라서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우리나라는 최근 농산물의 차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브랜드수가 1999~2000년 기간 중 약 50%가 증가하였으나, 법적으로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브랜드 농산물은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품목별로는 쌀이 주종을 이루며, 그 외 과채류, 과실류, 채소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산자 조사에서 농산물 차별화 이후 수취가격이 최소 1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자는 약 80%, 매출액이 최소 1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자가 약 85%로 나타나 차별화전략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브랜드 명칭은 주로 지역명, 이미지, 특정 농업기술, 상품명 사용되고 있다. 지역명 브랜드로는 행정지역명, 지역 고유의 산·강 이름, 전국적인 명승지 또는 지명도나 인지도가 높은 지역명을 사용하였다. 단순히 산지를 표시하거나 출하조직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 외는 브랜드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않아 상품의 차별화나 브랜드화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브랜드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구매를 어렵게 하고 있다.

넷째,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브랜드의 인지도, 만족도, 충성도를 조

사 분석한 결과 쌀의 경우 품질관리와 브랜드명 홍보가 비교적 잘 수행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쇠고기와 사과, 오이의 브랜드는 「지역명+품목」명이 통용되고 있으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고유의 브랜드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생산자의 대부분은 생산단계에서 차별화 노력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문제는 생산과정이 아니라 수확 이후 과정에서 차별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 문제와 생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차별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만족도, 충성도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차별화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간의 인지도는 비슷하나 차별화 농산물의 만족도와 충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별화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광고 및 홍보의 방법으로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가장 잘 자극하는 홈쇼핑광고와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광고수단인 텔레비전 광고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차별화로 사용되어 온 품질인증제도를 각종 차별화 제도와 조정하여 “차별화농산물촉진법”을 수립하여 인증제도의 간소화, 과학성, 공정성,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리적 표시제도의 확대는 상품명칭으로 지역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혼동을 피할 수 있고 상품에 대한 고유한 재산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품질인증제도는 농산물의 규격화, 원산지표시제, 리콜제와 연결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한다.

차별화된 농산물의 정책지원자금은 물류비용 절감과 식품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식회, 차별화된 농산물의 현장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품질인증제도와 지리적 표시제도 등의 농산물 차별화제도에 대한 소비자 홍보

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촌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지역 내 차별화 농산물과 농촌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차별화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전통장류의 수출확대 방안 연구

연구자 : 최지현, 이계임

연구기간 : 2001. 8 ~ 2002. 8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장류의 수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출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2. 장류 수출현황과 지원제도

전통장류 수출액은 50만\$ 미만으로 장류 수출액의 4% 정도에 불과하며 업체 수는 약16개 업체이다. 일본에 전통장류를 수출하는 업체는 정부지원 업체 중에서 4개 업체에 불과하며, 그 밖에 통계상 파악되지 않지만 일본 바이어를 통한 소량 수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고추장(개량식 포함)의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1년 일본시장 비중이 26.4%까지 확대되었으며, 된장과 간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일수입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장류수출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최근 3년간 수출자금을 6개 업체가 지원 받았으며, 수출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은 연간 2~3개 품목에 대해 시행된 데 불과하다.

3. 장류 수출업체 실태분석

2002년 4~7월간 26개 업체(개량식 10개소, 전통식 16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은 주로 주문판매형식(45.5%)으로 하고 있으며 배를 이용하거나 바이어가 직접 갖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

다. 현재 수출 중인 장류는 대부분(77.8%) 내수용이 그대로 수출되고 있었다. 향후 장류 수출에 대해서는 응답한 업체의 70.8%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여 업체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53.1%)시장에 대한 고추장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가장 많았다. 일본 고추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량식 업체는 제품 개발이 가장 시급함을 지적하였으며, 전통식 업체는 한국산 장류의 홍보와 선전의 필요성을 지적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4. 한국 고추장에 대한 일본 소비자 선호

“2002 동경식품박람회”(2002년 3월 12일~13일)기간 중 일본소비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한국산 고추장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함께 먹은 요리는 불고기(구이포함)(51.1%), 비빔밥(37.1%)으로 조사되었다. 시식결과 일본소비자들은 한국산 고추장의 품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매운맛과 단맛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고추장 종류별로는 전통고추장과 개량고추장이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짠맛에 대해서는 전통고추장에 비해 개량고추장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출용으로 개발된 고추장은 일반 고추장에 비해 훨씬 당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료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 제품개발 방향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전통장류의 일본시장 수출전망

일본수출시장 여건은 간장과 된장의 경우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고추장은 최근 일본의 매운맛 선호 등 한국 음식 선호경향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망이 밝다. 수출업체 입장에서 가장 유망 품목은 개량고추장, 전통고추장 순이며, 수출능력 면에서 개량식 업체는 일부 대기업 주도로 수출확대가 가능한 반면 대부분 소규모 수공업 형태의 전통식 업체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전통고추장은 품질 우수하

나, 개량고추장 수출가격의 2~3배에 달하고 생산비 절감이 어렵기 때문에 고소득계층 대상 기능성 식품으로서 품질 차별화된 틈새시장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6. 전통고추장의 대일 수출마케팅 전략

첫째, 일본 내 전통고추장의 포지셔닝(positioning)을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을 확고히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일본 소비자의 맛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기초로 국산 고추장의 매운 맛을 추구하면서, 색, 단맛 등을 적절히 갖춰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형이면서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튜브모양 용기개발이 필요하다. 포장 형태는 일본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소포장인 100g 내외가 적절하다. 셋째, 일본 소비자는 전통 고추장에 대해 개량식보다 100g당 100엔을 추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수출가격을 개량고추장의 2배 이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수출자금 지원 확대, 고추장 홍보 확대, 포장용기 개발 및 포장시설 지원 확대, 장류 시장조사 지원이 제시되었다.

청과물 품질등급화의 경제성 평가 및 정착방안 연구

연구자 : 윤호섭, 전창곤, 이용선

연구기간 : 1999. 5 ~ 2002. 5

1. 연구목적

농산물시장 및 유통산업의 개방으로 농산물 생산자 및 유통참가자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당면과제로 대두하였고,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자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통참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표준규격화가 필요

2. 청과물 등급화의 성격과 내용

- 등급화 기준은 일반적으로 품질기준, 크기기준, 상태기준, 허용한도 등이 있으며, 이들 인자는 품종, 입지조건, 재배기술에 의해 결정됨.
- 등급화의 경제적 효과는 유통비용 절감, 가격형성 효율성 제고, 상품성 제고, 불공정거래 감소, 소비자선호 반영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청과물 등급 규격은 2001~02년에 개정됨.
- 현행 등급규격 내용은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품질요소와 무게기준 적용하여 특, 상, 보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급규격을 품종별 규격으로 세분화, 종전의 포장단위와 날개단위 규격을 포장단위 등급규격으로 일원화, 당도와 설탕기준에서 기준을 객관화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종전에 비해 날개단위의 등급규격만 없어지고, 포장단

위의 경우 그 내용은 종전과 유사함.

3. 과일류 등급화의 실태 및 문제점

- 품질등급화 실시 이유는 구매신뢰도 제고, 수취가격 제고, 공동출하, 거래처 요구, 판매용이, 물류비 절감 순임.
- 등급화 형태는 공동선별 등급화 77.6%로 공동선별이 정착단계임.
- 등급 기준은 선택, 크기, 모양, 당도, 결점, 부패과 기준 순으로 나타남.
- 등급규격은 자체적 임의규격, 거래처 요구규격, 국정규격 순으로 현행 등급화는 표준등급화가 아니고 개별적 등급화로 나타남.
- 국정규격 미준수 이유는 등급기준 객관성 결여, 비현실적 등급규격, 가격보장의 어려움, 자기상품 애착, 비용증가, 인력부족 순으로 나타남.
- 시장상인의 71.7% 재선별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선별 물량은 전체의 15%로 추정됨.
- 상인의 재선별 이유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산지의 선별불량으로, 거래처의 요구 순으로 나타남.
- 등급화의 추가비용은 대체로 총유통비용의 10~20%로 나타남.
- 동일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느끼는 품질격차 항목은 선택, 당도, 모양, 크기, 신선도 순으로 주로 주관적인 판단 항목임.
- 국정 등급규격에 대한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상품의 특성 미반영, 등급규격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급구분의 비현실성, 등급규격의 비객관성, 유통과정의 복잡화 요인 제공, 실시여건 미비 순으로 나타남.
- 등급화 정착조건은 등급화 상품과 비등급화 상품과의 가격차별화, 등급화에 대한 인센티브, 등급화상품에 대한 시장 내 우대조치, 등급규격의 현실화, 등급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 순으로 나타남.

4. 품질 등급 규격 개선 방안

- 품질등급규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여 등급 규격을 설정함.
 - 1) “특”, “상”, “보통” 등 세 등급으로 구분함.
 - 2) “상”, “특”, “보통” 순으로 비율이 높도록 설정함. “특”은 전체의 20% 이상, “상”은 40% 이상으로 하되, “특”과 “상”의 합은 80% 이상으로 함. 즉 “보통”은 20% 미만으로 함.
 - 3) 당도와 무게, 두 요소를 기준으로 설정함.
 - 4) 각 등급 구간의 경계는 되도록 변곡점(inflexion point) 등 품질특성 분포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수준을 택함.
- 후지 및 홍월(홍로) 사과는 현행 표준규격에 비해 무게 기준은 낮추고, 당도 기준은 높임. 단, 쓰가루는 현행 기준이 적당함.
- 신고 배는 무게 기준은 낮추고, 당도 기준은 현행대로 함.
- 온주 감귤의 무게 기준은 현행대로 하되, 당도 기준은 “상” 등급만 낮춤.
- 이상과 같이 품질 등급 구간을 변경하면, 대체로 “특” 및 “상” 등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보통” 비율은 낮아짐.

5. 등급화의 경제성 평가와 정착방안

- 품질이 규격화된 과일의 가격은 규격화되지 않은 과일에 비해 20~30% 정도 높게 형성됨. 한편 현재 선과 비용은 과일 도매경락 가격의 5% 내외 수준이므로 당도를 포함한 품질 등급화를 위한 비용이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크지 않을 것임. 일반 당도계를 활용할 경우 추가 비용은 크지 않지만 평균 당도로서 정확성이 떨어져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출하조직이 조직원간 품질을 파악하기 위해선 재배과정에서부터 관리하는 조직력이 요구됨. 당도를 낱개 단위로 엄격히 측정하기 위해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도입할

경우에는 1조당 당도센서가 1억원, 선별·포장라인이 1억원 정도가 소요됨. 당도 등 품질 차별화에 의해 10kg당 2,500~5,000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시설비로 총 2억원을 투자할 경우 연간 총 400~800톤 이상을 취급해야 투자의 경제성이 있음.

- 품질 등급규격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등급규격에 대한 허용 오차의 부여, ‘농산물 품질관리사’ 제도의 도입, 크기 등급의 간소화, 공동계산조직 등 품질등급 추진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품질 계측 장비의 보급 지원 등이 강구되어야 함.

폐영농자재의 발생 및 수거 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자 : 강창용, 오세익, 김창길,
황정욱, 성시현

연구기간 : 2001. 12 ~ 2002. 12

1. 연구의 목표

폐영농자재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시설농업의 확산으로 관련 시설자재의 폐기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폐영농자재의 적절한 처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여겨진다.

폐영농자재의 방치나 부적절한 처리는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작업 및 생활환경 등에 많은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그 자체 재생이 가능한 자원을 방치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연구목표는 우리나라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영농자재의 적절한 배출과 효율적인 수거, 그리고 폐영농자재 관리에 관련된 효율적인 제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과 범위

○ 주요 연구 내용

- 환경과 농업, 폐기물, 폐영농자재의 관리
- 폐영농자재의 발생과 관리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폐영농자재의 배출과 처리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폐영농자재의 수거와 재활용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 행정기관의 폐영농자재 수거관리의 문제와 개선방안
- 미국, 일본의 폐영농자재관리, 제도운영 실태와 시사점
- 효율적인 폐영농자재의 관리방안
- 연구 범위
 - 연구 대상 폐영농자재: 폐비닐, 빈(폐)농약병, 폐농기계
 - 연구 대상 폐영농자재 관련조직 : 농민, 행정기관, 한국자원재생공사, 민간재활용업자

3.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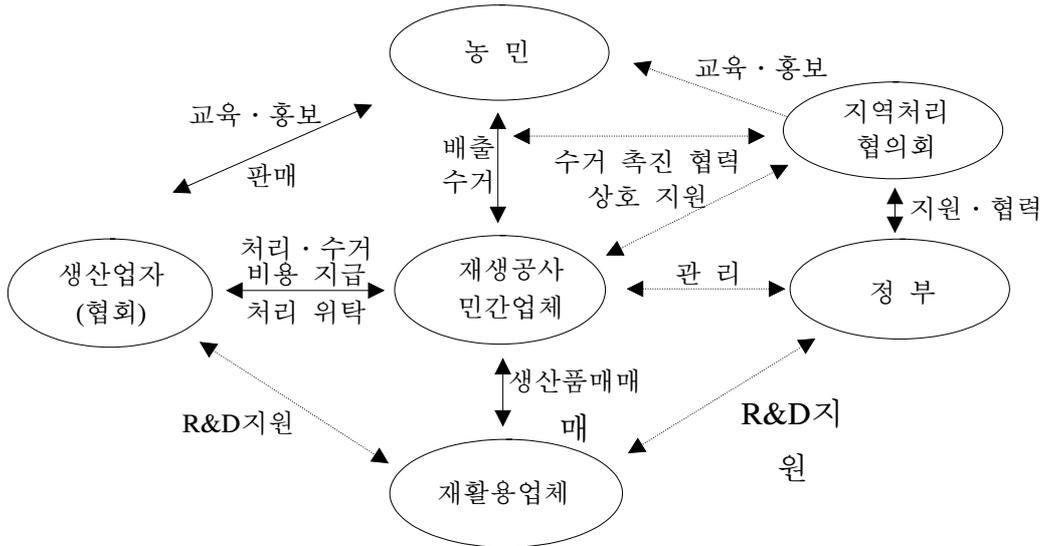
가. 효율적 관리의 기본원칙과 방향

이 연구에서는 제2차 국가 폐기물 관리기본계획상의 폐기물 관리상의 기본원칙과 부합하도록 5개의 효율적인 폐영농자재 관리 원칙을 설정하였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친환경농업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오염자부담원칙은 폐기물 관리의 공통의 원칙이다. 효율통합의 원칙은 다양한 품목의 폐영농자재를 각기 다른 제도와 정책에 의해 관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간 협력의 원칙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폐영농자재의 효율적 관리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효율적 관리의 기본 방향은 현재 OECD를 중심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확대되고 있고, 아울러 상당 품목 폐영농자재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폐영농자재의 처리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 효율적 관리 체계

1) 전체적인 관리체계



2) 관련주체간 관계

폐영농자재의 적정배출과 집합적 수집 등을 위해 지역협의회 조직을 만들어 가동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조직의 중추에는 미국과 일본에서와 같이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농협이 자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집합적인 대응조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정한 생산자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면 된다.

폐영농자재를 수거, 처리하는 업무는 현재와 같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맡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륜이나, 시설, 인력과 장비 등이 일정 수준으로 갖춰져 있고, 설립의 목적 또한 폐영농자재의 적절한 처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폐영농자재의 수거와 처리업무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민간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수행할 수도 있다. 수익성이 있고, 효율성 면에서 민간업체

가 유리하다면 많은 양의 폐영농자재의 처리는 민간업체들의 몫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체계 아래에서 정부는 관리감독에만 전력하면서 관련교육과 홍보를 시행해야한다.

3) 관련 주체별 기능과 역할

폐영농자재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농민은 CP(Clean Production) 경영 차원에서 영농자재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생산업체는 대체 가능하고 고품질 영농자재를 개발, 보급하고, 적정 영농자재 이용과 관리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한다. 지역처리협의회는 CP 생산 관련 교육 강화와 농민단체, 정부와 협력하여 영농자재의 최소이용 교육 등을 실시하고, 행정부는 CP 경영 개발과 지원, 친환경 영농자재개발 자금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거·처리업체는 최소비용 운송과 관리 방안강구 및 폐영농자재유통의 효율화 등을 강구한다.

최대 재활용을 위하여, 농민은 재이용 강화 및 재활용품을 우선 구입한다. 영농자재의 생산업체들은 재활용품 생산업체의 생산원가 절감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활용품 생산업체와의 기술개발, 제품개발 협력 등을 강화한다. 수거·처리업체는 적정처리시설과 용량의 확보, 고품질, 저가의 원료생산 강화와 적기 공급, 재활용품 업체와의 협력 등을 강화한다. 지역처리협의회는 관련조직의 재활용품 우선구매 유인 및 관련 홍보 등을 강화한다. 행정부는 재활용품 우선구매 등 수요확대를 관리한다.

농업인력육성사업 평가

연구자 : 박문호, 박광배

연구기간 : 2002. 9 ~ 2002. 12

1. 연구목적

연구 목적은 교육수요에 기초한 농업인 교육훈련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아울러 교육기관의 교육·훈련사업의 실적평가를 통하여 향후 농업인력육성계획 수립에 기초자료 제공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 위탁 교육기관의 현황 분석
- 기관평가 항목 검토
- 기관 및 프로그램 집단평가
- 교육과정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3. 연구결과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 추진 체계 면에서는 ①교육수요를 증대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내용, 시기, 교육기관 등 교육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②중·고생에 대한 농업이해를 넓히고, 후계농업인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농업·농촌체험교육을 중·고생의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교육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기술교육 시

실습장, 강사 등 분야별 교육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화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④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⑤소비자 교육의 경우 현장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나 “농소정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방법면에서는 ①교육생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 심화교육이 필요하며, 전문교육단계에서는 분야별 전문화된 컨설팅식 지도가 필요하다. ②교육수요자의 편의성 고려,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지교육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③강의식 교육보다는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교육도 유효한 교육방법으로 들 수 있다. ④각 교육기관 스스로 교육자료를 자체생산하기 힘든 만큼, 품목교육, 환경교육, 여성교육, 청소년교육 등 교육유형별로 기초교재나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내용 면에서는 ①교육수요자 특히, 기술교육의 경우 개괄적인 교육보다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②교육 분야별로는 환경농업의 경우 소비자교육의 확대가 필요하고, 과목별로는 이론교육보다는 사례발표 및 현장실습교육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③소비자 교육의 경우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현장체험교육이 필요하며, 여성농업인 교육의 경우는 기본교육과 아울러 전문기술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비 지원 면에서는 ①교육비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 성수기인 4/4분기 사업시행 전에 주관 부서와 사업부서가 교육비 집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며, 교육비 집행이 부진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익년도 사업비 배정 시 지원액을 감액 또는 중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교육프로그램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방식을 메뉴식 지원에서 프로그램 유형별로 지원 메뉴를 한정하되 사업계획에 입각하여 사업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③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시책 홍보 등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제외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에서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생의 부담을 의무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

2. 농 촌 발 전 연 구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연구자 : 오내원, 정기환, 최경환,
박대식, 허장

연구기간 : 2000. 8 ~ 2002. 2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급속한 산업사회화를 경험하여 왔다. 산업사회화란 농업·농촌 중심의 사회구조가 공업·도시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85년에 시작한 장기 조사·연구이다.

1985년을 돌이켜 보면 GNP 중 농업 비율은 11.6%, 농가인구 비율은 20.9%로서 이미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된 시점으로 농업·농촌이 격심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인구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가 취업·취학을 위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농촌 가족의 분산이 진행되면서 직계가족의 이념형이 해체되는 한편, 대다수 농가에서 영농후계자가 확보되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가구의 승계가 단절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제 측면에서 보면 자급적 소농경제를 유지해 오던 농가경제가 상업화, 전문화, 임차농화, 자본화, 겸업화하는 등 농업생산 형태가 다양한 분화를 겪고 있었다.

한편, 마을사회의 인구구조가 노령화되고 취업구조가 다양화함에 따라 주민의 경제사회적 동질성이 약화되는 한편, 도시와의 상호작용이 증대됨에 따라 마을의 생활공동체적 기능은 축소되고 점차 인근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지역사회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총 조사문항은 123개였으며, 성격에 따라 조사대상(마을, 가구, 개인)과 조사기간(기초, 매년, 매3년), 조사방법(면접, 자기기입, 관련 서류조사 등)을 구분하였다.

조사의 범위는 마을(행정리) 단위로 하고, 마을 내의 전체 가구와 개인,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마을은 대전권을 중심으로 농업지대 특성과 중심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근교, 평야, 중간, 산간의 4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2. 인구와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 주민, 특히 젊은 층의 대량 이촌은 농촌사회경제 변화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4개 마을의 인구는 조사기간 중 778명에서 절반 이하인 379명으로 줄어들어 연평균 4.74%의 감소율을 보였다(같은 기간 중 전국 면 지역 평균은 3.27%). 특히 농업 조건과 생활 여건이 불리한 산간마을은 182명에서 1/4 정도인 48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구감소와 동시에 노령화도 심하게 진행되었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조사기간 중 11.3%에서 28.8%로 늘어나 이미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반면, 10세 미만 인구는 19.9%에서 4.5%로, 10~19세는 14.8%에서 11.6%로 감소하여 기형적인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

젊은 인구의 이촌으로 농촌의 가족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먼저 호당 가구원 수는 조사기간 중 4.03명에서 2.7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가구원이 2인 이하인 가구가 25.9%에서 58.0%로 늘어났다. 이들 대부분은 노인부부, 또는 노인독신가구로서 농촌가족의 재생산구조가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 농가경제 및 농업의 변화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던 자연부락 단위의 농촌 지역에서 비농가가

늘어나면서 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기간 중 농가의 비율은 84.5%에서 59.4%로 낮아졌다. 비농가를 성격별로 보면 농업노동자가구는 줄어들고(6호에서 1호로), 비농업취업가구가 늘어났지만(11호에서 32호), 별다른 소득원이 없거나 소규모의 농지 임대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노령가구가 23호로 늘어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기간 중 농가호수는 163호에서 절반인 82호로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지 조건이 좋고 농외취업기회가 많아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진 평야마을과, 반대로 경지 조건과 생활 여건이 불리하여 이촌이 심하였던 산간 마을에서 농가호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농가 감소의 원인은 산업화·도시화이지만, 가구 단위에서는 이촌과 자녀 승계의 단절로 나타난다. 조사기간 중 노령농가의 영농 승계율은 16.9%에 불과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농가가 영농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경영주 노령화에 따라 농가호수 감소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상하였던 대로 임대차 증가, 농업의 기계화와 전문화, 농가경제의 겸업화와 소비생활의 도시화 등의 변화는 지역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규모화, 전문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업적 농가의 성장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가족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별도의 체계화된 경영기장을 하지 않는 등 가계와 영농이 분리되지 않고 있어, 가족농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4. 농촌마을 사회구조의 변화

지난 15년간 농촌 사회집단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인구감소와 노령화, 교통·통신과 매스컴, 영농기술의 발달이었다.

마을 사회집단의 수는 조사기간 중 76개에서 42개로 줄어들었는데 없어진 사회집단은 대부분 경제·사회적 이익집단이다. 특히 중요한 저축수단으로 역할을 해 온 쌀계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의 사라졌다. 대동계와 같은 지연집단과 문중계 등 혈연집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공동

체적·사회보장적 기능은 약화되는 경향이다.

한편, 이익집단은 구성원들의 공간 분포가 마을에서 면이나 군 지역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혼상사와 친목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작목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이익집단이 결성되고 있으나 제대로 정착하여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

마을 이장이 실무자 형태의 젊은 층으로 바뀌고 있고 전통적 지도력이 재생산되지 않으면서 마을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마을마다 전해 오던 칠석제, 산신제, 영등제, 시월고사 등 민속신앙 행사는 없어지거나 매우 약화되었으며, 정월대보름, 추석, 단오 등 명절 행사도 간소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라진 전통문화를 재현한다든지 젊은 층에서 풍물을 배운다든지 하는 움직임도 관찰되었다.

5. 농촌마을 공간구조의 변화

중심도시와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망과 마을 진입로가 포장되고, 일부 마을에서는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 접근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신선채소 재배가 늘고, 마을 바깥에 농외취업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관찰되었다. 도로망 개선과 함께 개인이 보유한 교통수단도 오토바이 수준을 넘어서 승용차(20대), 화물차(15대)가 늘어 40~50대의 외부 접촉은 매우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망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퇴보하여 노령층의 중심도시 접근도는 취약하다.

가구 수의 감소에 따라 마을의 주택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재건축 또는 신축이 진행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근교 마을과 중간마을에서는 조사기간 중 신축된 주택의 비율이 1/3을 넘고 있다.

산간마을을 제외한 세 마을에서는 조사기간 중 부분적으로 경지정리

가 시행되었다. 경지정리지구를 중심으로 영농의 규모화, 답리작 하우스 작물 도입 등의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는 반면, 산간마을과 근교마을에서는 한계농지의 유희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부업축산의 쇠퇴와 전문화에 따라 마을 내 주거공간과 혼재하던 축사시설이 대부분 없어지고, 마을 외곽에 대규모 축사가 신축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마을 공동생활공간을 보면, 전통적 종교 공간, 마을 상점, 공동창고, 공동우물 등은 소멸·쇠퇴하는 대신, 노인정(마을회관 겸용), 공동주차장 등은 확대되었다.

6. 의식·가치관의 변화

의식가치관은 1989, 1994, 2001년의 3차례 동일한 조사표에 의해 실시하였다. 기차범주는 권위주의, 집단주의, 가족주의, 농본주의, 민속주의의 5개로 구분하여 총 30개의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사결과 가설과 달리 시계열에 따른 가치지향의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조사대상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은 까닭도 있지만, 사회구성원의 노령화가 진행되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평야마을에서 농본주의의 약화, 산간마을에서 집단주의와 민속주의의 약화가 의미 있게 나타났다.

가치지향의 차이는 세대 간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성별·학력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외부세계와 접촉이 가장 많은 평야마을이 근대적 가치지향이 높고 산간마을이 전통적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차이는 좁혀지고 있었다.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자 : 박석두, 황의식

연구기간 : 2002. 1 ~ 2002.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50년의 농지개혁 이후 현재까지 농지제도의 기본 이념으로 설정된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는 현실에서 이미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당시 전 농지의 43.6%가 임대차농지이며, 전 농가의 72.3%가 임차농가인 것이다.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의 확대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가.

2001년 하반기부터 농지임대차 확대의 주 요인이었던 농지가격 상승이 하락으로 반전되었다. 쌀 공급 및 재고 과잉과 그로 인한 쌀값 하락 및 농업수익 하락 때문이다. 농지가격은 앞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에 의해 농산물가격과 농업수익이 하락하고, 농업인력의 노령화와 영농후계인력 부족 또한 가속화됨으로써 농지의 공급은 확대되고 수요는 감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지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대책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① 경자유전 원칙, ② 농지임대차 금지, ③ 농지가격 하락 대책, ④ 농지전용규제 등과 관련되는 실태와 쟁점을 검토하여 농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관

1950년 농지개혁에 의해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가 확립된 이래

농지소유 및 이용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천해 왔다.

첫째, 농지소유자격의 확대이다.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1990년 이후 영농조합법인과 유한·합명·합자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었으며, 2002년 10월에 비농민의 300평 미만 농지소유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었다.

둘째, 농지소유상한이 확대를 거쳐 폐지되었다. 농지소유상한 3ha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993년 10ha로 확대되었다가 1996년 폐지되었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1996년 5ha로 확대되었다가 2002년 10월 폐지되었다.

셋째, 농지임대차가 일부 허용되게 되었다. 1996년부터 농지법의 예외 조항에 의해 1995년 말까지 소유하게 된 모든 농지의 농지임대차가 허용되었으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할 수 없는 여건에 한해 임대차를 허용하게 되었다.

넷째, 농지취득자격 제한이 완화되었다. 통작거리 제한이 4km에서 8km, 20km로 확대되었다가 1996년부터 폐지되었다. 농지취득 전에 농지소재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1994년에 폐지되었다.

다섯째, 농지전용규제의 완화이다. 농지전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그것은 절차규정이나 다를 바 없으며, 금지행위를 제외하고는 허가요건을 갖추면 전용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3.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가 확대된 것은 재촌 및 부재 비농가의 소유농지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재촌 비농가의 임대농지 비중은 1990년의 29.8%에서 2000년에 50.3%로 증가한 반면 부재 비농가의 임대농지 비중은 70.1%에서 49.7%로 줄었다. 재촌 비농가는 타직업 종사와 노령화 등으로 농지를 임대하고 있으며, 부재 비농가의 임대농지 중 이농 후 계속 보유 농지의 비율은 1990년의 50.6%에서 2000년에 63.6%로 증가한 반면 상속·증여 농지의 비율은 18.8%에서 12.7%로 계속 줄

었고, 매입 농지의 비율은 25.9%에서 1999년의 12.5%로 계속 감소하다가 2000년에 17.7%로 증가하였다.

재촌 비농가든 부재 비농가든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는 사정이면서도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매입하는 경제적인 이유는 임차료 수입 외에 인플레이에 대비한 실물자산의 형성·유지와 지가 상승에 의한 지가차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편, 임차농은 농업수익성과 농업소득의 가계비충족도 저하를 만회하기 위한 경영규모 확대, 농업기계화의 진전에 의한 경작 능력 확대와 고정비용 절감, 농외요인에 의한 농지가격 상승과 고지가 등의 이유로 농지를 임차하고 있다.

농지임대차는 영농규모 확대의 유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경작규모가 큰 농가, 경영주 연령이 젊을 농가일수록 경작지 중 임차지 비중이 높았으며, 임차규모도 컸다. 그러나 임차농과 자작농을 비교하면 농가소득은 물론 농업경영의 안정성과 건전성 등 모든 면에서 자작농의 경제적 지위가 우월하다. 임차농의 경우 토지개량투자나 고정자본 투자를 하기 어렵고 장기 경영계획에 의한 안정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농가는 농지가격이 높아져서 농지를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지를 임차하게 된 것이지 매입보다 임차를 선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농지임대차 확대의 주 요인이었던 농지가격 상승이 2001년 하반기부터 하락으로 반전되었다. 쌀 공급 및 재고 과잉과 그로 인한 쌀값 하락 및 농업수익 하락 때문이다. 농지가격은 앞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에 의해 농산물가격과 농업수익이 하락하고, 농업인력의 노령화와 영농후계인력 부족 또한 가속화됨으로써 농지의 공급은 확대되고 수요는 감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가경제 측면에서 농지는 농업생산수단이자 자산보전수단이며, 신용획득기반이다. 농지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수단으로서의 농지의 가치가 높아지지만 자산수단 및 신용획득 기반으로서의 가치는 하락한다. 심할 경우 농가는 부채변제 수단을 잃고 그 결과 농업금융기관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농지가격이 장기간 하락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대책으로서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농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할 뿐 순수 농촌 지역의 농지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지 못하므로 효과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4.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 방향

영농규모 확대의 필요성, 임차농에 대한 자작농의 우월성, 그리고 새롭게 제기된 농지가격 하락 대책으로서의 효과, 투기적 농지소유와 무질서한 농지전용의 방지, 농지 보전과 농업경영의 중추로서의 전업농 육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정책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첫째, 경자유전 원칙의 유지와 비농민의 농지소유 규제
- 둘째, 농민 간 농지임대차의 허용 및 농지임대차 관리기구 설치
- 셋째, 전업농과 창업농의 농지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의 확대와 농지은행의 도입
- 넷째,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의 방지와 전용이익의 환수
- 다섯째,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

농촌마을의 리더십 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

연구자 : 허 장, 정기환

연구기간 : 2002. 1 ~ 2002.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

○ 연구의 필요성

- 급속한 이농 및 농촌 고령화로 마을 내 인구구성이 변화하고 리더십 자원이 고갈되는 등 리더십을 둘러싼 상황 변화
- 농업정책 대상으로서 마을공동체나 작목반과 같은 최소 사회경제 집단의 중요성이 증대하며 따라서 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중요성도 커짐
- 농촌개발에서 주민 본위의 사업 추진방식은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농촌 리더십의 역할과 구조를 파악하여 농촌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요인을 추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등 전·현직 공식적 지도자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

- 심층 사례연구 :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을의 발전적 변화를 이룩하고 있는 지역을 네 곳(홍성 문당리 환경농업시범마을, 장성 한마음공동체, 광양 청매실농원, 서천 아리랜드) 선정

2. 이론적 논의

- 리더십의 개념
- 지도자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 마을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정책지원을 통한 주민동원, 그리고 물리적 여건에 관련된 이론적, 경험적 문헌들을 살펴봄.
- 분석 틀의 설정
 - 지도자의 인적 자본, 마을사회 내부에서의 사회적 관계, 정책적 지원, 마을의 지리적·자연적 여건 등 네 가지를 마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

3. 주요 연구 결과

- 지도자의 역할
 - 농촌주민들은 지도자의 능력보다는 주민의식이나 마을의 입지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을 발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도자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음.
 - 새로운 농법과 기술 등에 대한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적극 수용하면서 마을 혹은 공동체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
- 마을 발전의 계기
 - 지도자의 혁신적 사고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
 -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귀중한 소득원으로 새로이 활용하는 것도 중요
 -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불안한 미래도 마을 발전의 외부적 계기로 작용
- 마을의 사회적 관계와 마을발전

- ‘마을주민과의 인간관계’와 ‘적극적인 대외활동력’은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나, 전·현직 공식적 지도자들의 대외적 관계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이 문제
- 농촌주민 사이에 남아 있는 높은 신뢰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마을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정책 지원의 효과
 - 지도자의 역할이 없거나 사회적 자본이 높지 않는 한 정책적 지원이 마을 발전의 계기와 단초를 제공하는 어려움.
 - 하지만 정책적 지원은 마을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초기 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유인책으로, 마을의 초기 가시적 성과가 널리 알려지게 되고 주민의 자부심이 고취되면서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지리, 자연적 여건
 - 농촌주민 사이에 외부적 요인에서 낙후의 원인을 찾는 운명론적 시각이 있으나, 지역의 물리적 여건은 발전을 위한 촉진 혹은 제약요인 모두가 될 수 있는 중립적 요소라고 생각됨.

4. 정책적 함의

-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경제조직의 활성화
 - 자발적으로 마을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마을 외부와의 교류 확대로 다양한 정보 취득
 - 다양한 성공사례의 벤치마킹
 - 읍·면별로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도입
- 다양한 지역개발 전문가 파견제도 도입
 - 마을의 특성과 자본을 분석하여 대안 제시
-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연구자 : 박대식, 정명채, 최경환

연구기간 : 2002. 1 ~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의 삶의 질 관련 지표의 개발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이 주로 전국 단위 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도시 위주로 설정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련 자료로는 「한국의 사회지표」, 「농촌생활지표」 등이 있으나 각각 ‘삶의 질’의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더구나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련 통계자료나 선행연구들은 여전히 양적 지표 중심일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농촌주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가구 및 개인 단위를 중심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② 앞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은 기존자료 조사, 현지 예비조사, 델파이조사 방법을 통한 전문가 의견조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의 문

제점 파악을 위한 현지 주민조사 등이다.

3.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국내 통계자료의 문제점

-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관련 전국 단위 통계자료들의 문제점으로는 ① 생활의 질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②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이 각종 자료집에 분산되어 있어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③ 삶의 주관적 측면은 주로 사회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한 번에 조사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나누어서 조사하고 있어서 조사내용이 시의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등을 들 수 있다.
-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관련 도 단위 통계로는 도별 통계연보, 도별 백서, 도별 사회지표 등이 있다. 도별 통계연보는 도내의 시 및 군들 간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시/농촌(동부/읍·면부)간 비교 지표는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별 백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다. 도별 사회지표의 경우에는 아직도 도별 사회지표를 생산하지 않는 도가 상당수 있고, 도별로 다루고 있는 지표들의 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별 사회지표들은 부문별로 지표를 균형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지표들이 누락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관련 시·군 단위 통계의 문제점으로는 ① 불필요한 지표가 많은 반면에 정말로 중요한 지표(예를 들면, 소득 관련 자료)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② 지표 분야를 균형적으로 다루지 못하며, ③ 주관적 또는 질적 지표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의 기본방향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의 기본 방향으로는 ① 농촌주민의 삶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② 도시·농촌간 또는 지역별 비교를 감안하며, ③ 농촌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④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적절하게 병용하고, ⑤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 등을 고려하였다.

5.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는 7개 부문(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의 총 8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지표는 부문별로 3~4개씩 총 27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 경제적 삶 부문의 지표는 12개로 구성되며, 대표지표로는 가구소득, 소득 만족도, 직업 만족도, 평균 근로시간이 선정되었다.
- 건강한 삶 부문의 지표는 12개로 구성되며, 대표지표로는 주관적 건강 평가, 외병일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 안전한 삶 부문의 지표는 15개로 구성되며, 대표지표로는 보고된 범죄 발생 총 건수, 전화폭력 경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 편리한 삶 부문의 지표는 11개로 구성되며, 대표지표로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 컴퓨터 사용시간, 자동차 소유 여부가 선정되었다.
- 쾌적한 삶 부문의 지표는 14개로 구성되며, 대표지표로는 상수도 보급률, 수질오염도, 하수·오수 처리 방법, 지역사회생활의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 안정된 삶 부문의 지표는 11개로 구성되며, 대표지표로는 노후준비 정도, 학력,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 즐기는 삶 부문의 지표는 13개로 구성되며, 대표지표로는 공연장·전시장 관람, 신문구독,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사회단체 참

여가 선정되었다.

6.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조사체계의 확립

-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조사하는 체계는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간이조사 방안, 총 조사 방안,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농촌생활연구소의 「농촌생활지표」 생산 시 기존의 모든 지표들에 대하여 가급적 동부와 읍·면부간의 비교분석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있다.
- 농촌주민 삶의 질 실태에 관한 간이조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중의 대표(핵심)지표를 중심으로 매년 간이조사를 하는 방안이다. 조사방법은 공신력 있는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여론조사기관을 연계하되 직접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총 조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근거로 삼아 매 5년마다 실시한다.
-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별 사회지표의 생산을 장려하고 지표 생산 시 도농 간 비교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 도 및 시·군 단위 통계자료 생산 시에 중앙 단위의 ‘삶의 질’ 관련 통계자료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도 및 시·군 단위 통계자료 중에서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지표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또는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중심으로 조사체계를 개편하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끝으로, 도 및 시·군의 통계연보 조사항목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관련 통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농업 관련 NGO의 농정참여에 관한 연구

연구자 : 김수석, 이규천, 조태희

연구기간 : 2002. 1. ~ 2002. 11

1. 연구의 목표

이 연구는 농업 관련 NGO 및 민간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의 농정 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민간단체 농정 참여의 현 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민간단체 정책참여 의의를 밝혀 민관협력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NGO를 포함한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가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2. 연구방법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대상이 된 28개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조사결과와 서울시 소재 58개 NGO에 대한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에 대한 평가는 민간단체의 실무자들과 농정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3. 민간단체의 농정참여 실태

객관적 현황에 있어서는 농업 관련 민간단체가 서울시 NGO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었다. 단체당 회원 수, 상근활동가 수, 상근활동가의 보수 수준, 예산규모 등에 있어서 농업 관련 민간단체가 서울시 NGO보다 나은 조건에 있었다.

정책참여의 방법과 유형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정책 참여 유형이 다양해지고, 시위나 항의 등의 (비)합법적 참여에서 위원회나 협의회 참여 등의 공식적인 참여로 참여유형의 중점이 이동되고 있었다. 그리고 형식적 참여에서 실질적인 참여로 참여 형태의 변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는 아직 형식적 참여가 주된 참여방식이 되는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다.

4. 기존의 농정참여에 대한 평가

평가내용을 보면, 먼저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농업 관련 민간단체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는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로 인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정책당국과 민간단체 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공통적인 평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과 같은 기본계획 수립 분야에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단체 농정 참여의 단점과 농정 참여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두 평가집단이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여 주었다.

기존의 농정 참여에 대한 농업 관련 민간단체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주로 참여활동을 통해 영농현장의 의견이나 민간단체 공동의 의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참여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있었다. 반면에 정책당국에서는 민간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농업계 전체의 이해나 영농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단체들의 개별이해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민간단체들의 개별이해 관철을 농정담당 공무원들은 민간단체의 집단이기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5. 농정 참여의 개선방안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민간 부문의 농정 참여 기본 방향은 농정당국이 농업 관련 NGO를 정책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여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서 협력사업의 추진방법은 정책의 사안별로 다르게 하되, 사안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나 대국민 홍보사업은 NGO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무엇보다 민간단체와 농정당국 간에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상호 간에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수혜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관계설정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고 실질화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 참여와 민관협력사업의 추진 및 농정업무의 수·위탁 등의 형태로 실질적이고 다양한 농정 참여를 추진하여야 한다. 농정업무의 민영화 대상은 NGO가 운동의 일환으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 및 국민교육 분야와, 서비스의 상업화가 가능해 정부의 보조 없이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가 되는데, 환경농업교육과 귀농교육, 녹색관광과 농촌 어머니, 영농 컨설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건불리지역 발농업 직접지불제 세부시행방안 연구

연구자 : 오내원, 김태곤, 박시현,
장우환

연구기간 : 2001. 10 ~ 2002. 5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영농 조건과 생활 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조건불리지역이라 할 수 있는 중산간·도서지역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지표와 기준을 검토한 후 시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대상 농업, 농업인의 수급 조건, 지급 단가, 지급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지역에서 도상 연습과정을 통해 제도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3. 연구 결과

제2장에서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건불리지역의 농업은 축소의 길을 걷고 있다. 열악한 자연조건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에 더하여 정부 정책에서도 소외되어 왔기 때문이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 경사지의 경작 포기, 낮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등이 이 지역이 당면한 현실이다. 조건불리지역은

기반산업인 농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농업생산의 축소는 물론 이 지역 농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가치도 함께 소멸할 가능성이 많다. 나아가 이 지역의 과도한 축소는 지역불균형의 확대와 도시 문제의 악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조건불리지역 농업을 지원함으로써 다원적 기능을 제고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제3장에서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여러 지원 수단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조건불리지역의 낙후된 실태를 감안할 때 현재의 상태에서 지역개발투자나 농업투자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므로 우선 직접소득보조를 실시하여 이 지역 농업의 급속한 쇠퇴를 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다음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EU와 일본의 관련 직불제와 최근 국내의 논의동향을 검토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직접직불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불리지역의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적극 평가하고, 농업생산 활동이 다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5장에서는 대상지 구분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검토하여 시안을 제시하였다. 조건불리지역은 읍·면을 단위로 지정하되 직불제의 대상은 경지구역 또는 필지 단위로 할 것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 조건불리지역의 특성을 경지 조건이 열악하여 농업생산성이 낮다는 점, 경제사회 여건이 불리하여 인구유출이 심하다는 점으로 보고 대상 읍·면의 구분 지표로 인구감소율과 인구밀도, 경지율, 기반정비율을 선택하였다. 이를 적용한 결과 전국의 총 1,416개 읍·면 중 448개(31.6%)가 조건불리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제6장에서는 구체적인 직불제 시행방안을 검토하였다. 지원 대상은 해당 농지의 경작자로 하였으며 농지 소재 읍·면 또는 연접 읍·면·

동에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직불액은 경지면적에 비례하되 농지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ha당 40~60만원을 지급단가로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와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는 농가와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의무사항은 성실경작과 농지관리를 조건으로 하고, 마을 단위로 토양보전, 친환경농업 실천, 농촌경관 유지,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공동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지원금의 30% 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제시하였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므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재정을 조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농가 소득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지방의 이해가 걸린 측면이 있고, 또 구체적인 대상지의 선정이나 지원조건의 설정 등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소요 재정은 국가가 80%, 지자체가 20% 정도를 부담하되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수립 연구

연구자 : 허 장, 정기환, 송미령,
김홍상

연구기간 : 2001. 7 ~ 2002.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

- 연구의 배경
 -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시화호의 기능과 역할을 재평가하고 보전과 개발이 통합될 수 있는 장기적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이에 따라 「시화지구 정책협의회」주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실시
- 연구의 목적
 - 총괄적으로 시화호 및 주변지역의 여건과 현황분석을 통하여 잠재력과 제약조건을 도출하고 친환경적, 효율적인 국토자원의 활용 도모
 - 농업부문에서는 시화지구 간석농지의 특성과 주변여건 분석에 기초한 다양한 농업적 기능들을 발굴하고 타 부문 계획 간의 유기적 연계,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을 도출함.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기준연도는 2000년, 목표연도는 2020년
 - 문헌 조사, 유사지구 조사, 전문가 자문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협의회, 해외 출장조사 등 실시

2. 시화지구 간척농지 조성사업 기존 계획 검토

- 매립면적 4,396ha(간척지 3,636ha, 담수호 760ha)
- 주요 시설은 양수장, 승수로, 방수제, 배수로, 용수로, 도수로 등
- 조성농지는 제염완료시기까지 답작 위주의 기계화영농, 제염완료 이후에는 시설농업과 도시근교형 복합농업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시범시험단지, 관광농업단지, 농어촌휴양단지 조성
- 사업효과(농업기반공사 추정)
 - 농산물 증산효과 : 쌀 13,135톤, 기타작물 20,498톤, 화훼 84,972천 본
 - 농가인구 증가효과 : 3,636ha 조성에 따른 유발인구 약 2,200명~8,400명

3. 시화지구의 SWOT

- 강점
 - 대규모 배후인구를 시장으로 포섭하고 있으며 교통여건 양호
 - 문화유적, 철새도래지, 수변공간 등 독특한 관광자원을 보유
- 약점
 - 탄도호나 우정호에 대한 수량 문제와 수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연약지반, 환경민감성 등으로 품종 선택 제한, 기반시설 투입비 증대
- 위협
 - 쌀 재고량 누적 등으로 농지확대 및 간척미 생산의 의미가 반감
- 기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고
 - 통일 여건이 호전되는 경우 쌀 생산 증대가 불가피
 -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농산업의 생명산업으로의 확대 및 변화

4. 시화지구 농업 부문 계획의 기본방향

- ‘친환경성’, ‘도시근교성’, ‘농업관광으로의 연계성’ 등으로 설정

5. 주요 도입기능

- 벼 재배 기계화 영농단지
 - 광범한 평탄지의 우량농지로 대규모 기계화영농과 제염에 유리
 - 저농약농산물 이상의 인증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농을 목표
- 미곡종합처리장(RPC)
 - 2,800ha가 넘는 넓은 들녘은 원료 벼 확보에 효율적
 - 하루 가공능력 20톤, 건조·저장능력 2천 톤 이상의 대형 시설로 조성
- 환경농업시범시험단지
 - 농지의 친환경적 활용 가능성과 시화지구의 친환경적 위상 전시
 - 농법별 시범포와 연구·교육·홍보·전시 등 종합연구홍보관 설치
- 생태마을 및 퍼머컬처 디자인 교육장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적 생태마을의 결합을 위한 현장 실험
 - 시화지구 전업농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생태적 영농 원리 등 교육
- 수변생태공원
 - 수도권 인근에 대규모 자연형 하천, 수생식물원, 수생곤충원, 조류 관찰공간을 조성
- 자생 물풀 시험재배장
 - 자생 물풀이 가진 오염정화력을 실증하고 대량재배를 통하여 광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
 - 수초저류지를 활용하여 재배시험장 조성하고, 자생 물풀의 종류, 오염정화 기능 등을 소개하는 교육시설 설치
- 농업주제공원
 - 시화지구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업관광자원으로 활용

- 다양한 작목별 · 이용방식별 체험장, 농업인 직거래 장터 조성, 농업박물관과 농업부문별 전시장 설치, 운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자 : 송미령, 박시현, 허 장,
성주인

연구기간 : 2001. 11 ~ 2002. 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

○ 연구의 배경

- 전력산업 부문의 구조 개편에 따라 2000년 12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 2001년 2월 그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지역지원사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변화함.
- 여건 변화의 핵심은 발전사업 부문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이와 함께 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출처, 규모, 주체 등 변화되는 것임.

○ 연구의 목적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역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모색함.
 -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공적·사적 부분의 역할 분담 방향 정립
 - 지역지원사업 추진의 쟁점 도출과 개선방안 모색
 - 지역지원사업의 운영 성과 및 달성도를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는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
 - 방폐시설 수용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지원제도 구상

○ 연구의 방법

- 문헌 조사, 주민 조사, 담당 공무원 조사, 발전사업자 조사, 관련 기관 연구협의회, 국내외 출장조사 등 실시

2. 지역지원제도 추진 방향 및 쟁점별 개선 방안

- 공적·사적 부분의 역할 분담
 - 정부가 주체로서 지역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공적 성격이 약한 지역지원사업은 발전사업자의 자율적 지원사업으로 전환
- 지역지원사업 대상지역의 범위는 현행 유지
- 지역지원사업 종류는 조정
 - 소득지원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하나로 통합
 - 육성사업을 기본지원사업에서 분리
 -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확대
 - 사회복지사업 및 이주민 대책사업 신설
 -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사업은 축소 내지 점진적 폐지
- 지역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체계의 개선
 - 지역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 다양화 및 전문성 제고
 - 중·장기 사업계획 추진 장려
 - 특별지원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 확대
 - 발전사업자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지원사업 실시
- 평가·환류 시스템의 도입
 - 전체 사업 혹은 일부 전략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사업시행자와 중앙위원회에 의한 2단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성과 경제성 추구
 - 계획 및 과정 평가, 성과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12개 항목 세부 지표에 의해 5개 등급으로 1,000점 만점 평가
 - 우수지역을 대상으로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 제공
- 발전소 및 발전원별 형평성
 - 소재지계수를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2단계로 단순화
 - 수력발전소 주변지역 특수성을 감안, 장기적으로 적합한 산정 기

준을 별도 마련

- 홍보사업의 효과적 추진
 - 단기적으로 홍보사업은 주변지역 홍보와 대국민 홍보로 나누어 추진하는 현행 체제 유지
 - 중장기적으로 관련 사업자가 사업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비율을 기금에서 지원

3. 방폐시설 수용성 제고 방안

- 방폐시설의 특수성과 입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지원법 내에 별도 장으로 독립 운영하는 법률체계 마련
- 방폐시설에 한해 기존 지원법상 주변지역 범위를 자치단체 전체로 확대
- 주민이나 지자체에 직접 지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
 - 지역지원사업의 종류 전환이나 기금 형식으로 출연
- 실질적 조기지원 실현
 - 주민에 대한 지역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점, 지자체 장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을 방폐시설 건설준비기간, 즉,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가산지원 규모 확대
 - 방폐시설의 경우 현행 가산금 비율 0.5%를 상향 조정
- 범정부방폐시설입지추진위원회(가칭) 설치 및 협력 규정을 법률에 명시

소래지구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개발계획

연구자 : 박시현, 송미령, 성주인,
정승신

연구기간 : 2002.2 ~ 2002. 8

1. 연구의 목적

행자부의 아름마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 마을의 마을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떡과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 밖의 잠재 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떡과 관련한 시설의 정비(공동작업장, 체험장, 판매장 등), 떡의 생산 및 판매 방식의 조정, 떡을 기반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 기타 농촌관광마을로서의 물리적인 기반 정비 및 토지이용계획 등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마을계획에서는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① 사업 항목 설정
- ② 필요 시설물 설정
- ③ 시설물 입지 선정
- ④ 기본도면(배치도, 평면도), 실시설계 전의 과업지시 사항
- ⑤ 시설 설치와 관련된 공동 떡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 ⑥ 마을의 홍보 및 지속적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

송천마을은 전체 42가구 중 33가구가 농가이고 9가구가 비농가이다. 인구는 127명이다. 마을의 주요 농산물로는 청정 무공해 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생산된 쌀은 총 165가마(13,200kg)가 떡 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는 자가소비와 정부수매를 하고 있어 다른 마을에 비해 쌀의 판매에는 문제가 없는 편이다. 이 마을의 특산품인 떡은 20년 전부터 관광객으로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한 것이 매스컴 등에 알려지면서 현재와 같이 마을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 11농가 공동으로 전통적 방법으로 떡 빚기를 하며 연간 떡 판매 실적은 공동조직이 약 1억 7,600만원 정도이고 개인은 3,500만원 정도이다.

이러한 특색을 가지는 마을의 발전 방향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마을 내 농림업 자원을 가공, 관광 등과 결부시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반 조성, 개발로 인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마을 공동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사업은 편리한 생활 기반 갖추기 일환으로 상수도과 하수처리, 쓰레기분리수집시설 설치를 계획하였다. 또한 매력적인 마을 주변 가꾸기사업으로 마을을 지나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마을 입구에 썸지공원을 조성하고, 마을 입구로부터 마을거점시설까지 이어지는 마을의 중요 지점마다 통일감을 주면서도 다양한 마을 안내판을 정비하며, 마을 입구로부터 마을거점시설로 조성될 “떡 빚는 집”까지 이어지는 마을 안길을 자동차나 보행자 통행에 최대한 쾌적하게 정비하며, 마을을 찾은 사람들이 마을 내에서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논둑 산책로 조성하고, 마을 앞 개울가에 조성된 마을 관리 휴양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송천리의 민속 떡을 주민이 공동으로 만들고 판매하는 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조화로운 마을 경관 가꾸기 차원에서 마을의 두드러지는 경관적 요소(산, 농경지)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증대 및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마을 및 떡 브랜드 자산관리방안
과, 떡 판매 강화방안, 마을 홈페이지 구축 방안, 마을 이벤트 개최 등
을 제안하였다.

구병리 아릅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개발계획

연구자 : 송미령, 정기환, 박준기,
성주인, 정승신연

연구기간 : 2002. 2 ~ 2002.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

○ 연구의 배경

- 2001년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아릅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시작
 - 이 시범사업은 그간의 농촌개발 지원정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이 약화되고 농촌다운 환경을 도외시한 획일적 개발로 우리 농촌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
- 충청북도에서는 보은군 내속리면 구병리가 아릅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
- 구병리의 특색과 강점을 살리면서 아릅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무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 가꾸기 계획 수립 필요

○ 연구의 목적

- 마을의 특색과 강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을 가꾸기 계획 수립
- 이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실행하고, 주민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체계 형성

○ 연구의 방법

- 문헌 조사, 주민 조사, 방문자 조사, 관련 전문가 협의회 등 실시

2. 마을 현황 분석에 따른 비전 및 개발 방향 도출

- 자연환경은 좋은 편이나 인구 감소 및 노령화 심각
- 농업소득은 열악하고 농외소득도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태
- 생활환경 측면에서 상하수도, 도로, 커뮤니티 시설 등 정비 필요
- 주민의 개발수요는 생태·녹색관광형 마을 가꾸기
-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동시에 마을을 찾는 사람들을 머물게 할 만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유인을 제공하고 외부에 마을을 마케팅 하여 농외소득 창출 및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
 - 주민의 생활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개발
 - 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개발
 - 현재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친환경적 개발
 - 주민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발

3. 주요 사업 계획

- 생활환경 쾌적하게 만들기
 - 주택 정비
 - 도로 정비
 - 상·하수 정비
 - 공중화장실 설치
- 마을매력, 특색 있게 살리기
 - 마을 입구 송림원 조성
 - 송로주 시음장 조성
 - 생태연못 조성
 - 마을거점시설인 건강촌 조성
 - 약수터 정비
 - 마을 순회 생태탐방로 조성
 - 등산로 재정비

- 마을경관, 아름답게 가꾸기
 - 돌담길 조성
 - 마을 조경 식재
 - 메밀꽃단지 조성
- 마을소득, 다양하게 올리기
 - 경관농업 작물 식재
 - 산지 가공 및 판매 여건 조성
 - 이벤트 작물 식재
 - 영농체험장 조성

4. 마을 마케팅 계획

- 마을 상징 로고 제작 및 안내체계 구축
- 마을 이벤트 구상 및 개최
- 마을 홈페이지 작성 및 운영

5. 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방안

- 단계별 사업비 투자
 - 마을거점시설 조성 분야의 사업을 최우선 추진
- 주민 주도 관리 및 운영
 - 주민의 역할을 담은 마을 조례 작성
 - 마을 조직별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을 분담하여 추진
 - 마을 일에 필요한 경비의 주민 부담
- 행정·민간과의 파트너십
 - 보은군,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
 - 보은군 농협의 조력 및 현행 마을 자문단의 지속적 운영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

연구자 : 박대식, 정명채, 최경환,
채혜운

연구기간 : 2002. 4 ~ 2002.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영농 형태가 벼농사 중심에서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채소, 화훼, 과수 등으로 확대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농업·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농림부는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농업인 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지위 향상을 촉진하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복지 실태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크게 부족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① 가구 및 개인 단위를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복지지표체계를 마련하고, ②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선행연구 및 기존 자료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델파이조사, 그리고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지 주민조사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3.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는 ① 여성농업인의 삶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② 도시·농촌 간 또는 지역별 비교를 감안하며, ③ 일반여성과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며, ④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적절하게 병용하고, ⑥ 성별 비교분석을 감안하며, ⑦ 적절한 시간 내에서 현실적으로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 등을 고려하였다.

4.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체계

-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체계는 7개 복지부문(경제활동, 교육, 보건·사회복지, 생활환경, 문화·정보, 정치·사회 참여, 안전)의 총 9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지표는 복지 부문별로 4~5개씩 총 31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 경제활동 부문의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는 15개로 구성되며, 대표지표로는 가구소득, 가구소득 중 여성농업인의 기여정도,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 평균 근로시간, 가사분담 정도가 선정되었다.
- 교육 부문의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로는 10개가 선정되었으며, 대표지표로는 학력, 영농교육 수혜 정도, 자기계발을 위한 사회교육 참여시간, 국가기술 자격증 수가 선정되었다.
- 보건·사회복지 부문의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로는 15개가 선정되었으며, 대표지표로는 건강검진, 농부증, 여성복지시설 이용 경험, 연금 가입 유무가 선정되었다.
- 생활환경 부문의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로는 15개가 선정되었으며, 대표지표로는 수세식 화장실 구비 여부, 목욕시설 구비 여부,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도, 친환경농업의 인지 및 실천, 자동차 운전면허가 선정되었다.

- 문화·정보 부문의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로는 15개가 선정되었으며, 대표지표로는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여가시간 유무, 휴대전화 소유 여부, 컴퓨터 사용시간, 시·청취 가능한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채널 수가 선정되었다.
- 정치·사회 참여 부문의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로는 10개가 선정되었으며, 대표지표로는 여성의 선거투표율,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 여성농업인단체 참여 여부, 시·군의회 의원 여성농업인 의원 비율이 선정되었다.
- 안전 부문의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로는 10개가 선정되었으며, 대표지표로는 도난 경험, 전화폭력 경험, 가정폭력 경험, 농기계·농약 중독 사고가 선정되었다.

5. 여성농업인 복지 실태 조사체계의 확립

- 여성농업인 복지 실태를 조사·연구하는 체계는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간이조사 방안, 총 조사 방안 및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의 개선 방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통계연보」,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농촌생활연구소의 「농촌생활지표」생산 시 여성농업인을 별도의 비교 범주로 설정하여 기존의 모든 지표들에 대하여 추가분석을 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기존 통계자료집에서 추가 범주화, 재분석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없는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들은 별도로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여성개발원, 농촌생활연구소, 통계청 등에 대한 조사연구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 여성농업인 복지 실태에 관한 간이조사 방안은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체계 중의 대표(핵심)지표를 중심으로 매년 간이조사를 하는 방안이다. 조사방법은 공신력 있는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여론조사기

관을 연계하되 직접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여성농업인 복지 실태에 관한 총 조사 방안은 여성농업인의 복지 지표체계를 근거로 삼아 5년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총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도별 사회지표(혹은 통계연보) 또는 시·군별 통계연보 생산 시에 성 인지적 관점을 적극 도입하여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를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앙 단위의 관련 통계자료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지표를 없애고, 모든 복지지표생산에 있어서 가급적 성별 비교분석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관련 통계법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6. 기타

성 인지적 통계는 남녀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국가정책의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기초가 된다.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 인지적 통계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로서 개별 수준의 모든 통계를 성별로 발표할 것을 명기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핀란드 등에서는 성 인지적 통계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부서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성 인지적 통계생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좋을 때, 여성농업인의 복지지표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방안 연구

연구자 : 정기환, 최경환

연구기간 : 2002.1 ~ 2002.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력을 생산성 높은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와 같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개발 내용

현재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교육 과정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여성농업인들의 현행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의 교육 수요를 조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기관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만족도와 새로운 교육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셋째,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전문인력화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고, 넷째,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여성농업인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별로 그 조직의 특성에 따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대체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목표가 불분명하고, 전문성이 미흡하며, 기초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전문인력화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고, 교육 과정이 유사하고 중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은 여성농업인이 소속된 농촌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로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추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첫째,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 여성농업인이 전문가로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포괄적인 전문 농업인, 또는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라는 목표에서 구체성을 지닌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목표가 전환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이 각각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세분화, 전문화되어야 하고 교육 과정을 기관별로 특성화하고 단계별로 기초, 중급, 고급 과정을 개설하여 전체 과정을 이수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교육을 위한 체계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교육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 전문 인력과 교육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을 보다 구체성 있게 전문화하고, 전국의 여성농업인들이 동일한 교육 과정에 참여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교육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표준화해야 한다.

셋째,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과는 총론적 수준에서 벗어나 핵심기술 또는 주제별로 세분화하여 전문적이고도 구체적인 교과목으로 재편성되어 현실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교육생의 학업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문 과정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고 전문 분야를 수료하고 전문 분야의 핵심기술을 습득했을 경우, 전문가 자격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한다.

여섯째,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교육에 필요한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교육생의 학사관리, 표준 교과 관리, 교육 협력기관 관리 등과 같은 교육 관리 업무를 담당할 중앙 단위 교육 관리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단법인체로 가칭 「여성농업인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성농업인 대학」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기금을 출연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출연하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교육을 관리할 중앙 단위 기구로 「여성농업인 대학」을 설립할 경우 전국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사회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여성농업인대학」의 설립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평생교육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해 정부가 전액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제안하였다.

국가가 「가칭」 여성농업인대학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면 36.5%의 여성농업인은 적극 참여 의사를, 43.5%의 여성농업인들은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질 경우

이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층은 중·고졸 이상의 30~40대의 여성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농 통합형 농촌정주기반 구축방안 연구

연구자 : 송미령, 박시현, 이규천,
성주인

연구기간 : 2002. 5 ~ 2002.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

○ 연구의 배경

-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요긴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도시·농촌 통합형 정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농촌 지역의 정주 기반을 도시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전략, 즉, 도·농 통합적 농촌발전전략을 제시
 - 이론적 차원에서 도시·농촌 통합의 필요성과 개념을 정립
 - 농촌의 정주 여건을 통계 및 실증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되, 도·농 통합적 현상 파악
 - 도시의 관계 속에서 농촌의 정주체계 및 산업간 연계체계 등을 구축하는 방안 모색

○ 연구의 방법

- 문헌 조사, 통계 분석, 사례지역 조사 등 실시

2. 농촌 지역의 여건 변화와 도·농 통합

- 인구의 과소화와 노령화, 농가 인구의 동반감소, 생활권 광역화와

생활권 중심지의 상향 이동 등으로 농촌 지역 정주여건 활력 상실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기대와 가치에 주목
- 외국에서의 도·농 통합적 농촌발전전략
 - 농촌이 과소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중심지 개발은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촌향도를 막는 수단으로 유효
 - 농촌중심지의 인구감소로 인해 규모의 경제성,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추진
 -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파트너십을 강조
 - 경제적 활성화 프로그램이 중요

3. 도·농 통합형 정주기반 구축의 의의

- 도·농 통합 논의의 요체는 도·농 통합이 도시와 농촌 양 지역에 모두 도움이 되는 윈윈전략(공생전략)이고, 도시·농촌간 기능의 발전적 상호작용을 전제
 - 농촌은 도시가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쾌적하고 풍부한 자연환경, 여가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 보유
 - 도시는 농촌에 부족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직업 기회, 시설 및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4. 지역 유형화와 농촌 지역의 유형별 특성

- 전국 시·군 대상 요인분석
- 농촌 지역의 유형화
 - 비농업 강세 유형의 지역
 - 자체 중심성 강세 유형의 지역
 - 대도시 지향 유형의 지역
 - 일반 농촌 유형의 지역

5.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과 특성

- 사례지역의 선정
 - 광주시 도척면, 제천시 송학면, 홍성군 홍동면
- 사례지역의 정주 특성
 - 도시와의 거리에 따라 인구 구조에 차이. 그러나 도시민에게 택지와 녹지를 제공해주는 일방적 차원의 도·농 통합 일면도 관찰됨.
 - 농업과 도시적 산업이 혼재되어 있을 때 소득기회 높음. 그러나 무분별한 도시적 산업 유치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과 경관 훼손, 농지의 감소, 농업에의 소홀함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음.
 - 정주생활권은 행정구역상 하나의 면 단위나 시·군 단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광역화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면 단위 기초 중심지는 지극히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함.
 - 커뮤니티에 대한 공간적 범위 인식은 도·농 통합지역일수록 협소하고, 도·농 통합 현상에 대한 긍정적 판단도 도·농 통합지역일수록 약함.
 - 토지이용상 난개발과 계획적 과제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6. 도·농 통합형 농촌 정주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 방향과 과제

- 도·농 통합형 농촌 정주기반 구축의 방향 설정
 -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정비
 - 농촌 지역 정비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와 도농 간 네트워크 강화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비 내용의 다양화, 차별화, 소프트화
 - 농촌개발정책 대상의 확대
 - 농촌 자원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실현
- 도·농 통합형 농촌 정주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의 모색
 - 도시계획적 수단의 농촌 적용, 농촌계획적 개념의 도시 적용
 - 농촌 지역 정주체계에 적합한 시설 및 서비스 기반 정비

-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농촌 계획 및 정비의 추진
-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기반 조성
- 도·농 통합형 농촌 정주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적 과제
 - 커뮤니티 중심 토지이용 계획 및 개발 방식의 도입과 구축력 확보
 - 새 국토법상 용도지역 구분의 한계 조정
 - 새 국토법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유연화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도·농 균형개발 실현 보장
 - 계획 토대로서의 정보 기반 구축 및 전문가의 계획 역량 제고
 - 도시·농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

농촌폐비닐 적정배출과 종합적인 수거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연구자 : 허 장, 강창용, 김동원,
김난영

연구기간 : 2002. 6 ~ 2002. 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

- 연구의 필요성
 - 농업에서 비닐(하우스용, 멀칭용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반면, 폐비닐의 적절한 수거와 처리는 미흡
 - 많은 양의 폐비닐이 농가단위에서 소각·매립·방치됨으로써 농업생산, 농작업, 농업 환경에 피해를 주며, 재활용에도 어려움 초래
 - 폐비닐 수거율, 적정배출률의 제고를 위하여 농민 대상 홍보와 관련기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농업용 폐비닐의 발생량을 추정하고 폐비닐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며 적정배출을 위한 농업인 실천방안을 모색한 뒤, 관련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물을 작성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의 방법
 - 비닐사용 농가에 대한 방문조사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업소, 재생처리공장의 담당자에 대한 방문 및 우편조사
 - 문헌과 각종 1차 자료, 인터넷 조사, 해외(일본) 출장조사
 -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방문 혹은 초청하여 연구협의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 비닐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 농업용 비닐을 사용함으로써 지온 상승, 토양수분 보존, 토양침식 방지, 잡초 및 병해충 발생 억제 효과가 있음.
- 그러나 비닐하우스 내 암모니아, 이산화질소 등 유해 가스의 문제, 다습, 토양 내 염류, 중금속, 농약의 집적과 잔류 등의 문제도 있음.

3. 농업용 비닐 사용량, 폐비닐 발생량과 문제점

- 농가조사와 관련 자료를 통하여 볼 때 비닐하우스 재배 면적은 약 72,700ha, 멀칭 재배면적은 약 242,400ha 정도
- 사용되는 비닐의 양은 비닐하우스에서는 60,881.7톤, 노지 멀칭에서는 37,589톤 정도로 추정
- 폐비닐의 양은 비닐하우스에서는 110,397.7톤, 노지 멀칭에서는 150,893.5톤 정도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의 양은 261,291.2톤 정도
- 해마다 약 140,232.2톤 정도가 수거되지 않아 농촌 및 농업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수거되더라도 이물질이 많아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음.
 - 2001년까지 327,634 톤에 달하는 양이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업소에 적치
 - 폐비닐 수거는 농민, 지자체와 자원재생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나, 농민과 지자체는 폐비닐의 수거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재생공사도 수거능력에서 한계

4. 적정배출,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 농가단위에서 폐비닐을 적정하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말아서 묶거나 말뚝을 이용하는 방식, 마대에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비닐을 재질별로 분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적절한 장소에 집적

- 이로써 수율을 향상시키고 수거를 용이하게 하며 폐비닐의 재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수거·처리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
 - 적정배출 실적별 수집장려금의 차등지급제를 도입, 적정배출에 대한 조기수거 원칙의 설정, 인센티브의 현물화(마대 지급 등)
 - 마을 단위 공동집하소 설치에 대한 지원으로, 폐비닐 공동수거 추진
 - 자원재생공사의 수집능력 제고
 - 명예수집원 제도를 지자체 주도로 확대
 - 장기적으로는 농가에게 발생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며, 수거는 지자체, 처리는 자원재생공사가 담당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함.
- 폐비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 대체 피복재료의 사용, 친환경농업으로 비닐 사용 억제
 - 생분해성 혹은 광분해성 비닐의 개발
 - 비닐 재질의 개선

5. 대국민 홍보방안

- 폐비닐의 적정 배출을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에서의 역점사항
 - 농촌폐비닐 방치 및 부적정 처리(소각, 매립)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폐비닐 적정배출과 수거에 따른 이점을 집중 홍보
 - 생산에서 사용, 배출, 수거에 이르는 관련 주체(농민, 행정기관, 민간기관, 유관단체 등)의 유기적인 역할과 협조가 중요
- 홍보 수단
 - 광고지, 팸플렛, 홍보책자, 매뉴얼 등 홍보물을 제작해 농민과 관련기관에 배포
 - 각종 이벤트, 캠페인 기획
 - 언론을 통해 폐비닐 방치에 따른 문제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폐비닐의 적정배출 및 수거를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물관리 생력화 기술 개발의 경제성 분석

연구자 : 김은순, 김용택

연구기간 : 1999. 8 ~ 2002. 7

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이미 설치된 물 관리 자동화 시스템의 사례지구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관행 물꼬 관리와 자동 물꼬관리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 관리방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자동물꼬 도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2. 연구개발내용

이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은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기존 물 관리의 실태와 물 관리 자동화가 도입되는 배경을 기술하고 아울러 물 관리 자동화의 현황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충주지구와 상주지구의 자동 물 관리 시스템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동물꼬의 사용 실태와 노동력 절감 효과를 조사 분석함과 동시에 자동물꼬 사용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물 관리 자동화사업이 보다 확대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현행 물 관리 자동화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끝으로 농촌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물 관리 자동화 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비용-편익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자동화 사례지구로 충주지구와 상주지구를 선정하였

다. 비용-편익분석방법에 의하여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주지구의 경우 할인율을 5%로 하고 물값 하한치를 적용하여 얻은 B/C 비율이 1.27~3.79 범위에, IRR이 9~34%로 나타나 충주지구의 주수원공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은 대체로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상주지구는 할인율을 5%로 하고 재해경감 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 시나리오(용수절감 4%, 물값 68.81원/톤)을 적용한 결과 IRR은 8%, B/C 비율은 1.18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재해 경감 효과를 포함할 경우 최저 시나리오를 적용할 시 IRR 25%, B/C 비율이 3.16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상주지구의 자동화사업은 대체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동일한 시나리오의 경우 충주지구에 비하여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현재 시험 보급단계에 있는 자동물꼬의 경우 대체로 잠재적 편리함이 인정되나 관행물꼬에 익숙해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어 자동물꼬의 사용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현행 물관리 자동화사업은 수원공 위주의 자동화사업과 포장단위의 자동물꼬 모두 대체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결과는 자동 물 관리기술을 전국 단위로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전국적으로 자동화 물관리 기술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수원공 위주의 TM/TC 사업에서 시작하여 점차 용수로를 포함하는 평야부로 확대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TM/TC 전문요원의 양성과 훈련이 필요하며 지역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연구자 : 박시현, 송미령, 오내원,
유승우, 문순철, 장면주
연구기간 : 2000 .8 ~ 2002. 8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등장한 그린투어리즘(농촌관광)이란 개념과의 관련성하에서 기존의 관광농원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테마형 관광마을 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실용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조성된 관광농원을 최근의 그린투어리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테마형 관광농원마을 모델을 제시하며, 테마형 관광농원마을을 포함한 그린투어리즘의 실용화 방안으로 몇 가지 정책적 과제와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구 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제1차 연도 (2000-2001)	• 현행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방식의 문제점	• 관련법규 검토 • 현행 농촌관광휴양자원의 개발방식 문제점 파악
	• 농촌관광수요 및 공급	• 국민관광객 수요와 가능성
	• 관광농원 경영실태 조사와 데이터베이스화	• 관광농원의 이용 현황과 투자형태 • 경영성과와 재무구조
	• 테마파크형 관광마을 모형 개발	• 모델 테마관광마을 테마부여 • 테마파크형 관광마을 모델 정립
	• 외국 사례조사	• 외국의 그린투어리즘 사례 조사(일본)

구 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제2차 연도 (2001-2002)	• 그린투어리즘 개발 모형 및 관련기술 정립	• 유형화된 그린투어리즘별 개발계획 모형제시 • 유형별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
	• 테마파크형관광마을 모형 개발 및 대상지 적용	• 관광농원 중심의 테마마을 구축 • 테마에 알맞은 이벤트 개발 • 대상지의 테마파크형 관광마을모델 수정수정정보완 • 테마관광마을의 네트워크화
	• 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실용화	• 공급자와 내방객을 연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방안 • 정책지원방안
	• 외국사례조사	• 외국의 그린투어리즘 사례 조사(유럽)

3. 연구 결과

첫째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개념 정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그린투어리즘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농업소득 증대의 필요 및 수요자의 관광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일본에서의 그린투어리즘 대두 배경, 현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이론적으로 그린투어리즘 논의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린투어리즘과 혼용되는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농업관광(agricultural tourism), 농촌관광(rural tourism), 생태관광(eco-tourism) 등의 정의를 살펴보았으며, 그 용어들이 어의의 차이만큼 본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그린투어리즘은 자연, 경관, 환경에 대한 중시에 무게가 주어지는 생태관광과 농촌 지역의 자연, 문화 등을 보전하면서도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강조점을 두는 농촌관광의 중간적 개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무방하리라고 판단하였다.

끝으로 그린투어리즘의 특징을 정리하고 한 걸음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그린투어리즘이 추진되는데 강조되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둘째, 기존의 관광농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관광농원의 실상을 보다 자세하게 알기 위하여 경영주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서 관광농원 경영주가 경영상 가장 주력하는 부분, 시설 수준,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살펴보았다. 또한 조사 대상 관광농원이 총 매출은 높지만 순 소득은 낮는데 그 이유가 관광농원을 조성할 때 자기자본보다는 정부융자 또는 일반금융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린투어리즘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한국형 그린투어리즘의 제약요인을 상기해 볼 때 관광농원을 핵심 거점시설로 삼아 이웃한 팜스테이나 일반 마을이 특정 테마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공급 단위가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현 단계 우리나라 그린투어리즘 추진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관광농원과 마을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테마농원마을 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농촌공간에 테마가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방법과 테마의 체험에 비중을 둔 테마농원마을 모델, 그리고 모델의 성공적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3개 마을에 적용을 시도하였다.

넷째, 이 연구를 통해서 정책당국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린투어리즘의 실용화 방안으로 정리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 제시한 테마관광농원마을 모형을 포함한 그린투어리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킹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네트워킹 강화 방안, 그린투어리즘 경영 주체별 홈페이지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편 마을 단위에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오프라인 상에서의 네트워킹의 중요성과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산부분 직접지불제의 농업 부문 적용사례연구

연구자 : 이규천

연구기간 : 2002. 1 ~ 2002. 1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WTO 체제 출범이후 각 국가의 농업정책 틀이 변화되고 있다. 새로운 국제무역질서하에서 농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UR 협정문에서 허용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하는 농정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정의 틀 속에서 직접지불제를 본격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같은 일차산업인 수산 부문에 대해서는 공산품협정에 해당되어 수산업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수산업분야에서의 보조금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산업분야에서의 직접지불제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수산업도 농업과 성격이 비슷한 일차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농업 부문의 직접지불제를 원용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여 농업 부문의 직접지불제를 벤치마킹할 필요 때문에 농업 부문의 적용사례(도입필요성, 도입가능분야, 도입우선순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 부문의 직접지불제 도입필요성, 도입을 위한 UR 협정문 검토, 시행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수산부문에의 도입타당성과 도입우선순위를 검토함에 있다.

2. 연구방법

농업 부문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직접지불제(영농규모화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시행준비를 위해 연구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대해 도입필요성, 정책 내용, 도입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였고, UR 협정문의 직접지불제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수산 부문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도입 우선순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3. 연구내용

◇ 직접 지불(direct payment) 개념

농업에 대한 하나의 보조지원방식을 의미하는 일반명사이며, 정부가 생산자에 대해서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격지지 정책이나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과 같이 지원의 효과가 간접적이거나 집단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UR 농업협정문에서의 국내보조에 대한 분류는 보조방식에 따라 직접소득보조와 간접적 보조로 구분된다. 직접소득보조 중에서, 부속서 2의 5~13항에 열거된 생산과 연계가 없거나 적은 보조(green box 조항), 6조 5항의 생산감축 하의 직접 지불(blue box 조항), 개도국 투자지원은 감축이 면제되고, 나머지 보조는 감축대상(yellow box)으로 되었다. 한편, 간접적 보조에서는 부속서 2의 2~3항에 규정된 연구·지도, 식량안보 비축제도 등 정부의 일반 서비스 정책에 의한 보조가 감축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 농업부문에서의 직접지불제 도입 필요성

- 농정변화에 대한 정부보상: 정부의 농정이 외부 환경이나 국내적 필요에 의해 변경됨에 따라 농민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외에 환경보호, 국토보전, 고용과 같은 다면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공공재는 시장에서 화폐가치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 사회복지 구현: 국제적 농업환경하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농업정책은 소수의 전업적 농가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된 많은 농가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직접지불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 정치철학적 당위성: 직접지불제는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국가의 소득보조이기 때문에 그 보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나 계층, 나아가 공공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납세자 집단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직접지불제는 어떠한 경제활동, 또는 재화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과 효율을 기준으로 하는 근대경제학적 시각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농업 부문에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타당성의 근거는 사회의 경제적 정의를 추구하는 철학적 사상에서 찾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산업사회의 형성으로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타 산업에 비하여 효율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은 국민생활의 유지에 근본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필요하다.
- 국내 농업정책(농어촌발전대책)의 한계: 쌀 식부면적과 재고량의 급격한 감소, 상업적 영농, 투자 증대에 따른 위험(risk) 문제, 환경, 국토 보전과 같은 농업의 다면적 기능의 진작 정책 미약, 영농규모화정책의 부진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직접지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 농업정책의 대안으로서 직접지불제 강화하는 각 국의 움직임에 보조를 함께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농업 부문 직접지불제 사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논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 각 각의 도입필요성과 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

◇ 수산 부문 직접지불제 도입가능성과 가능한 유형

- 도입 가능성: 수산 부문에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WTO 협상에서 수산 부문을 농업 부문과 같이 별도의 협상의제로 설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의 공산품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차산업은 2차산업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범주로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공산품협정으로 수산 부문에 대한 소득보조 등이 어려울 것이나, 지금까지 수산보조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농업 부문과 달리 1차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최소한 농업 부문과 같이 별도의 협정이 없다고 할 지라도 농업 부문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원용하여 직접지불제 등의 보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수산 부문의 핵심과제는 어족자원의 보존과 바다환경의 보존이 될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도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식과 광의적 측면에서 환경보전과 관련된 직접지불제를 허용보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생산감축(이탈어민 지원), 어족자원보존 등에 관련된 보조는 각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과 부합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 도입 가능 직접지불제 프로그램
 - 환경어업 직접지불제: 환경어업을 통해 바다환경을 보전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유지하기 위

한 것이다.

- 수자원보전 직접지불제: 날로 부족해져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어족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잡는 만큼 살리는 **input-output balance**를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과 휴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 노령어가 조기 은퇴 직접지불제: 노령어를 생산현장에서 은퇴시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수산업면허를 반납하고 은퇴하는 어가를 지원한다.
- 조건불리어촌 직접지불제: 어업생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어촌을 지원함으로써 어가소득증대를 통해 어촌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사회를 유지시키고 환경보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 재해보상지원 직접지불제: 자연재해로부터의 소득상실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장함이 목적이다.
- 소득안정화 직접지불제: 수산물의 가격 변동·수량변동·자연재해에 따른 소득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순조로운 재생산을 도모한다. 단, 생산증대나 소득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 직접지불제 도입의 우선순위

연구의 난이도와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도입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① 환경어업 직접지불제, ② 수자원보전 직접지불제, ③ 노령어가 조기은퇴 직접지불제, ④ 재해보상지원 직접지불제, ⑤ 조건불리 어촌 직접지불제, ⑥ 소득안정화 직접지불제).

3. 농 업 관 측 정 보

농업전망 2003

연구자 : 최정섭, 서진교, 이재옥,
 최세균, 어명근, 김태곤,
 김경덕, 정학균, 송우진,
 이병훈, 황의식, 박준기,
 김영훈, 김명환, 박동규,
 장철수, 손철호, 정민국,
 전상곤, 성동현, 이형우,
 김병률, 홍승지, 김성우,
 김진현, 서대석, 송성환,
 이용선, 김윤형, 박재홍,
 이은숙, 김연중, 김은주,
 전철현, 한석호

연구기간 : 2002. 9 ~ 2003.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전망 2003」은 농림업 부문을 둘러싼 국내·외의 주요한 경제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전망하여 향후 농림업 부문 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높임으로써 농림업 생산자, 소비자, 정부는 물론 농림업 관련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5년까지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전망하되, 2005년 이후는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의 여건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2. 국제 농업 여건 변화

○ UR 협상 결과 관세화한 식량작물인 보리, 맥주맥, 콩, 팥, 녹두와

감자, 고구마, 특용작물인 참깨, 그리고 관세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양허관세를 인상(ceiling binding)한 양념채소류의 고추, 마늘과 감귤의 관세 감축 폭이 클 것이다. 따라서 관세감축폭과 생산액 비중이 큰 고추, 마늘과 관세감축폭과 지역집중도가 큰 감자, 보리, 맥주맥, 감귤 등에 상당한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 EU의 제안에 따를 경우 국내 농업정책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초래될 수 있다. EU의 제안인 감축대상보조 55% 감축과 최소허용보조 폐지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으로, 감축 폭이 그와 유사하거나 혹은 최소허용보조가 폐지 또는 기준이 하향 조정될 경우(현재는 기준 농업총생산액의 선진국 5%, 개도국 10%) 향후 국내농업정책 운용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 FTA는 1970년대 18건, 1980년대 6건, 1990년대 130여건 등 최근에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2년에는 250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FTA 체결에 농업 부문의 피해가 문제가 된다. FTA는 한-일 FT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 국내 농업 여건변화와 동향

- 농업 생산요소가격은 2002년에 전년 대비 0.7% 하락하였는데 비해서 2005년까지는 0.3%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노임은 2002년 2.9% 상승하였는데 2005년까지는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판매가격은 2001/02년 3.1% 상승하여 1990년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03년에는 3.6% 하락하고 2005년까지는 연평균 2.8% 하락할 전망이다.
- 농업생산은 작물 재배면적 감소, 태풍 ‘루사’로 인한 단수 감소, 한육우 도축물량 감소 등으로 2002년에 3.2% 감소하였으나 2003년에는 단수회복 및 한육우 및 돼지 도축물량 증가에 힘입어 2.3% 증가하고, 2004~05년에는 쌀 및 맥류 생산 감소를 가축 도

축물량 소폭증가가 상쇄하여 1% 정도 하락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농가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되어 2001년에는 명목소득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실질소득은 아직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4. 농산물 수급변화와 전망

○ 쌀

1인당 쌀 소비량은 2001년 88.9kg에서 2002년에 87.3kg으로 감소하였고, 2003년 85.5~86.0kg, 2005년 83.0~83.5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부터 실시하는 생산조정제에 따라 벼 재배면적은 2002년 105만 3천ha에서 2003년 102만ha, 2005년 98만ha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임산물

임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교역 여건의 악화로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국내 수요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DDA 협상은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임산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채소

고추의 1인당 공급량은 최근 증가 추세인 반면, 소비자가격은 2000년 이후 중국산 고추 수입증가로 인해 하락추세에 있다. 마늘 재배면적은 수입증가 우려, 노동력 부족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주아재배 확대로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은 39만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와 무의 전체 수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체되거나 감소가 둔화되고 있다. 2003년 이후에는 양파 소비가 소폭 증가하여 재배면적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일

2003~05년간 과수 재배면적 감소 추세가 지속되지만, 단수 증가로 과일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칠레 FTA는 2005

년 이후 과일류 수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DDA나 한·중간 식물검역협상의 진전 여부는 과일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과채

과채류의 소비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 증가로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등 대부분 품목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구조가 계절소비에서 주년 소비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 생산 방향은 다수확보다는 고품질과 신선도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과채류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품질경쟁력은 중국산에 비해 한국산이 우위에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산과 경쟁이 예상된다.

○ 축산

한·칠레 FTA 타결이 2003년 국내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전망되며, 돼지고기의 대일수출은 돈콜레라 백신 접종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한우, 돼지, 육계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나, 계란은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낙농은 원유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소비량이 증가하여 재고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농업 · 농촌경제동향분석

연구자 : 김경덕, 정학균, 송우진

연구기간 : 2002.1 ~ 12

1. 연구목적

이 보고서는 매월 월보형식으로 발간되는 채소월보, 과일월보, 과채월보, 축산월보와 매년 초 발간되는 농업전망간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 분기별로 발간된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거시경제, 세계 농업, 국내 농촌동향, 품목별 가격 및 수급, 특별주제 등이다. 특히 국내 농촌동향편에서는 해당분기의 농업소득을 추산하여 시의 적절하게 농가의 소득변화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2. 국제경제 동향

2002년 세계 경제는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베네수엘라 파업으로 인한 고유가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세계 농업 동향

WTO 농업협상이 진행되었고, 초기과정으로 하빈슨 의장의 종합보고서가 2002년 18일 발표되었다. 이는 농업모델리티 확립을 위한 기초로 이용된다.

미국이 2002년 5월 새로운 농업법을 제정하였다. 이 농업법은 소득안정장제도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2002/03년도 세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대비 3.7% 감소할 전망이

고, 소비량은 전년 대비 0.1%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전년보다 17.1% 감소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국내경제 동향

2002년 국내경제는 대외경제 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연평균 6.2%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에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하반기에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다.

5. 농촌경제 동향

2002년 11월 기준 농가판매가격은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하였다. 이는 청과물류의 큰 폭의 상승에 기인한다. 농가구입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5%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 교역조건은 전년동월대비 3.1% 개선되었다.

경중부분은 기상악화로 인해 단수와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축산부분은 쇠고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원유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낙농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다

6. 지역언론 동향

지방 일간지 23종에 보도된 농업 관련 이슈를 발췌하여 매월의 언론 동향을 알기 쉽게 분석하였다.

7. 특별 주제

1/4분기의 특별 주제는 선진국의 농업전망 대회,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과 발전 방향, 2/4분기에는 한약재의 유통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였다.

쇠고기 유통 및 소비 행태 분석

연구자 : 정민국, 최정섭, 허 덕,
유철호, 전상곤

연구기간 : 2002. 1 ~ 2002. 11

1. 연구의 목표

2001년 쇠고기 시장이 관세화로 개방된 이후 유통 및 소비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수입과 소비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양보다는 질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 쇠고기 소비량 중 한우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기준으로 43.2%였는데 이는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한우고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품질 차이에 상응하는 가격차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수립되어야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될 수 있다.

관세화에 의한 수입자유화 이후 수입 쇠고기의 유통경로나 참여업체의 현황, 유통업체의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구매 및 판매행태, 소비자의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선호도와 선택요인,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를 위한 조건 등에 대한 조사 연구는 미흡하였다.

한우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우산업 정책을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구축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통과 소비의 최근 실태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우고기 및 수입쇠고기의 유통 실태와 도소매업체·소비

자의 쇠고기에 대한 구매행태 및 선호도를 조사 분석하여 소비지시장에서 한우고기가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가. 쇠고기 유통실태 분석

- 한우고기 유통 현황과 문제점
- 수입쇠고기 유통 현황과 전망

나. 도소매업체의 쇠고기 구입 및 판매행태 분석

- 쇠고기 구입실태
- 쇠고기 판매실태
- 쇠고기 구매 행태 및 관련 제도

다. 소비자의 쇠고기 소비 행태 및 선호 분석

- 쇠고기 구매 패턴 및 선호도
- 소비자의 한우고기 가격에 대한 평가 및 지불의향 수준
- 수입쇠고기에 대한 선호 분석 및 홍보효과
- 쇠고기 외식 소비 행태

3. 연구결과

2001년 쇠고기 총공급량은 40만 2천 톤이었다. 1998년 이후 국내산 소비량은 감소하고, 수입쇠고기 소비량은 증가하여 쇠고기 자급률은 계속 낮아졌다. 국내 쇠고기 생산은 2004년 이후 사육두수와 출하두수가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자유화 이후 동시매매입찰(SBS)업체 수는 줄고, LG상사 등 대기업이 수입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회원사가 쇠고기를 직접 수입함에 따라 SBS 업체의 수입물량은 감소하였다. 2001년도 수입물량 중 SBS업체를 통한 수입 비중은 27.4%로 2000년도 66%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체는 한우고기를 주로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물류센터나 도매시장을 통하여 구입한다. 쇠고기를 구입할 때 한우고기는 육질등급과 신선도·안전성을, 미국산 쇠고기는 육질등급과 고기의 안전성을, 호주산 쇠고기는 고기의 신선도·안전성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 도소매업체가 선호하는 수입쇠고기는 미국산이다.

쇠고기 공급조건 평가에서 위생관리·안전성 측면에서 한우고기는 미국산과 비슷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고와 판매촉진활동 지원에서 한우고기는 미국산과 호주산에 크게 떨어진다.

2001년 이후 도소매업체의 대부분(52.8%)은 한우고기 취급물량을 줄였지만 브랜드 한우고기 취급물량은 증가시켰다. 수입쇠고기는 냉장육은 증가한 반면 냉동육은 감소 또는 현재 수준 유지가 대부분이다. 앞으로 브랜드 한우고기와 수입 냉장육 취급비중을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조사결과, 주부들은 주로 한우고기를 600g 단위로 한 달에 1회 내지 2회 구입한다. 구입한 한우고기는 대부분 냉장육이고, 포장되지 않은 한우고기를 더 선호한다. 냉장 한우고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고기가 신선하고 맛이 좋기 때문이며, 포장되지 않은 고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신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입쇠고기는 600g단위로 월 1회 내지 2회 구입하는데, 대부분 냉동육이다. 냉장 수입쇠고기를 구입한 소비자 중 절반은 다시 냉장 수입쇠고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 소비자는 수입쇠고기 구입 시 포장된 고기를 선호하는데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고 위생적이기 때문 또는 원하는 부위를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쇠고기 600당 등심가격 10,000원, 갈비가격 5,000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한우고기에 대한 최대 지불의향은 1등급 등심 17,863원(1.8배), 2등급 15,175(1.5배), 3등급 13,188원이며, 한우갈비는 9,272원(1.8배)이다.

소비자는 쇠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매우 중요시하지만 한우고기에 대한 지불의향이 실제가격보다 크게 낮다. 이는 한우고기 품질과 안전

성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우고기가 일정 수준 소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고급육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비의 절감이 필요하다. 둘째, 한우고기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관련 정보의 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한우고기에 대한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입쇠고기와 육우고기의 한우고기로의 부정 유통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쇠고기 유통 및 소비 관련 데이터를 정비하고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채소수급동향 조사

연구자 : 김연중, 김명환, 서대석,
한석호, 김은주, 전철현

연구기간 : 2001. 7 ~ 2002. 4

1. 연구의 배경

일본 농수산성 채소안정기금에서는 일본의 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아시아 주요국들의 채소수급상황에 대한 조사를 IC NET Limited사를 통하여 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IC NET Limited사는 우리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한국의 채소수급상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대상품목

주요 대상 품목은 채소 9개(배추, 수박, 멜론,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가지, 파프리카)이다.

3. 연구 내용

- 분기보(4회/년): 주요 내용은 작부체계별 주산지의 재배면적 현황 및 변화, 작황, 생산량, 출하량, 수출입현황, 주산지별 작형 변화, 농가 수, 인구, 농가인구, 면적, 기후, 생산량 추정, 도매시장 반입량, 가격, 일본으로 수출량, 수출가격 등이다.
- 연보(1회/년): 주요 내용은 한국의 채소생산동향, 주산지의 기온, 강수량, 주요 농업거시경제지표, 작물별 생산액, 작물별 수출입량 및 수출입액, 토지이용 변화, 주요작물 생산비 등이다.

제천시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연구

연구자 : 김병률, 최경환, 장우환,
서대석, 김진헌

연구기간 : 2002. 2 ~ 2002. 12

1. 계획 수립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중산간지역인 제천시 농업·농촌의 부존자원 잠재력을 기반으로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천시의 중장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는 제천시 전 지역(시 관내 농촌동 지역과 1읍 7면; 봉양읍,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백운면, 송학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를 2002년으로 하고 계획기간을 2003~2010년으로 하여 전반기(2003~2006년)와 후반기(2007~2010년)로 구분하였다.

3. 연구 방법

지역부존자원조사 및 개발수요조사 실시하여 지역농업 실태와 개발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주민공청회와 읍면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였다. 제천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 도매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상품성, 브랜드, 포장 및 디자인 등 경쟁력을 평가하여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SWOT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부문별, 지역별(읍면별), 품목부류별로 부존자원 및 현상이 가지는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도출하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와 전망이 제천시 전체, 각 지역(읍면), 부문, 품목에 기회요인(Opportunity)으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위협요인(Threat)으로 작용하는가를 구분하였다. 제천시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 대학의 교수와 연구원의 관련 연구자를 연구자문으로 위촉하여 중간연구과정 및 보고서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일본,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친환경농업, 그린투어리즘, 지역농업·농촌개발 사례를 조사, 검토하여 분야별 벤치마킹을 시도하였다.

4. 제천시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방향

1) 21세기 제천 농업·농촌의 비전

제천시 농업·농촌의 비전을 첫째 관광과 연계한 농업(그린투어리즘, 녹색관광)으로 농업소득의 한계 극복, 둘째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여 환경보전과 고부가가치농업 실현, 셋째 차별화농업을 추진하여 특화농업, 브랜드화, 틈새마케팅 추진, 넷째 노인, 가족, 귀농인이 편안하게 사는 휴양전원농촌의 건설을 통해 농업과 관광, 농업과 환경, 특화품목과 틈새시장이 만나는 농업, 노인이 편하게 사는 농촌, 가족 단위 거주공간, 귀농 도시민의 전원주거지로서 농촌을 건설하는데 두었다.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제천시 농산물은 주산품목, 특화품목, 명품, 미래품목, 특수품목으로 구분하며, 그 중에서 특화품목, 명품, 미래품목, 특수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과, 오이, 약초 등 명품은 제천시의 얼굴 농산물로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관광농산물, 산채·더덕과 같은 청정 농산물, 가공농산물을 미래품목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과단지, 채소단지, 잡곡특작단지, 친환경농업단지, 관광농업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품목별, 부문별 발전방향

쌀 및 잡곡에 대해서는 첫째, 친환경재배 확대, 양질 품종 보급, 청결

미 가공으로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차별화, 고품질화, 둘째 친환경·청결·제천 이미지를 살린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다양한 포장재를 개발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천쌀 판매, 셋째 전국적인 주산품목인 잡곡(팥, 강낭콩 등)의 생산, 가공을 체계화하여 고부가가치품목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광용 잡곡단지 육성을 제시하였다.

과수에 대해서는 고품질 제천사과의 유출에 따른 다른 지역산 둔갑을 방지하고, 대표브랜드를 개발하여 3년내(2005년)에 전국 최고의 명성을 획득하고, 제천사과의 공동선별포장, 공동출하 확대로 거래교섭력 제고와 통명거래, 견본거래를 유도하며, ‘사과따기’ 수확체험(PYO), 농장판매, 관광도로변 직판장 개설로 관광농업 연계와 사과 홍보 강화를 제시하였다.

채소에 대해서는 주산품목인 고추의 고품질화(양건고추)로 중국산 수입 고추와 차별화 유도, 제천의 토양, 기후에 적합한 다양한 채소단지 육성으로 고소득작목 개발을 제시하고, 특작에 대해서는 제천을 국산약초의 최대 전문시장으로 홍보, 발전시켜 국산약초의 메카로 육성하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축산은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추진을 위해 ‘아름다운 축사만들기’, 축산분뇨 퇴비화로 사과, 오이 등 농산물과 ‘지역 복합영농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천의 청정이미지를 살려 시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에서 대표적인 친환경농업 실천 지자체로 발전하기 위해 읍면별로 친환경농업지구 또는 마을을 지정하여 단계적인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개선 및 가공,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 공동출하 확대로 제천 농산물의 거래교섭력 제고, 공격적인 시장 개척, 판로 확대, 제천 이미지의 브랜드화와 철저한 브랜드관리로 차별화와 고품질 명성 획득, 새로운 컨셉(concept)의 고추시장 통합으로 명실상부한 최대 산지시장 유지 등을 제시하였으며, 농업관광(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는 주5일제근무 확대 등으로 가족 단위 체류형 숙박관광, 휴양관광,

체험관광(그린투어리즘)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부응한 고급민박 육성 홍보,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복합적인 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농업관광 기반 조성과 다양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등 기본적인 관광 및 위락시설에 대해 외부자본을 적극 유치하나, 관광소득이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민박, 주말농원, 토속음식점, 농업·농촌 체험관광 등은 지역 주민 운영 확대, 각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마을개발사업 적극 유치로 관광객이 선호하는 아름다운 관광휴양마을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정부의 농업, 농촌인력 육성계획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신지식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자체 차원의 농업명인 선정 육성으로 지역농업 선도와 주민정신 함양하고, 귀농을 유인하기 위한 귀농인 정착 지원, 농업인들의 선진농업 견학 및 해외연수 확대와 농업인 수요에 부응한 교육·훈련, 정보화 교육 지원, 고령화 사회에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지원센터(농기계은행)를 운영하고, 시차원에서 밭, 논 소규모 기반정비사업, 관정, 농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영농조건 개선과 전천후 농업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농촌 생활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사업, 관광휴양자원 조성사업 등은 중앙부처 계획과 적극 연계하여 추진하고 시차원에서 농촌 지역 농가의 화장실, 부엌의 현대식 개량, 욕실, 샤워실 설치 지원으로 도시가구와 동질의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5. 제천시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수립

제천시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은 첫째 기존의 중앙정부 및 도 사업, 즉 기반정비, 용수개발, 정주권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관광(그린투어리즘) 육성(마을개발, 민박 등) 등 제천시 농업·농촌 발전 비전, 과제와 관련된 사업들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고, 둘째 제천시 농업, 농촌 발전 비전 사업, 농가소득과 직접 관련된 사업

들을 우선 추진하며, 셋째 각 부문별 과제를 예산사업(투융자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비예산사업은 조속해 검토 시행하고, 넷째 투융자사업은 메뉴방식으로 추진하되 농가, 마을, 생산자조직(작목반, 영농법인, 협동조합 등)의 상향식 신청에 의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국고 보조와 용자가 포함된 사업, 예컨대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 등은 사업 종료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사업은 가급적 1단계인 2003~06년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제천시 농업·농촌 투융자예산은 1단계 사업예산을 2단계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다.

계획에서 제시한 전체 예산사업수는 총 75개이며 1, 2단계 총 8년간 2,290억원이 산출되었다. 1단계 사업수는 74개이며 4년간 예산액은 총 1,229억원으로 연평균 307억원이며, 2단계 사업수는 62개이며 4년간 예산액은 총 1,062억원으로 연평균 266억원이다.

제천의 농업·농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신규 추진사업이 많으며 투자비 소요액이 크므로 ‘행정-주민-생산자단체’간 공감대 형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선 행정기관과 생산자단체에서 이 계획에서 제시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들의 실효성을 심층 검토하여 사업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대농업인, 생산자조직 교육과 홍보계획이 사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천시에 ‘농-소-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사업, 즉 관광농업 활성화, 친환경농업 육성, 유통개선 및 가공·수출 촉진 등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팀 또는 전담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

4. 농 정 연 구

북한의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연 구 자 : 권태진, 김영훈

연구기간 : 2002. 1 ~ 2002. 11

북한은 2002년 9월 신의주 행정특별구역을 지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를 차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하여 경제 운용 방식을 바꾸고 기업과 농장의 경영 방식도 책임경영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2~3년 전부터 준비한 결과이며 이에 대비하여 해당 분야의 인력을 훈련하고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우리가 북한의 농업인력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개발을 통한 국가의 능력배양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상호 간 인력 교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

북한은 농업 부문 노동력이 전체 노동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농번기에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외형상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식수준이나 관리 능력 면에서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이다. 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제도, 지도체제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지만 교육의 내용, 장비와 시설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개발이 가속되면 농업 부문의 인력이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선택하려는 농정 목표에 맞도록 인력개발 분야를 선택하고 이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은 향후 원예, 특작, 축산, 가공 및 유통 분야에 신규 인력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술자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는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인력개발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은 지속적이고도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문헌이나 자료의 교류를 통해 지식을 확산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초청이나 방문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강화하면서 학술회의나 공동연구를 통해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품종이나 유전자원을 교류하고 시범사업이나 공동 시험을 통해서 본격적인 인력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교류가 본체도에 오르면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훈련과 연수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은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력개발을 위한 협력은 외국에서 추진하였던 인력교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외국이나 남북한 간 추진하였던 인력교류 경험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최근 남북한 간에는 농업 전문가들의 교류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고 제3국을 통한 인력훈련이나 프로젝트를 통한 인력교류도 구체화되는 단계에 있다. 인력의 개발과 훈련은 기본적으로 당사국의 관심 분야에 집중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를 도출하였다. 인력개발도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력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관심 있는 국제기구나 주변 국가들과 함께 농업 부문의 인

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간 협력을 통한 북한의 인력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REI 북한농업동향

연구자 : 권태진, 김영훈, 정정길,
전형진

연구기간 : 2002. 1 ~ 2002. 12

2002년도 북한의 벼와 옥수수 등 가을 작물 작황이 비교적 좋았던 것은 생육 기간의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던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강수량 면에서 보면 2002년은 평년에 비해 기상이 작물생육에 불리하였다고 판단된다. 6월까지의 가뭄현상에도 불구하고 7~8월의 비교적 고른 강우는 작물 생육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FAO/WFP의 북한 식량평가단은 2002/2003년 북한의 국내 생산량을 3,837,000톤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2001/02년 3,657,000 톤에 비해 4.9% 증가한 양이다. 금년 가을 수확한 쌀과 옥수수의 작황이 지난해에 비해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금년 겨울에 재배할 밀과 보리의 수량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게 잡고 있으나 면적이 약간 증가됨으로써 이모작 밀과 보리의 생산량도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모작 감자는 지난해에 비해 재배면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낮게 예상함으로써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2/2003년 식량 소요량은 총 4,921,000톤으로 추정된다. 연도 중간의 인구를 2,330만 명으로 추정하고 1인당 연간 167kg의 곡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 식용 소요량을 3,837,000톤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총 부족량은 1,084,000톤이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100,000톤을 수입하고 금년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제공한 쌀 400,000만 톤 중 내년 양곡 연도로 이월될 300,000톤을 감안하면 절대 부족량은 684,000톤이다. 세계식량계획

이 국제사회에 호소한 대북 식량 지원량 512,000톤이 계획대로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간, 간척, 다락밭 건설 등 무리하게 농지를 확장하였으며 곡물 위주의 단작 생산체제와 고투입, 밀식 생산을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게 되자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식량지원을 개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식량 사정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경제성장과 농업개발만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농업개발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대북 지원에 대해 피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 하반기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감소하여 수혜자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노인 등 북한 주민의 1/3가량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북한 어린이 3명 중 1명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식량 공공배급 대상이 되는 주민도 1일 분배량이 최소영양요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줄어든 원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의 지원 대상자 선별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2002년 국제사회는 유엔합동호소를 통하여 2억 1,979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이 중 90% 이상은 식량지원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농업개발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농업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액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이후 북한의 농업 부문에 대해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당초 목표액의 5.9%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국제기구, 개별국가, 민간지원단체 등을 통하여 북한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업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02년 북한은 7.1경제관개선조치, 신의주특별행정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우리나라

라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대북 원조가 중단되거나 유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그 어느 해 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유엔기구들은 2003년의 대북 지원 목표를 2억 2,529만 달러로 정하고 유엔합동호소를 통해 국제사회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만일 북한 핵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인도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2002년 이루어진 남북한 간의 대화나 북한과 외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남북한 간의 합의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외국의 투자 증대와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핵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고 동북아지역 내 평화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이러한 희망이 실현될 수 있다.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세감축효과 분석

연구자 : 최세균, 어명근, 임송수

연구기간 : 2002. 1. ~ 2002. 12.

이 연구는 주요 10개국의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구조를 분석하고, WTO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 감축 방식별 관세 감축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국가는 우리나라와의 통상관계, WTO 농업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각각 5개국씩으로 나누었다. 분석대상 품목은 WTO 농업협상에서 농산물로 분류되는 HS 1류~24류(3류의 수산물 제외), 29류, 33류, 35류, 38류, 41류, 43류, 50~53류 등이다. 비종가세 부과 품목은 모두 종가세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관세 감축 방식은 모두 여덟 가지이다. UR 방식의 경우 모든 품목이 평균 감축률로 감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평균 관세 감축률은 개도국 24%, 선진국 36%를 적용하였다. 스위스 공식은 관세율 상한을 25%, 100%, 200%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경우를 스위스 공식 1, 2, 3으로 표시하였다. 여덟 가지 관세 감축 방식 가운데 UR 방식보다 관세 감축률이 낮게 나타나는 국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하는 스위스 공식3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 공식3이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분석 대상 10개국 가운데 한국,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7개국이나 되었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 스위스 공식2를 적용할 경우,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미국, 호주, 칠레 등 3개국이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누진관세, 관세격차, 고율 관세 등 현재 WTO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관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에 의한 것보다 반드시 누진관세를 완화시킨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로 관세율 차이가 큰 국가들에 있어서는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보다 누진성 또는 역누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컸다. 고율 관세 문제는 공식에 의한 감축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고 관세는 공식에 의할 경우 많게는 99%까지 감축된다. 한국의 경우 최고율 관세 887%는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면 24.3%가 되어 97.3%의 감축률을 나타내게 된다. 공식에 의해 관세를 감축할 경우 고율 관세는 관세율 상한 부근으로 수렴하게 되고 국가별, 품목별 관세격차는 크게 해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 감축공식별 효과는 관세할당(TRQ) 품목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위스 공식1이 우리나라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다. 스위스 공식1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TRQ 품목의 평균 관세율 302%는 20%로 감축된다. 반면 UR 방식은 TRQ 품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게 가장 유리한 관세 감축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UR 방식을 적용하면 평균 230%의 관세율을 유지하게 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타이와 멕시코도 감축공식에 따른 관세 감축의 크기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선진국들의 TRQ 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은 스위스 공식1과 캐나다 공식을 제외한 다른 관세 감축공식을 적용할 경우 UR 방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은 관세율 상한을 100% 이상으로 할 경우 UR 방식보다 크게 불리하지 않거나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EU도 미국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은 농산물 수출국 가운데 선진국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율 상한 200%의 스위스 공식3은 분석 대상국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 경우도 EU, 미국, 호주 등 협상력이 큰 국가

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은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전환하여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한국, 일본 등)에게 특히 불리하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은 관세화에 의한 시장보호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WTO/DDA 농업협상에서 공식에 의한 급격한 관세 감축 방식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에서 관세화는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수출국들은 관세체계를 개선하자는 명분으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세 감축 공식별 효과는 국별, 품목별로 다르다. 수출국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개발도상국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가장 불리한 국가이다. 따라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의 장단점과 국가별 효과를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홍보하여 WTO/DDA 협상에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채택될 경우에도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이행계획서 작성, 이에 대한 생산자와 학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 실무적 준비도 필요하다.

세계농업정보

연 구 자 : 김태곤

연구기간 : 2002. 1 ~ 12

WTO 체제에서 세계 각국의 농업, 농정, 농산물무역 등에 관한 동향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의 농업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농업·농정 등에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행정기관·연구자·생산자·관련업계 등에게 공급하고, 동시에 세계 각국의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정책 입안, 국제동향 파악, 협상전략 수립, 농산물수출 확대, 그리고 농업경영 및 기업활동 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학문과 연구는 20세기에는 ‘전문화’와 ‘세분화’가 중심이었지만, 21세기는 ‘종합화’와 ‘學際化’가 중요시되고 있다. 세계 농업정보는 정보의 共有를 추구하여,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학문·연구·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별 농업 및 관련산업 개황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농업정책 및 국제협력, 세계 곡물수급 현황 및 전망, 세계 농산물무역 동향, WTO, OECD, APEC, FAO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 수집은 각국의 보도자료, 국내외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로 입수하거나 농업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하고 있다.

수집한 정보는 KREI 홈페이지에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설치, 게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련사이트’를 설치하여 세계 각국·국

제기구·기타 관련기관 등 150개 정도의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이용자가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정기적으로 취합, 보완하여 월1회 ‘세계농업뉴스’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다.

2002년 1년간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총 205건에 달한다. 정보의 종류는 국별 농업 및 관련산업 개황(품목별 생산, 유통, 무역), 국별 농업정책 및 국제협력, 세계 곡물수급 현황 및 전망, 세계 농산물무역 동향, WTO, OECD, APEC, FAO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등에 이르고 있다.

이것을 국가·기구별로 보면, 중국 EU 37건, 미국 34건, 일본 22건, 중국 18건, WTO 16건, 세계 곡물 수급 12건 등이다. 주로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에 인접한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의 농산물 무역이나 농업 협상 등에 영향력이 높은 미국, EU, 케언스 그룹 등에 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월간으로 간행하고 있는 ‘세계농업뉴스’는 2002년 1월호부터 12월호까지 12권을 발행, 전국 관련기관 또는 개인에게 배부하고 있다.

한편, 세계 농업정보 관련링크를 설치, 세계 각국·국제기구·기타 관련기관 등 150여 개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이용자가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농업부(USDA, www.usda.gov), 경제연구국(ERS, www.ers.usda.gov), 전국농업통계국(NASS), 세계 농업전망위원회(WAOB), 세계 식량수급 시뮬레이션 등에 접속하면 방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도 농정현안, 국내외 주요 농업시책, 식량안보, 농업관측, 해외농업정보 등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주요국의 WTO농산물협상 제안서 분석 및 대책수립

연 구 자 : 이재옥, 임정빈

연구기간 : 2001. 4 ~ 2002. 2

WTO 농산물협상은 시애틀 각료회의와 뉴라운드 출범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UR 협상결과의 이행완료 1년 전에 협상을 재개한다는 농업협정문 제20조에 따라 2000년 추부터 재개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까지 계속된 제1단계 협상에서는 농산물협상의 목표와 달성방법에 대한 각국의 제안서를 기초로 예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2001년 5월부터의 제2단계 협상에서는 제1단계에서 부각된 주요 19개 쟁점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제2단계 협상에서는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의 감축, 관세의 감축 폭과 감축방식, 시장접근물량의 확대와 수입관리 방안의 개선, 다원적 기능의 반영방안 등 농업개혁과 시장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골격과 원칙에 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가 상대국의 제의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농업과 농업정책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2단계에서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각 주장의 기본배경과 각국의 협상전략을 근본적으로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협상력이 큰 주요국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최근 농업여건과 농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해당 국가가 제출한 제안서와의 연계성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제2단계 협상에서 채택되었던 19개 의제별 쟁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향후 분

야별, 쟁점별 대응논리의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주요국의 농업 여건과 농업정책의 분석에는 미국, EU, 일본, 케언스그룹 등을 포함시켰다. 미국의 경우 2002년 농업법 제정 동향과 내용을, EU의 경우에는 Agenda 2000의 개혁방향을 상세히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미국이 WTO 농업협상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의제는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축 혹은 철폐에 대한 것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수출보조금으로 인해 농산물시장이 왜곡되고 미국 생산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번 협상을 통해 수출보조금을 완전 철폐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금지시키겠다고 천명해 왔다. 한편 미국은 비교우위와 자국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 장단기적으로 통상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세 인하,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등 시장개방 분야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얻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농업보조금의 경우 미국이 제출한 협상제안서에서 무역 및 생산왜곡적 국내보조의 감축과 허용대상보조의 규율 재정립에 대한 기본입장이 표명되고 있으나 캐나다의 국내보조 상한설정이나 케언스그룹의 품목별 AMS 감축 등 과격한 국내보조 개혁 주장에 비해서는 약화된 수준으로 이는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U는 회원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안에 입각하여 차기 농산물협상에 임할 것으로 본다. 추가적인 가입대상 회원국의 경우 농업과 농민의 비중이 크고 국제경쟁력이 약하므로 가격지지 인하 폭이 미미한 현 상태 하에서는 과잉생산의 우려가 큰 만큼 수출보조감축 약속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구권 국가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한 관계로 시장개방 문제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공동농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격지지의 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직접 지불도 생산과 비연계된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아 생산량의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 수년간 시장경제로부터 과잉 보호되었던 관계로 시장가격의 변화에 생산이 비탄력적이며,

직접 지불의 확대는 농지의 집약적 사용을 촉진시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동구권 국가의 경우 EU의 공통적인 가격지지가 적용될 경우 이들 국가의 생산량은 더욱 증가하여 EU의 대외적인 약속과 양허를 지켜나가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개혁안에 기초할 경우 차기 농산물협상에서 EU의 입지는 매우 좁고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하겠다.

일본은 UR 타결 이전의 국내보조 감축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아 아직도 국내보조 감축에 상당한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분야에서도 중요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철저히 수입관리를 해 온 결과 UR 이행에 큰 문제가 없다. 특히 일본은 1999년 쌀의 과일문제에 봉착하여 자발적으로 관세화로 전환하여 차기 농산물협상에서 큰 부담을 덜었다. 일본의 차기협상에서의 전략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국내보조가 가능하도록 특히 허용정책의 기준을 조정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식량안보에 역점을 두어 국내적으로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에서는 허용정책과 직접 지불의 형태로 반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진정한 관심 사항은 식량안보보다는 급속한 중산간지역의 농지이탈과 휴경, 그리고 농촌 지역이 공동화를 방지함으로써 국토발전을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과 식량안보 문제와 관련 협상연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 수입구과 수출국의 의무와 권리의 균형, 수출제한의 관세화를 통한 양허, 수출국영 무역에 관한 규율강화, 개도국 우대조치의 대폭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우회적인 협상전략인 것을 판단된다.

농산물 수출국들의 모임인 케언스그룹은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상당한 결속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산물의 관세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이들 국가는 시장접근 확대, 국내보조 감축 및 수출보조 철폐 등에 있어 가장 개혁적인 입장을 견지

할 것이다. 케언스그룹이 요구하는 분야별 농업개혁은 상당 부분 미국의 제안과 일치하나 국내보조 중 허용보조에 대한 입장, 수출국영무역과 수출신용에 대한 입장, 개도국 특별대우에 대한 입장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WTO 협상에서 농업 분야를 제도업 분야와 동일한 선상에서 무역자유화해야 한다는 케언스그룹의 주장은 대다수 케언스그룹 국가와, 특히 이 그룹을 주도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제조업 분야가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는 국내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연 구 자 : 임정빈, 이재옥

연구기간 : 2001. 11 ~ 2002. 2

카타르 WTO 각료회의의 선언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3년 3월까지 세부원칙에 대한 협상이 종료된 후에 본격 추진될 각국의 시장개방 양허협상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가 최대 협상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우리나라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고 선진국지위로 협상결과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관세감축, 시장 접근물량 확대, 국내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행약속의무가 발생할 것이므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순위가 높은 협상과제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논리와 전략개발을 통해 정부의 효율적인 협상추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측면 지원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UR 농업협정에는 각 분야별로 개도국에 대해 이행기간 및 감축 폭 등의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UR 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농업의 취약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개도국 우대의 혜택을 받아 왔다. 이렇게 UR 협상에서 확보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는 실제로 지금까지 UR 농업협정을 비교적 원만히 이행해 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거 UR 협상 당시에도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더욱이 UR 이후 OECD에 가입하여 새로운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압력은 향후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에 있어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논리로써는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에서의 일반적 평가, 그리고 UR 협정 타결 이후에 나타난 경제 상황 및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논리적 설득과 주요국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협상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효과적이고 단계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 대응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개도국의 정의 및 그 결정 기준은 국제법 및 국제기구의 관행상 당사국 스스로의 개도국선언과 각 국제기구가 내부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1인당 GNP와 같은 단편적인 경제지표만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선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거나 수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UR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WTO 체제상 이미 개도국으로 분류된 바 있으며,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의 통계자료, 기후 변화협약,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원조수혜국 명단, FAO의 식량농업관련지표 등에서도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APEC 내 무역, 투자자유화 및 국제개발협회, 국제투자보증기구 등에서도 개도국을 인정되고 있으며, 이 밖에 국가별 발전 정도에 따른 유엔 개발계획의 국가분류에서도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여건은 개도국지위를 부여받았던 지난 UR 타결 당시보다 금물 및 외환위기의 여파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은 IMF 금융지원체제하에서 경제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있고, 이때를 전후로 하여 1인당 국민소득을 비롯한 기초경제지표 및 국가경쟁력, 국가신인도, 인간개발지수 등 각종 사회적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어 한국과 비교 대상국이 될 수 있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에 뒤처지고 있으며, 특히 일반적인 국가발전 및 개발정도를 나타내는 경제 및 사회지표들이 기존의 선진국 및 OECD 회원국의 평균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농업지표 측면에서도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내총생산에 대한 농림어업비율, 농가 호당 경지면적 및 영농선진화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영농기계화율 등의 지표 역시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농업 부문은 그 밖의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왔으며, 특히 지난 1992년부터 농업구조조정을 위해 추진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통한 구조조정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한 채 경제위기로 인한 체계적 지원 감소로 향후 정책적 노력과 시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관례상 특정 국가의 개도국지위 여부는 자기선언적 차원에서 결정된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우리의 어려운 여건을 다른 나라에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지난 1996년 선진국 모임이라 여겨지는 OECD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OECD 가입이 자동적으로 개도국지위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OECD 설립협정은 개도국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OECD 내에도 개도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원국들이 WTO 협정 내에서도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예컨대 OECD 회원국 가운데도 터키와 멕시코 등은 WTO 체제에서도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국은 OECD 가입 당시에 이미 환경 및 농업 부문에서 개도국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OECD 가입과 관련된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어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농업발전단계가 우리나라처럼 구조조정 단계에 처해 있는 협상 참가국을 규합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만 공조체제 구축이 가능한 국가의 수요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데, 우선 향후 WTO 농업협상에서 강한 협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더 나아가 케언스그룹 중 최근 공업화 성장전략을 취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는 아세안 개도국이 주요 잠재적 협력대상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공조국가를 규합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문은 일

반적인 농업발전단계에서 각국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잠재적 협력가능국가들에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업 부문에서 한국의 경우처럼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는 매우 민감한 협상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한국 농업은 향후 농산물 개방의 폭과 속도, 쌀 관세화 재협상 결과뿐만 아니라 개도국지위의 재확보 여부에 따라 그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 확보에 무엇보다 큰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더욱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논리개발을 통해서 농업 부문의 개도국 지위 확보에 최대한의 협상노력이 범부처적으로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처 간 효과적인 정책 조율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확보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대처방안이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어야 실제 협상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줄이면서 우리의 일관된 입장표명을 통해 협상력을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 부문 대응방안

연구자 : 최세균, 어명근, 허주녕

연구기간 : 2002. 5 ~ 2002.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국이자 소비 시장이면서 절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높은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경쟁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위치에 있다.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작금의 세계 경제 조류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에 대비하여 농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의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FTA 체결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대비한 농업 분야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중국 농업 및 한·중 간 농산물 교역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양국 간 FTA 체결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가 한국의 농산물 수출입 및 농업 생산과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고 품목별 생산 및 수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연구결과

먼저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비농업 부문까지 포함하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에 의해 한·중 FTA 체결의 파급 효과를 계측한 결과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은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산

물 수출은 9% 증가하는 반면 수입이 88%나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은 11%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품목별 농업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 결과 FTA 체결에 따른 쌀 생산 농가의 소득 감소액은 2010년 2조 원, 하계채소 농가는 2,800억 원, 그리고 과수농가는 183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축산물 소득 감소액은 880억 원, 특용작물 소득 손실은 400억 원, 시설채소 손실액은 1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 간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농업 생산 및 농가소득이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품목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곡물류 가운데 쌀은 시장접근(MMA) 물량이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옥수수는 동북 및 화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한국의 사료용 옥수수에 대한 실행관세가 매우 낮아 FTA 체결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고추, 마늘, 양파는 선택이나 맛 등 품질경쟁력도 지니고 있어 향후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수입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파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에 있어 관세 철폐 시 대량 수입이 예상된다.

중국산 돼지고기는 검역상 문제로 한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 상태이나 동물 위생 및 질병관리 강화로 검역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산 냉장육의 가격경쟁력은 매우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검역(WTO/SPS) 협정에 따라 중국이 특정 지역의 가축질병 무발생 증명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경우 수입금지 해제가 불가피하게 되어 중국산 돼지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산 육계의 수출가격은 타이산보다는 낮지만 미국산보다는 높으며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어도 미국산 육계에 비해 여전히 가격경쟁력이 낮다. 그러나 중국이 신선 육계 수출에 주력할 경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할 가

능성이 있다.

한국은 식물 검역상 문제로 중국산 신선과실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산 사과 가격경쟁력이 높아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고 중국이 식물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식물 검역 문제가 해결되면 중국산 사과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감귤과 신선 배의 수입 가능성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국산 농산물이 가격은 낮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상당수 품목의 고급품이 저급품과 함께 생산, 유통되고 있다. 또한 중앙 정부의 ‘녹색식품’ 생산 및 수출 장려 정책과 지역별 완전 무공해 농산물 생산에 따라 향후 청정식품 생산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는 국내 경제 각 부문에 미칠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국내 산업정책과 민감 부문의 구조조정 대책, 그리고 이익집단과 피해집단간의 합의 도출 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업계도 식량 안보 확보와 환경보전적 기능 외에 부분 취업에 의한 실업자 흡수 등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농업의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이해 확산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비한 농업 투자 확대와 구조조정 지원 등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농업발전 계획 수립 연구

연구자 : 권태진, 김영훈, 정정길,
전형진

연구기간 : 2001. 12 ~ 2002. 6

이 연구는 북한의 농업 상황을 진단하고 농업쇠퇴의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북한 농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과거의 북한 농업정책 추이와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의 상황과 발전 잠재력을 진단하여 제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북한 경제가 회복되어 농업생산기반이 복구되고 영농자재와 농기계를 충분히 공급하며 농업기술이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한다면 140만 ha의 농경지에서 최대 655만 톤의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곡물별 잠재생산량은 쌀 290만 톤, 옥수수 225만 톤, 보리/밀 30만 톤, 잡곡 11만 톤으로 추정되며 최근 중요한 식량으로 여겨지는 감자는 100만 톤(곡물환산량)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2001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과 비교할 때 80% 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현재의 식량 사정을 고려한 총소요량 500만 톤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소득증대에 따라 주민의 가공식품, 채소 및 육류 수요가 증대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1980년대 1인당 소비 수준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750만 톤 정도의 곡물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이 9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부문의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회복 등 경제 전반의 발전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농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자, 비료, 농약, 비닐 등 연관 산업이 정상화되어야만 한다. 또한 전기나 연

료의 부족으로 인한 농기계의 가동률 저하, 양수기나 탈곡기의 가동 중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경제의 회복을 통해 외환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주체농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농업관리조직 및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개발 경험에 비추어 북한은 농촌주민의 소득의 증대시키기 위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여야 하며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품목의 개발이 요구된다.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관과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농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는 새마을 사업은 북한의 농촌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운용체제를 개방화하고 시장 지향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빈곤함정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유입되어야 하며 산업의 성장기여도 면에서나 경쟁력 측면에서 농림어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투자의 방향에 있어서는 총생산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한계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투자전략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장효과와 효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북한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연관 효과가 큰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당장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인 토지와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할 것이다. 식품산업은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 투자가 촉진되어야 할 분야이며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농정의 핵심 목표인 식량의 완전자급을 지양하여 자급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현재의 100%에서 70%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식량의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 다양한 먹을거리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을 위한 원료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제한된 경지면적에서 당장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지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모작 및 감자생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옥수수 비중을 줄이고 콩, 채소 등 국민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작물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첫 단계의 목표로써 당면 식량 문제의 해결, 수해피해 농경지 및 시설의 복구, 농업인력 부족 해소, 협동농장의 효율적 경영을 들 수 있다.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필수 농자재의 확보와 적기 공급이 요구된다.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목표로써 농가소득의 증대,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농업유통 인프라 구축, 개방에 대비한 개별 농민의 경영능력 함양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개발 초기 단계에서 누에고치, 생사, 버섯통조림, 수산물 등 농림수산물이 전체 수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요한 외화 획득의 원천이었음을 상기한다면 북한의 중요한 자원인 산, 바다, 농지와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의 식품가공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추진한 바 있는 생산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국의 생산책임제 시행 과정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충분한 준비작업, 집단경영에서 개별 경영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이행, 적정 경영규모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고 있으므로 처음에는 분조에 청부하는 형태인 중국의 포산도조(包產到組) 형태가 적절할 것이며 경험을 쌓고 난 다음 개별 농가에 대한 생산청부제인 포산도호(包產到戶), 개별 농가에 대한 경영청부제인 포간도호(包干到戶)로 발전할 수 있다.

북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미국, 일본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 주변국들은 남북한이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이 세계화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서 지원

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 농업협력의 목표를 남북한 농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 실현보다는 북한 내부의 안정과 농업회복에 더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추구하되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경제협력에 따른 유무상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농업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 농업 분야 협력에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협력이 추진되기까지는 민간단체나 공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가능한 협력사업을 형태별로 분류하면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분야,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차관사업 등이 있다. 정부는 남북한 농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협력주체의 역할을 조정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농업교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민간 차원의 남북한 농업 분야 협력방안으로서는 교역활성화, 농업투자협력, 식량 또는 물자지원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교역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한 교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산지 증명, 물류비 절감, 제3국 농림수산물의 국내 위장반입,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설치, 반입제도와 관리방식의 개선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농업종합자금제도의 비전과 장단기 발전전략

연구자 : 박성재, 황의식, 박준기

연구기간 : 2002. 4 - 2002. 1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격 대상자의 선정과 농가의 과잉 투자로 인하여 지원농가의 부실화가 발생하였다는 반성에서 농업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농업종합자금제가 도입되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용제한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았다. 이런 농업종합자금제를 원예특작과 축산 부문에 도입한지도 올해 4년째가 되었다. 이제는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농업종합자금제는 정책금융 운용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사업 타당성과 사업의 적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자금 수요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을 충분히,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중시한다.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중시하고 세부적인 규칙과 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던 기존 정책금융의 경직성을 과감히 탈피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책목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정부는 그동안 원예·특작과 축산 부문의 자금을 통합한 데 이어 금년부터는 농기업경영자금 및 전업축산경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에 흡수하여, 자금공급규모를 2001년의 1,855억원에서 2002년에는 7,2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농업종합자금제가 농업정책금융의 핵심역할로 대두하면서 농협에서도 품목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대출심사모형을 개발

하는 등 많은 노력과 투자를 확대해 왔다. 자금을 이용해 본 농업인들도 신속한 대출과 자율적인 자금사용 등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업종합자금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자금통합 속도가 느리고, 농업정책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농업종합자금제 개념에 대해 관련자마다 서로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그 미래도 확실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일선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업무만 과중한 귀찮은 자금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품목별 수급조절의 수단을 상실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다.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추진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목표의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농업종합자금제도의 장기 비전과 비전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발전전략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 연구는 농업종합자금제도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장기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시에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과 발전전략에 따라 추진해야 될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2. 농업종합자금의 추진 현황

정책금융은 정부가 직접 또는 민간금융기관에 지시하거나 신용보증을 통하여 의도하는 부분에 공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정책금융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금융자금으로 상업금융의 보완수단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정책금융을 운용하는 나라는 정책금융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 그러나 정책금융은 산업구조조정 시기에 구조개선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때는 정책금융의 비중이 커지기도 하는데 현재 우리는 농업정책금융이 구조개선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어 농업금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정책금융의 효율성이 농업금융의 효율성을 결정하므로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우리 농업정책금융은 자금종류가 많고, 행정기관이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부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업신청에서 지원까지 1년 반 이상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적기투자가 곤란했으며, 세세한 부분까지의 용도규정으로 농가의 자금이용에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다. 농업종합자금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농업금융 시스템을 향상시키고자 도입한 것이다.

1999년에 원예특작, 축산 부문에 도입되어 17개 지구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함으로써 농업종합자금제가 시작되었다. 2002년에 지원규모는 7,230 억원으로 전체 농업정책금융 공급액의 13.0%를 차지하고, 일반농업경영자금(68.7%)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4%이다. 2002년 8월 말 현재 대출건수는 18,979건에 잔액은 5,560억원이었다. 이용금액별로 보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50.9%(건수 기준)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2천만 원 미만으로 37.2%이었다. 2000년까지는 시설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운전자금을 대출해 주었으나 2001년부터 운전자금만 원해도 대출해주면서 평균이용규모가 크게 줄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배분 정도를 보면 2000년까지는 시설자금이 83.1%이었으나 2002년 8월에는 28.2%로 급격히 떨어졌다. 신규자금 수요의 대부분이 운전자금에 몰리고 있는데, 이는 농업 부문의 신규투자를 어렵게 하는 불안요인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시설자금에 대한 심사규정이 까다로운 것도 한 요인이다. 시설자금은 시공지침에 의해 감리, 세금계산서 제출 등 시공비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금리우대를 상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금을 신청해서 시설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품목별로는 2001년까지는 원예특작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이 대출되었으나(60.3%), 그 후 축산 부문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54.7%). 지역별로도 배분비율을 보면 연도별로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 농업종합자금제 도입 전인 1996~1998년과 도입 후인 2000~2002. 8월의 지역별 배분비중의 변동크기를 비교해 볼 때 도입 후가 전보다 더 변동의 크기가 컸

다. 과거의 정책금융은 품목별, 지역별 자금배분시 형평성이 우선되었지만 농업종합자금은 농가의 자금수요를 중심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종합자금의 재원은 2001년까지는 국고가 80%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에는 20.5%로 급감하였다. 국고 용자규모에는 변화가 없으나 농기업경영자금과 전업축산경영자금 등이 포함되면서 금융자금의 비중이 높아진 탓이다. 재원이 국고인 경우 농협은 취급수수료 1.0%를 수취하게 되고, 금융자금일 때는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만큼을 보상하고 있다. 국고자금의 취급수수료 1.0%는 농업종합자금 취급비용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수익으로 농업종합자금의 취급비용을 충분히 보상하는가가 쟁점으로 남는다. 농업종합자금제가 농업금융을 혁신하는 과제이어서 투자확대가 필요한데 수익이 낮으면 투자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종합자금 대출규모별 취급사무소의 분포를 보면 2001년에는 3억원 미만인 56%, 2002. 8월에는 57% 수준이고, 10억원 이상인 사무소는 각각 13.1%와 16.6%이었다. 아직은 대출의 규모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농협입장에서 수입단가가 높은 이차보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인건비로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업종합자금제의 도입으로 농업금융의 혁신이 유도되고, 그로 인해 농협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만 농업종합자금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농업종합자금제에서는 농업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농업경영 컨설팅은 미래의 성장 부문으로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은 시장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정부에서 보조지원하는 시장만 보면 2002년에 594건에 39억 9천만원 수준에 불과한 시장규모이다. 등록된 업체는 67개이나 농림부 지원 컨설팅 사업을 계약한 업체는 51개이고, 그나마 대부분이 1억원 미만으로 그 비중이 74.6%나 되어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축산 부문에 편중되어 2002년 지원사업의 85.2%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시작 연도인 1999년에는 컨설팅을 신청한 농업경영체가 264건이었

으나 2002년에는 970건으로 3.7배가 증가하였고, 앞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위험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농업종합자금의 성과와 문제점

농업종합자금제의 성과 평가 기준은 목표의 실현정도와 우려했던 부작용의 최소화 정도가 될 것이다. 농업종합자금은 자금통합으로 농가 수요에 따라 지원, 적기대출, 엄격한 심사로 성공가능성 제고,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대출심사 평가 등 금융기법의 선진화 등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대출심사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여 신용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를 평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종합자금제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 농협의 자금담당자, 시·군 농정담당 공무원들이 보는 추진성과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자금통합의 정도는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으나 통합의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인이 보는 성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자금통합을 들었고, 그다음이 즉시 대출로 시간 절약, 엄격한 심사로 올바른 자금사용 등을 들었다. 자금통합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제가 확립되었고, 적기, 적량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계획대비 자금지원 실적도 높아 우려했던 신용경색의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다만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는 신청대비 대출결정 비율이 낮아 신용경색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업성이 있는 농가에게 지원되었기 때문에 자금배분의 효율성은 제고되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는 지표로는 지역별, 품목별 배분비율의 변동의 크기로 삼았다. 지역 간 자금배분 비율은 자금의 도입을 전후로 해서 상당한 편차를 보였는데, 농업종합자금이 도입된 후 경기, 강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편차가 커졌다. 이는 기존의 정책금융으로는 형평성 기준에 의해 지역 간 배분기준이 고정적이었을 것이나 농업종합자

금제에서는 지역의 농업성장에 따른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자금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품목별로도 원예특작과 축산 부문에 대한 배분비율이 연도별로 매우 커서 이러한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즉 자원이 수요 중심으로 배분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업종합자금제 도입으로 관련투자가 확대되면서 농업금융 혁신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인다. 제한된 자료이지만 처음으로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평가(EVA), 비재무평가지표의 개발, 회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품목별 전문가 양성과 경영실태 조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농업인, 농협직원, 공무원의 평가는 대체로 농업종합자금제가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고, 다른 정책자금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농업인은 성공적으로 보는 쪽이 57%, 실패로 보는 쪽이 9.9%이었고, 농협직원은 성공 45.7%, 실패 5.2%, 공무원은 성공 43.4%, 실패 20.8%로 보았다. 농업인 중에서도 농업종합자금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농가가 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농업종합자금제에 대한 개념혼란, 지원조건에 대한 불만, 자금통합의 지체, 취급 사무소의 비용증가, 대출심사 때의 이용 정보 부족, 전문인력 양성의 곤란 등이 지적되었다.

종합자금제의 개념을 입장에 따라 자금통합, 건전한 경영체의 선별지원, 완벽한 지도금융의 실현 등 3가지의 해석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책추진방향이 모호해지는 면이 있다.

지원조건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발전기금 등의 이자율이 농업종합자금보다 낮고 심사기준도 간단하여 농업종합자금의 선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농업종합자금은 지자체의 자금과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나 부분적으로는 지원조건 개선이 필요한 점이 인정된다. 농가는

어려운 심사자료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지원 조건이 보다 불리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자체의 자금이 많은 곳에서는 농업종합자금의 수요가 적어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대출심사 시 가장 큰 애로요인이 품목별 수익성과 시장전망 자료인데 이에 대해서는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금융은 정보창출의 산업이기 때문이다. 취급사무소의 인력도 순환배치로 인해 경력이 축적되지 않아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농업종합자금의 취급비용이 커서 어려움이 있다. 취급사무소당 취급 규모가 적은 것이 근본 문제이나, 현재와 같은 기조로 운용한다면 앞으로도 단위사무소당 취급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다. 종합자금의 영향으로 기술혁신 효과가 확산되지 않는 한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요소가 있다.

4. 선진국의 농업정책금융

유럽과 미국은 정책금융을 철저히 상업금융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정책금융은 시장실패 부문에 대해서 보완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충실하다. 따라서 선진국은 농업금융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유럽 국가들은 정책금융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농가에 대한 직접 보조를 높였다. 독일의 경우 직접 지불에 의한 보조가 농가 지원자금의 97%를 차지하며, 정책금융은 3%에 불과하다.

농업금융은 대부분이 협동조합이 담당하지만 일반 상업은행과의 경쟁이 심하다. 농업정책금융은 금융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차만 보상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일반 상업은행의 점유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프랑스가 대상자 선정에서 금융기관의 영향력이 약한 반면에 독일은 금융기관의 대출 받고 난 다음 농업회의소에 이자보조를 신청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영향력이 더 크다.

프랑스는 은행본부가 정책금융의 취급을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수수료의 시비가 있을 수 없다. 독일은 차입자에게 직접 이자보

조를 해주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미국은 신용보증만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은 독일과 같다. 그러나 일본은 이차보상제도와 이차보조제도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차보상에는 우리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불투명한 요소가 있다.

농업정책자금의 종류는 서구 선진국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대단히 많고 복잡하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정책금융의 비중이 적은 나라에서는 종류도 많지 않고 용도에 대해 세세한 규정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점검하지만 자금의 사용은 농가에게 신축성을 부여한다. 지원조건도 정책자금의 이자율은 과거에는 시중금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저금리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어 시중자금보다 크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진국의 농업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고객과 사업 부문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기초로 자료의 관리와 정보의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금융비용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질서 의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고 경영에 대한 자기책임 의식이 강해 건전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

농가의 경영기록은 금융거래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며 이외에도 사업계획 수립, 경영진단, 세금납부 등에도 활용된다. 그러나 이 경영기록을 농가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고 전문 회계법인 등이 대신 작성해 준다. 농가는 경영기록을 위한 재료인 영수증을 모았다 건네주면 되는 것이다. 회계법인은 경영장부를 작성해주면서 농가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경영, 회계, 경제, 법률 등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경영 컨설팅 서비스 업체가 되는 경향이 있다.

농가의 경영장부 작성은 조세제도와 직접 지불에 의한 보조금 증대, 환경농업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농업종합자금의 대출용으로만 농가의 경영장부 작성을 독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시기가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농업종합자금의 비전과 발전방향

농산물 시장개방과 국내생산의 증가로 농업 부문은 공급과잉단계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어 수익성 저하되고 있다. WTO 체제 하에서는 국내가격의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조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농업정책금융은 농업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업농을 중심으로 구조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금융여건도 자율화와 개방으로 경쟁은 치열해지고 금융권간 벽도 없어져 시장이 통합되어 가고 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시장신뢰의 확보와 정보처리 비용의 우위에 의해 결정된다. 농업금융을 전담해 온 농협이 장기적으로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보다 빨리 적응해야 한다. 미래의 농업전망이 매우 어둡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농업과 금융 여건의 급변 상황을 감안할 때 농업정책금융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농업의 경쟁력 강화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농업이 국제적인 경쟁무대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개선 단계에서는 정책금융이 시장실패의 보완수단이라기보다는 구조개선 수단으로서 더 기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책금융은 과거와 같이 정부의 기획에 의해 의도하는 부분으로 배분되어서는 정책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농산물 시장은 공급과잉단계에 있으며 정부가 시장의 요구를 개별 경제주체보다 더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금융이라 해도 시장의 수요와 수요자의 자율적인 의사판단에 따르는 탄력적인 금융이 되어야 한다.

정책금융이 농업금융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시장 기능을 살리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앞선 농가 중심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농업종합자금이 선진금융기법으로 엄격히 심사해서 농가를 선정한다는 것이 시장에 잘 알려지면 탈락농가는 다른 곳에서 자금 얻기는 더욱 어

려워질 것이다. 심사에서 탈락하는 농가 중에도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 의해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고, 과도한 부채규모가 사업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업능력을 갖춘 농가를 구제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여건 변화와 농업금융의 제약조건을 감안할 때 농업종합자금의 장기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농업경쟁력 제고를 촉진하는 산업금융이다. 금융의 자원배분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농가를 선별하고, 농가의 자본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어 전체적인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생산금융이 되어야 한다.

둘째, 농업금융의 혁신을 유도하는 선도금융이다. 농업종합자금은 현재로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로 인해 금융의 하부구조가 튼튼해지면 금융의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금융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별 지원함으로써 자원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부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부담을 억제한다.

넷째, 종합적인 정보관리를 담당하는 최적금융이다. 농업종합자금은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근거로 삼아 대출해주며, 사업 여건에 맞게 지원해 준다. 이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분석을 통해 가능해진다. 농업정책금융은 대상그룹을 명확히 하고 그 성격에 맞는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업농 중심으로 지원하고, 영세소농이나 취미농처럼 자금수요가 크지 않은 농가들에게만 현재의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전업농 중에서도 경영이 부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신규진입농에 대한 자금은 ‘창업지원금융자금’(가칭)으로 통합 운용한다. 마지막으로 신기술도입, 개척 분야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특수목적성 자금으로 운용한다.

종합자금의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정책금융 운용의 근거

틀로서 종합자금 지원방식을 채택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원 대상의 성격에 따라 자금의 운용과 지원조건 등을 달리할 필요는 있지만 수요자의 의사와 편의를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장기 정책금융 발전계획과 연계한 단계적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유리한 조건의 정책금융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 언정 충분조건까지는 될 수 없다. 때가 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진정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아가 정책금융이 상업금융을 구축하는 정도가 지나쳐서도 안되기 때문에 시장구조와 경쟁력 발전정도를 가늠하고, 중장기투융자계획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셋째, 대출농가 위주의 「종합정보관리모형」을 구축 활용한다. 종합자금이 선진금융으로서 농업금융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와 활용면에서 앞서 가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최소의 비용으로 창출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농업구조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농업금융의 중심자금으로 운용한다. 종합자금은 농업생산, 유통·가공, 농촌개발 등 개별 경영체를 지원하는 모든 자금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야 농업금융을 선도하고 비전실현을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종합자금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속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자금통합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 정책적 약속을 미룬다는 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원조건에서도 다른 정책자금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자금에 대해 불리하게 설정되어 농가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세금계산서, 시공지침 등의 규제는 보다 완화하여야 하고, 확증이 필요하지 않는 자금지원의 한도를 30% 정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취급사무소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현재의 취급수수료로는 취급사무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인하기 어렵다. 농업종합자금의 도입 초기인 만큼 수수료율을 인상하던가 해당 조합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이차보상해 주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심사의 선진화를 위해 현재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핵심요소를 정확히 파악 지표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취급사무소의 업무담당자들과의 의견교류를 활발히 하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출심사 시 중앙에서 제공된 참고자료는 전국 또는 지방의 평균자료인 경우가 많아 개별 경영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수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례를 모으면 유용한 정보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품목별·업종별 농업경영체의 경영실상을 알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조속히 생산해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농가경제통계는 전국평균농가의 정보로서는 유용하지만 현재의 변화된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농업종합자금의 정보관리는 농업경영체의 경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불안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경고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대출농가의 관리정보를 활용하여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업경영체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농협내부는 물론 기술센터, 학계, 행정기관 등과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정보의 교류를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경영실태조사는 앞으로 큰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건수가 누적되면 사실상 실시하기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항목수의 조정, 핵심 항목의 파악, 조사대상의 유형구분, 조사시기의 조정 등을 위한 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자금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하부구조의 강화가 절실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의 경영장부 기록과 경영컨설팅 사업이다. 농가의 경영장부는 현재로서는 큰 효력 있는 인센티브를 찾기 어렵다. 다만 정확한 자료를 공급하는 농가에게 일정액의 이자 인하와 장부작성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조세제도가 가장 큰 인센티브였는데, 앞으로 직접 지불 등의 보조금

확대와 관련하여 경영 상태 정보를 줄 경우에 보조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영 컨설팅의 확산을 위해서는 컨설팅의 효력이 확실히 드러난 사례가 필요하다. 현재의 컨설팅업체들은 기술 컨설팅 중심이어서 경영이나 회계 부문에서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하기 힘들다.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회계업체가 경영장부기록과 관련하여 컨설팅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부실경영체의 회생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이 큰 효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 분야는 시장도 형성초기인데다 정부가 정한 보조기준이 가격으로 작용하여 능력 있는 컨설턴트의 양성이 어려운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북한 농업 및 농정 동향 분석

연 구 자 : 권태진, 최봉석

연구기간 : 2002. 7 ~ 2002. 12

2002년도 북한의 경제동향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상반기는 신년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북한의 경제 전략이 4대 제일주의(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천명하며 이를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에너지 부족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취공업에 힘을 쏟는 한편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 운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해남도 경지정리작업과 개천-태성호 수로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곡물을 증산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일차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에서 ‘주체적 계획경제 관리원칙’과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발전을 국가 차원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면서 정보기술과 정보산업 발전에 전력을 쏟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는 한편 시급을 요하는 분야부터 공업 기술 개선과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2002년 7월 1일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가격과 임금을 현실화하였다. 둘째, 환율이 인상되었다. 셋째, 배급제의 틀이 변화되었다. 넷째, 공장·기업소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기업에는 자율권과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다섯째, 계획의 분권화를 확대하였다. 지방공업은 시·군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2002년 신년 공동사설에 나타난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농업부문에서는 소위 ‘김정일이 제시한 농업정책’의 범주를 벗어난 새로운 정책 제시는 없었다. 다만 김일성 전 주석의 탄생 90돌을 맞아 이미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다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자연개조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하였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은 소위 ‘김정일이 제시한 농업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체농법, △감자농사혁명, △종자혁명, △토지정리사업, △두벌농사(2모작), △적기적작·적지적작,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업 발전, △복합미생물 비료의 이용 확대, △평야지대의 벼농사, △농촌지원사업, △과수업의 발전, △양어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2년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은 200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농림수산물 총교역액은 2억 1,01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71.8%나 증가하였다. 농수산물 반입은 전년에 비해 11.2%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반출은 39.1%나 증가하였다. 수산물을 제외한 농림산물의 반입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러나 농림산물의 반출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농림수산물의 반출입이 전체 교역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7%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반입량 중에서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36.8%, 반출 중에서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9.8%이다. 2002년 반출액 중에서 농림수산물의 비중이 높은 것은 9월부터 장기 저리 차관에 의한 대북 쌀 지원이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지원키로 약속한 40만 톤의 쌀 중에서 금년 중에 376,000 톤의 쌀이 인도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9,150만 달러로 2002년 북한에 반출한 농림수산물의 83.0%를 차지한다. 따라서 대북 쌀 차관을 제외하면 전년에 비해 농림수산물의 반출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물의 교역

규모도 축소된 것이다.

2002년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액은 1억 3,492억 달러(1,716억원)로 2001년의 1억 3,539만 달러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 중 정부 차원의 지원은 8,375만 달러로 2001년도의 7,045만 달러에 비해 19% 증가하였으며 민간 차원의 지원은 5,117만 달러로 2001년의 6,494만 달러에 비해 21% 감소하였다. 분야별 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일반구호 4,174만 달러, 농업복구 7,351만 달러, 보건의료 1,967만 달러로 농업복구가 전체 지원액의 54.5%를 차지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비료 직접 지원 30만 톤,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옥수수 지원 10만 톤, 세계보건기구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약 등을 지원하였다. 이 밖에 정부 차원에서는 쌀 40만 톤을 장기 저리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하였다.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은 개별단체 지원이 4,368만 달러로 전체 민간지원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적 창구를 통한 지원은 749만 달러였다. 한적 창구를 통해 봄에 20만 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한데 이어 가을에도 1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함으로써 금년에 총 3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하여 북한의 비료부족을 해소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2001년에는 개별단체 대 한적 창구 비율이 66:34로써 2002년에는 개별단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에도 북한의 식량 사정은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외부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북한 스스로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어렵고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하여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북한 당국자 간 농업협상을 위한 의제개발 및 대응방안

연 구 진 : 김영훈, 최봉석, 김은영

연구기간 : 2002. 7 ~ 2002. 12

최근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2002.7)를 시행하고 행정특구와 경제특구를 연이어 지정하는 등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 관계도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 실무협의회 등 경제교류협력 관련 회담이 잇달아 개최되어 실질적인 관계개선 시대를 맞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적 조치와 남북한 관계 개선은 남북한 간에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이 본격 협의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남북한 관계가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환될 즈음 양측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다시 정체에 빠졌던 경험이 많다. 그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측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즉, 남북한 양측은 경제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접근 방법에 대해 미리 심사숙고하여 경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남한의 일방적인 의지와 정책으로만 추진할 수는 없다. 우선 북한 측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남북한 당국자 회담에서 '의제' 형태로 상정되고 논의함으로써 비로소 양측의 의사가 확인되고 교류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상을 위한 의제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는 남북협상과 농업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교류협력 관련 의제를 사전에 개발·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84년에 개최된 최초의 경제협력 관련 회담은 당시의 남북한 관계와 양측의 준비 상태를 고려할 때 다소 비현실적인 의제가 상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접촉(1984.12)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측의 의견이 접근한 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2차 접촉(1985.5)부터는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실리를 취하기 어려운 제의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하여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속출했다. 경제회담에 대한 양측의 세부 준비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합의 도출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경제 관련 회담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다. 대북 물자지원이 지렛대의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꾸준히 추진해 온 남한의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북한의 개방적 자세가 남북 경제회담의 진전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2000년 하반기에 개최된 남북 경제협력 실무접촉에서는 경제교류협력 관련 제도적 장치(4개 합의서) 마련이 의제로 상정되어 대부분의 사항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이 회담은 남북한 민간 부문의 경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0년부터 시작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는 2002년 11월까지 3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주요 협상의제를 보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 경협 관련 4개 합의서의 발효 노력, 전력협력, 철도도로 연결 협력, 개성공단 건설 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 임남담 공동조사, 교역상품의 원산지증명 협력 노력,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남북한 간 해운 및 동해어장 공동 이용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대부분의 의제에서 진전을 보고 있으며 육로 연결, 경제시찰단 방문, 개성공단 협력 등은 실행 단계에 있다. 이 사실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 '선언적 단계'에서 '실질적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 경제회담에서 농업 부문의 교류협력과 직접 관련된 의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으나, 다음과 같은 의제와 제안들은 농업교류협력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남북 당국자 회

담에서 제기되고 논의된 식량 및 비료지원 관련 의제이다. 둘째, 베를린 선언(2000.3)의 북한 농업복구개발 지원 의사 표명을 들 수 있다. 셋째, 경험활성화와 관련된 의제를 들 수 있다. 4개 경험관련합의서 체결, 경제교류협력 전담 창구 설치, 남북한 간 육로 확보와 통행협정 체결, 남북 간 상품 교역 활성화를 위한 원산지 증명 협력 등은 농업 부문의 교류협력 활성화에도 중요한 요건이 되는 사안들이다.

이러한 기존의 의제(제안)와 남북한 간 농업교류협력 수요를 비교하여, 농업 부문의 남북회담 의제를 새롭게 개발하고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인도적 물자지원 분야에서는 지원물자의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당초 목표한 수혜자에게 지원물자가 분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식량지원 효과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 의제는 방문조사 방법과 범위, 북한 당국의 보장, 상설사무소 설치 등이다.

농업복구개발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첫째, 농업기자재 공급을 지원하여 단기적으로 농업생산을 향상시킨다. 둘째, 재해를 입거나 노후한 농업생산기반과 설비를 복구하고, 새로운 농업생산기술을 보급하여 중장기적으로 농업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셋째, 황폐해진 산림환경을 복구하여 장기적으로 자연재해를 감소시키고 산림과 환경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넷째, 각 분야의 농업복구개발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참여함으로써 북한 측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의 능력 향상에 일조한다. 농업복구개발협력과 관련된 세부 협상 의제는 광범위하지만 중요한 것으로는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지원 분야 선정, 물자지원 품목 및 규모, 기술 및 전문인력 지원 분야, 조사 및 평가 방식, 지원방식(ODA무상지원, EDCF 차관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농업복구개발 협력이 의제화되기 위한 조건은 남한 당국의 지원의지와 북한의 북측의 개방적인 자세이다.

농업개발 협력에 포함되지만 대규모 협력과 구분되는 것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배후지 농업개발 협력을 들 수 있다. 특구 배후지 시범농장

개발협력의 목적은 경제특구라는 소지역을 협력대상으로 국한하여 상업적 농업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실험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된 협상의제는 새로운 AREP계획 협력에 해당되는 의제 대부분과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특구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시범농장에 공급되는 영농자재 유통시설 설치 등이다.

농업 부문의 경협사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남북한 당국자 간에 협의해야 할 대부분의 사안이 협의 중이거나 이미 합의된 상태이다. 아직 협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안 중 농업교류협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교역상품의 원산지 증명과 검역 문제이다.

농업은 경제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남북한 농업 관련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창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이 창구가 설치된다면 남북농업교류협력 전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교류협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농업교류협력과 관련된 여러 협상과제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우선순위를 뚜렷하게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순차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협력사업 추진 가능성, 협력사업 추진 필요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양측의 준비(비용 포함) 등을 고려하여 ① 남북경추위 산하에 농업협력분과위원회 구성, ② 경제특구 배후지 농업개발 협력, ③ 지원식량 배분의 투명성 제고, ④ 농림산물 원산지 증명 및 검역, ⑤ 농업복구 개발 협력 순으로 협상 순서를 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협상과제의 세부의제는 일괄적으로 협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GM 작물의 경제성 및 소비자 선호도 분석

연구자 : 임송수, 김배성, 김상현

연구기간 : 2002. 7 ~ 2002.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이 상업화된 1996년 이후에 그 재배면적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품종 및 생산국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GM 농산물의 국제 교역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콩, 옥수수 등 GM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의 GM 농산물 생산 동향과 상품화 및 개발 완료된 GM 농산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주요 GM 농산물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GM 농산물의 경제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 GM 농산물의 국내 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벼, 밀, 양배추, 토마토, 상추, 고추, 감자, 들깨, 국화, 마늘 등 16작물 40여종의 GM 농산물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4~5년 이후에는 일부 GM 농산물이 상업화돼 유통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3. GM 농산물의 경제성 분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산자의 49%가 GM 농산물을 재배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GM 농산물의 보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GM 종자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일반 종자의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단수 증대가 기

대된다. 2001년 기준으로 GM 쌀의 10a 당 생산비는 일반 쌀의 경우보다 4% 포인트 낮은 것으로 시산됐다. 수요 측면에서 GM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나 섭취 의사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GM 농산물에 대한 제한된 소비 수요를 뜻하며, 이는 수출 수요가 없다는 가정 아래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4.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주부 842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서 GM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정도는 높은 반면에 그 구매나 섭취 의향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7%가 경험이 있다고 밝혀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에 GM 농산물이 인체 및 환경에 위해할 것이란 응답은 73%로 높게 나타났다. GM 농산물(또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72%로 나타났으며 이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7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암 예방 물질을 함유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된 GM 농산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긍정적인 구매 의향을 밝힌 점은 기능성 GM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5. GM 농산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방향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알기 쉽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공공 인식을 높이는 데 있어 언론 매체의 정보전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해 공동의 또는 공공의 관심 사항을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모임이 만들어져 활용돼

야 한다. 셋째, GM 농산물의 잠재적 손익, 안전성, 법 규정, 소비자 관심 사항 등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결성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GM 농산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인터넷 사이트와 일반인들이 GM 농산물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WTO 농업협상에 농업의 비교역적 사항 반영 방안

연구자 : 임송수, 이재옥

연구기간 : 2002. 8. ~ 2002.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한다.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에서 회원국들은 NTC 반영 여부에 관해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NTC를 농업협정에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WTO 농업협상의 틀 안에서 NTC의 개념과 범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정의하고 규정하며, 관련 주요 쟁점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농업협정에 NTC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우리나라의 NTC

우리나라가 강조해야 할 NTC로서 식량안보, 소규모 가족농, 농업경관, 농촌활력 등을 제시했다. 첫째, 식량안보이다. 쌀과 곡물의 재배면적 지표, 생산량 지표, 재고율 지표, 자급률 지표 등을 설정해 그 추이를 살펴봤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취약하고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규모 가족농이다. 우리나라에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경영규모, 농업소득 대 농가소득의 비율, 농가소득 대 도시 근로자 가계소득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소규모 가족농의 개념

을 정의하면 1.0ha 또는 1.5ha 정도의 경영규모를 갖춘 농가가 해당된다. 소규모 가족농의 소득 측면의 지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업 경관이다. 우리나라 농업에서 농업 경관에 대한 개념은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경사도 7% 이상의 계단식 논, 환경 친화한 영농방식을 채택한 논둑의 길이, 제주도 밭과 과원 주변의 돌담 길이, 농지의 사용 형태(확대-축소 지표, 집약화-조방화 지표, 집중화-한계화 지표 등), 농지 사용의 다각화(Herfindahl 지수) 등을 농업 경관의 구성요소로 정의했다. 논둑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관 요소들은 악화 내지는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농촌 활력(농촌 개발)이다. 농촌 활력은 다른 NTC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용 및 소득 창출 효과에만 초점을 뒀다. 농가인구의 구성비, 농림업 취업자의 구성비, 농가의 교역조건, 도농 소득격차 등의 지표를 설정해 산출한 결과, 농촌 활력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WTO 농업협정에 NTC 반영 방안

우리나라 농업의 NTC가 위축 내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고유의 NTC를 지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WTO 농업협정의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정개혁과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NTC의 적절한 반영은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식량안보에 대한 제안이다.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우선순위는 주곡의 국내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공급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안보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접근 분야에서 주곡인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부속서 5 Section B)는 지속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주곡에 대한 지원을 허용 보조로 인정하되 생산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기준연도와 인플레이션

을 감안한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주곡에 대한 최소 허용조치(*de minimis*)의 기준은 생산액의 10%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끝으로 그린박스 조치 가운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에 관한 규정은 주곡의 적절 재고량(소비량의 17-18%)의 한도 안에서 지금의 시중가격이 아닌 관리가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둘째,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제안이다. 소규모 가족농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근간이며 다양한 NTC 기능을 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특별 조치가 허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린박스 조치의 일환으로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소득보조(*payments for small family farms*)’의 조항을 새로 만들고 평균 도시가계소득 수준에 형평을 맞춘 소득 보조가 소규모 가족농을 대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또는 기존의 그린박스 제6항 ‘비연계 소득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 조항을 조정해 농업생산을 조건으로 평균 도시가계소득 수준과 형평을 맞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안한다.

끝으로, 농촌 활력에 대한 제안이다. 농업의 성장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필요조건이며, 농업 성장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과 생산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 조치가 유효하다. 이는 농촌의 활력 유지와 직결되며, 따라서 적절한 농업생산과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의 고용 창출과 소득효과 차원에서 농가의 고용임금에 대한 보조(일종의 투입재 보조)가 허용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또한 그린박스 제7항 ‘소득 보험과 소득 안전망(*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의 요건 가운데 조치의 발동 기준인 평균 농업 조수입의 30% 이상 손실을 15%로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보상 수준도 현행 수입 감소분의 최대 70%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진행 중인 WTO 농업협상에서 NTC에 관한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회원국 사이의 공조체제 등을 통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농업의 NTC 기능 제공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더욱 적극적인 국내 농업정책 차원의 수용도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방안 연구(3/3차년도)

연구자 : 권태진, 김영훈, 정정길,
전형진, 이상민

연구기간 : 1999. 7 ~ 2002. 7

북한의 농업생산 기반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 이외에 인공위성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하였다. 사용된 영상자료는 북한 전역에 대해서로 다른 두 시기의 Landsat TM 자료이다. 이외 보조자료로써 1:50,000 지형도(228도폭), 수치고도자료(Digital Elevation Model(DEM) - 1"), DGPS(Trimble. Co.)를 활용하였다. 주로 사용된 Software는 Imagine 8.4(Erdas. Co.)와 ArcView 3.2(Esri. Co.)이다.

우선 행정구역별 농업생산기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 전역을 및 시군별로 구분하고 수자원 분포를 파악하였다. 수자원은 하천, 저수지로 구분하였다. 행정구역별 경사별 면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사도를 A(0-2%), B(2-7%), C(7-15%), D(15-30%), E(30-60%), F(>60%)의 6단계로 분류하였다.

북한 전 지역 피복분류결과 삼림 8,514천ha (63.1%), 밭 1,924천ha (14.2%), 나지 812천ha (6%), 논 523천ha (3.9%), 초지 141천ha (1%), 기타 194천ha (1.4%)로 분포하였다. 논 면적과 밭 면적을 비교한 결과는 논 면적은 황해남도가 143.7천ha로 가장 넓었고, 밭 면적은 평안남도가 259천ha로 가장 넓게 분포하였다.

논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발표하고 있는 58-60만 ha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영상자료의 촬영 시점에 따라 일모작과 이모작 논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일모작 논을 기준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과소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옥수수의 재배

면적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를 적용하여 옥수수, 도심, 삼림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한 결과 옥수수 재배면적은 7,868.5km²가 추출되었으며 전체면적 39,644.1km²에 대비하여 19.9%를 차지하였다.

수계별 농업생산기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해안과 동해안의 수계별로 하천과 저수지를 구분하여 수자원을 파악하였다. 수계별 토지피복 분류는 논, 밭, 간척지, 초지, 삼림, 나지, 인공건조물, 수역, 염전, 구름 등 10가지로 분류하였다. 서해안 수계는 논 5.2%, 밭 16.8%, 간척지 0.3%, 초지 0.9%, 삼림 66.1%, 나지 7.8%, 인공건조물 0.9%, 수역 1.7% 등으로 분류되었다. 동해안 수계는 논 면적 비율이 2.1%, 밭 면적 비율이 13.4%, 삼림은 76.8%로 분류되어 서해안에 비해 논과 밭 면적 비율이 적은 반면 삼림 비율은 높았다. 논지역에 대한 경사별 비율을 비교한 결과, A(0-2%) 85.8%, B(2-7%) 9.7%인 반면 밭은 A(0-2%) 34.3%, B(2-7%) 11%, C(7-15%) 15.2%, D(15-30%) 21.5%, E(30-60%) 16%, F(>60%) 2%로 전 영역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통해 분석된 북한의 농업기반 정보는 향후 북한 농업 생산기반정보 Database로 활용하기 위하여 GIS를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에는 북한의 행정구역별, 유역별 각종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황폐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Landsat TM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하였다. 지피 식생의 변화에 따른 황폐지 분류를 위하여 동일 지역의 서로 다른 두 계절의 위성 영상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토면적 12,299천ha 중 13.3%인 1,632천ha가 황폐산지로 구분되었다. 행정구역별로는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등 북한 서부지역의 황폐산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북한의 농업용수체계는 대부분이 규모가 과대하여 용수로 연장 과다, 수로손실에 의해 수량이 감소, 수로 유지관리 비용 증대 등 비효율성 초래하고 있다. 북한에는 저수지가 1,800개소가 있지만 저수용량이 3만 톤 이상의 저수지는 800여 개소에 불과하다. 남한의 경우 10만 톤 이상의 저수지가 약 18,000개소에 이른다.

통일 후 농업기반에 대한 단기수요를 추정하였다. 농업생산기반 및 산림환경의 복구 및 건설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대규모 투자사업은 통일 후 통일정부의 실행 의지와 재정적 능력에 따라 추진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장기 투자 프로그램들이 준비되는 동안 생산의 빠른 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저비용의 일시적인 수단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3~5년의 중단기 농업생산기반 및 산림환경 복구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농업기반에 대한 단기 수요로서는 홍수피해 농업기반의 복구가 가장 시급하다. 농경지 복구, 해일로 인해 파손된 방조제 복구, 광산침하지 농경지 및 생산기반시설 복구, 노후된 양수시설 및 파이프 복구가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관개체계 개편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데 현재 북한에서 양수식 관개를 중력식으로 전환하기 위한수로 개선 프로젝트가 제안되어 있다. 현재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이들 관개체계 개편 프로젝트에 대해 타당성조사가 필요하고, 타당성 여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경작지 보호를 위한 산림 복구도 매우 중요하다. 삼림지대 내에 개간된 경작지를 대상으로 다시 조림할 지역과 경작지로 구분하고, 경작지는 구조물/계단, 보호식수 등을 식재할 필요가 있다. 총 10,000ha가 우선적 대상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식목 및 사방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용재림 조성과 양묘장 복구도 필요하다.

농업생산기반 단기 복구비용은 농지, 광산침하지, 양수장 파이프, 방조제 복구 및 산림복구에 총 3조3천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수농가의 투자결정 모형과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자 : 박성재, 박준기, 정학균

연구기간 : 2001. 8 ~ 2002. 8

가. 연구 필요성

- 투자결정은 영농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가는 과학적 객관적 투자분석보다는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농업투자를 결정하고 있음.
 - 경제적 비용 개념이 없어 감가상각비 등을 누락하여 비용을 과소평가하거나, 장기적인 수익발생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지 못해 수익의 과대평가로 과잉투자 유발
- 이론이나 개발된 투자분석 기법을 농가가 직접 응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 많은 경우 농가의 경영정보 부족을 탓하지만 주변에는 이미 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려는 노력 부족이 더 문제라 할 수 있음.
- 컴퓨터 보급으로 이론이나 경영분석기법을 농가단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물적 토대는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에게 요구하고 농가가 입력한 정보를 분석해 준다면 과학적 투자분석을 농가단위에서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임.
- 농업 부문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농가가 우선 그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사전적으로 과학적인 투자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보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함

나. 연구 목적 및 범위

□ 목적

- 투자분석기법을 모르는 농가라도 기초적인 컴퓨터 조작능력만 있으면 과학적인 투자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투자모형과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 과수농가의 경영관리 및 정보지원 정책 방향 제시

□ 연구범위

- 사과, 배, 포도 농가의 고정자산투자와 관련한 투자결정모형의 개발
- 경영장부 기록농가의 성과평가 서비스 지원 방안 제시

다. 연구 내용

(1) 과수농가의 투자결정 모형개발

□ 대상 품목 및 투자분야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 투자분야 : 과목 선택, 과목 대체, 가공·저장 시설, 주요 기계 및 장비, 농용지
- 품목별 투자 분야에 따라 자금조달 방법(자기자본, 차입자본) 및 이용조건별로 투자타당성 분석자료 제시

□ 과수농가의 투자행위 분석

- 과수농가의 최근 투자실태 및 자금 이용 방법에 대한 조사 분석
- 농가의 투자 결정 기준 변수 선정
 - 예상 소득흐름, 비용지출 계산 방법 및 산정 기간(미래 가격 예측방법, 예측기간, 이용 가격)
- 농가의 투자 행위의 문제점 조사

- 과수농가의 컴퓨터 활용 실태 및 정보수요
 - 농가의 컴퓨터 활용 수준 및 문제점
 - 영농정보 수집, 관리, 분석 실태 및 필요 정보 수요
 - 필요 정보의 생산, 가공, 분산처 및 정보내용 분석
- 과수농가의 투자결정모형 개발
 - 투자결정을 위한 변수 결정 및 필요 자료 수집방법
 - 의사결정 분야별, 분석수준별 모형개발

(2) 투자결정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외부의뢰 개발)

- 국내외 경영관리 및 투자결정 소프트웨어 응용가능성 검토
- 품목별 투자분야별 소프트웨어 개발

(3) 과수농가 경영관리 및 정보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 과수농가 정보 수요와 관련 정보 생산 분배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방향 모색
- 농가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정보교환, 경영평가를 해 주는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4) 선진국(미·일) 농가의 투자결정 모형 및 정보 활용 실태 조사

- 과수농가의 투자결정 시 고려하는 변수와 기준 및 자금조달 방식
- 농가의 투자결정분석 시 이용하는 관련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 이용정도
- 농가의 투자결정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실태, 소프트웨어의 지원내용 등을 포괄한 조사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농업인단체, 지도기관 등과 관련한 실태 및 동향 조사

라.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방법

- 농가의 투자 및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1차 투자결정 모형을 구축
 - 품목별로 경영규모, 전문화 정도, 컴퓨터 활용 정도 등을 감안 품목별로 15호(총 45호) 내외의 농가에 대한 정밀 조사
- 선진국 과수 농가에서 활용되는 투자결정모형 및 정보지원 시스템에 관한 조사를 통해 우리의 적용 가능한 모형 개발과 지원방향 수립
- 농가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투자분석 기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 정리
 - 현재까지 개발된 지표(현금흐름 분석, IRR, B/C ratio, NPV 등)를 불확실성하의 모형과 확실성하의 모형으로 나누어 지표의 확정
 - 농가 내부, 지역 단위, 전국 단위, 수출입, 기상 정보 등을 이용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개발방향과 개발모형의 현실성을 제고
- 투자분석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은 전문업체에 시제품 제작을 의뢰

마. 기대효과

- 과수농가의 고정자본투자 결정을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농가의 수익성 제고는 물론 사회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채소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자 : 김정호, 김창길, 안병일

연구기간 : 2000.8.14 ~ 2002.8.1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들어 자연 재해가 빈발하고 대부분의 농산물이 과잉 기조를 나타내면서 농가의 소득 안정이 정책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농업경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농업인의 태도와 위험 관리 능력 등의 여하에 따라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채소경영의 위험 및 불확실성과 관련된 요인과 효과를 조사 분석하여 위험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위험 및 불확실성하에서 채소농가가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법을 채용하여 합리적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리계획 모형과 전산S/W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관련 통계자료에 의한 소득 변동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채소류 품목별 소득, 단수, 경영비 등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과 관련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가락동시장 D/B 이용하였고, 농가경제통계조사 자료로는 채소농가의 소득 변동(시계열, 횡단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채소농가의 위험 요인과 소득 실태의 조사 분석을 위하여 채소 주산

지의 농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채소농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 및 의사결정 형태의 조사 분석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1,500명을 임의 추출하여 설문지를 통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채소농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채소농가 232호를 면접조사하였다.

3. 채소농가의 소득변동 실태와 요인 분석

채소경영의 위험요소는 생산, 출하, 가격(유통), 제도적·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관리는 사전적 위험관리와 사후적 위험관리로 크게 구분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농가 입장에서 위험을 사전적으로 분산시키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재배면적 조절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채소 31개 품목에 대해 위험 요인과 재배면적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위험 요인을 판별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지난 20년 동안 전반적으로 단수가 감소한 생산 위험보다는 실질가격이 하락한 가격위험이나 실질경영비가 증가한 경영 위험을 보인 품목이 많았으며, 위험에 대한 대응 형태는 생산위험의 경우 위험회피를 보인 품목이 위험중립이나 위험선호를 보인 품목 더욱 많았으나, 가격위험과 경영위험의 경우는 위험선호를 보인 품목이 위험회피나 위험중립을 보인 품목보다 많았다.

채소농가가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가격위험과 생산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 여부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이 위험회피 의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생산위험 회피여부의 의향을 조사한 결에서도 대부분이 회피의향을 보임으로써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농가들도 위험회피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채소농가의 위험회피계수를 추정하였는데,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농가의 위험회피계수는 방법에 따라 $0.9498 \times 10^{-5} \sim 0.8503 \times 10^{-5}$ 와 0.2052×10^{-5} 인 것으로 계측되었고, 위험을 회피하는 대신 프리미엄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채소농가 전체적으로 100평당 189천원~158천원 사이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위험회피계수는 주 작목의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재배 면적이 클수록,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회피 성향이 높았으며, 농가의 총소득과 주 작목 소득의 편차는 작을수록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채소농가의 위험관리 형태로는 가격위험과 생산위험 관리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위험을 고려한 수리계획 모형과 전산 프로그램 개발

위험관리 모형은 평균-분산(E-V) 프로그래밍 기법을 도입하였다. 즉, 목적함수를 전체 기대 수익에서 위험회피 계수(ϕ)에 전체 수익의 분산을 뺀 값을 최대화하는 수리계획 기법이다. 이 기법에 의한 경영계획 수립의 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농업경영자가 사전적으로 위험에 대한 태도를 입력하게 되면 위험회피 성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품목이 제시되고, 이들 품목에 대하여 제약 조건과 기술계수 및 이익계수를 근거로 수리계획법을 통하여 재배면적과 총소득을 시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영계획 수립에는 품목의 범위를 채소류에 한정하고 과채류 16개 품목, 엽채류 8개 품목, 근채류 10개 품목, 양념채소 9개 품목의 총 43개 품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리계획 모형에는 강우 확률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작부체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작목이 선택되도록 설계하였다. 나아가 전산 S/W 프로그램은 개인용 PC 운용체제에서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하였고, 농림기술관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download)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정보 응용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자 : 이장호, 정인걸, 한근수,
홍성관

연구기간 : 1999. 6 ~ 2002.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EC/CALS 등의 새로운 정보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많은 부문에서 정보-업무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추세는 각 경제 주체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농업부문도 정보의 활용증대를 통해 자연환경이나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농업정보의 응용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 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 농업정보 응용기반구축에 관한 연구의 최종목표는 신속·정확하고 일관된 농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농업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응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응용기반 시스템의 구축은 전반적인 농업의 역할과 영향을 분석하고 선진영농의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종사하는 농민의 합리적인 농업경영과 기술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 유통정보제공을 통한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호,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상인의 이익증대, 선택적인 소비를 통한 소비자 만족증대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농업데이터베이스체계의 핵심부분인 시스템DB와 이의 응용기반의 구축을 이 연구의 중요목표로 설정하였다.

2. 농업정보 시스템의 현황분석

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주요 정보 분야와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농림부, 농협, 농업기반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센터 등 농림부 산하기관의 기관별 농업정보취급 현황을 이 연구의 주요 응용 시스템 분류(농업생산 시스템, 농업유통시스템, 농업경제시스템, 농업경영 시스템 등)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정리 분류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보화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농업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참고 및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외국 선진국의 농업전략의 차이와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3. 농업정보 수요조사 및 농업정보 분류

3차에 걸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0여 명의 통신원에 대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업정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농림 관련기관의 농업정보와 농민들이 대상으로 한 농업정보수요조사를 분석하여 농업정보를 생산정보, 유통정보, 농업기술정보, 경영정보, 경제정보, 해외농업정보, 북한 농업정보, 축산정보, 환경농업정보 등 9개 시스템으로 분류·구분하였다.

4. 통합농업정보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생산정보, 유통정보, 농업기술정보, 경영정보, 경제정보, 축산정보, 환경농업정보, 해외농업정보, 북한 농업정보 등 9개 시스템으로 분류된 통합농업정보DB를 정보공학방법론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개체-관계도(ERD; Entity-Relationship Diagram)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였고, 업무 모델링(Process Modeling)단계에서 기능분해도(FHD; Function Hierarchy Diagram)를 작성하였으며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화면을 설계·제작하였다.

5.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한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개발방법, 기술정보의 수집방법 및 범위, 정보의 이용대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체계, 기술정보의 분류 방법 등을 살펴보고 농업기술정보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6. 통합농업정보데이터베이스 Pilot 프로그램 제작

논리적으로 설계된 통합농업정보DB의 물리적 구현을 위하여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프로토타입 적용을 위한 정보기술을 검토하고, 유통정보, 농업기술정보, 경영정보, 경제정보, 축산정보, 환경농업정보, 해외농업정보, 북한 농업정보 시스템별 Pilot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결과를 예시하였다.

7. 농업정보 응용분석 기법

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농업정보 분석이 가능한 응용분석 기법을 검토하였는데, 우선 OLAP 프로그램의 방법론을 검토하고 새로운 분석기법인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이 농업정보 분석에 이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법론을 소개하였으며 이러한 기법을 농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업정보 통계정보 메타 데이터의 활용, 시계열 분석모형의 활용, 통계모형의 선정 및 선정기준, 동태적 수요공급 모형 등 농업정보 분석에 활용되는 통계분석기법을 소개하였다.

8. 농업정보 분석모형의 활용

이 연구에서 개발한 농업정보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 농업정보 분석이 가능한 응용분석모형을 개발하고 활용사례를 제시하였다.

우선 웹상에서 농업정보 응용분석이 가능한 OLAP분석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S-Link엔진을 이용하여 웹 환경에서 통계분석 및 가공정보를 온라인으로 분석하고 화면조회가 가능토록 하였다.

다음으로 농업정보 분석에 이용되는 통계분석기법 중에서 동태적 수요공급모형과 축산관측모형의 실제 활용사례를 제시하여 농업정보데이터베이스를 연구원에서 개발한 각종 모형에 연결하여 단순한 자료의 검색뿐 아니라 가공정보의 분석·예측이 가능토록 시도하였다.

9. 영농의사결정지원 시스템 프로토타입

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농업정보 응용모델 (영농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시제품으로 제작하여 농업정보 응용모델의 활용사례를 제시하였다. 영농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원격영농상담, 농산물 출하지원정보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0. 과수농가의 투자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프로토타입

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농업정보 응용모델 (과수농가투자결정시스템)을 시제품으로 제작하여 농업정보 응용모델의 활용사례를 제시하였다.

과수농가투자결정 시스템은 투자분석 프로그램과 경영진단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급 동향, 생산 동향, 수출입동향, 가격동향의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11. 농업정보 시스템의 통합화 방안

농진청, 유통공사, 농협, 농림수산정보센터 등 농림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공유하고 이 연구에서 설계된 통합농업정보DB에 각 기관별 데이터를 추출, 변환,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농업정보 시스템의 통합화방안을 제시하였다.

12. 결론

이 연구에서는 농림부, 농협, 농업기반공사, 농진청 등 농림부 산하기관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는 농업정보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정보 등 모든 정보를 망라하는 이론적인 통합농업정보체계를 설계하고 시스템별 Pilot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였으며, 농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농업정보 응용모델(영농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과수농가투자결정시스템)을 시작품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농림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공유하고 이 연구에서 설계된 통합농업정보DB에 각 기관별 데이터를 추출, 변환, 전달하는 농업정보 통합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행 농업정보체계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 연구에 따라 통합농업정보시스템의 기본 설계가 완료되고 시험 모형을 통하여 이의 타당성, 가능성이 확인되면 후속 사업으로 설계에 포함된 통합데이터베이스와 분석모델의 개발이 착수되어야 한다.

농장관리 · 농장재정 · 사회문화 지표 및 농업정책 개발연구

연구자 : 임송수, 오내원, 김창길,
황의식, 김상현

연구기간 : 2001. 7 ~ 2002. 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0년대 중반부터 OECD는 합동작업반(JWP)을 통해 농업활동과 환경 및 정책 사이의 연계를 밝히는 수단으로 농업환경지표(AEI)를 개발해 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농업의 환경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환경 친화한 영농방식의 채택이 늘고 있는 한편 농업에서 비롯된 환경압박 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농업환경 정책의 개발 및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에서 나타나는 환경상태 및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농업활동과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환경조건의 변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AEI 개발은 OECD가 제시한 추진력(driving force)-상태(state)-반응(response)의 틀 안에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OECD의 지표개발 가이드라인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했다. 국내 통계자료의 부족과 지역 특수성 및 해석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산출이나 비교가 어려운 세부지표들에 대해서는 4곳의 사례지역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 관련 OECD 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및 자료 검토를 지원했다.

3. 농장관리지표 개발

개발된 농장관리 지표는 환경친화적 관리계획 대상 면적이나 농가의 비중, 유기인증 농가의 비중, 양분 관리계획을 따르는 면적이나 농가의 비중, 토양검정 사용 빈도, 무농약 재배 면적의 비중, 병해충 종합관리의 대상 면적, 토양 피복일 수, 보전 경운이나 무경운 방식 등 환경친화적 토양관리 대상 면적의 비중, 관개기술에 따른 관개용수의 비중, 농업환경 연구에 대한 지출, 농민의 교육수준, 환경친화적인 농장관리를 따르는 면적 등이다.

4. 농장재정(농가재무)지표 개발

농가재무 지표는 농업활동에서 얻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순 농업소득을 계측한 순 농업소득 균형지표, 공공 부문이 농업환경 재화나 서비스 및 환경의 질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지출 수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농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에서 농업환경 관련 연구개발비의 비중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연관된 지표로 농가소득 구성, 농가부채 비율, 도·농 사이의 소득 격차, 농가 토지자산 등을 제시했다.

5. 사회문화 지표 개발

사회문화 지표는 농업의 GDP 비중과 고용 비중, 농업 총 생산액의 변화, 신규 참여 농가의 경영주 연령, 농민 교육수준, 농가호수의 감소율, OECD 생산자보조 측정치(PSE), 농경지율과 농경지면적 증감률, 초지면적 비율 등이다.

6. 농업환경 정책 개발

농업환경 정책 측면에서는 대규모 지구 조성사업, 소규모 지구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마을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논농업 직접 지불, 푸른들 가꾸기,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등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을 기초로 평가했다. AEI를 사용한 농업환경 정책의 평가는 토양의 질, 지하수와 지표수, 수자원 보호, 종의 다양성, 서식지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경관, 전체 환경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AEI를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책목표의 설정, 환경효과에 대한 평가와 정보 제공, 새로운 농업환경 정책조치의 도입, 자발적인 접근방식(voluntary approach) 및 환경공채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교역 및 농업협력방안 연구

연구자 : 이재옥, 정정길, 임정빈,
김정호, 어명근, 강정일

연구기간 : 2001. 8 ~ 2002. 8

1.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교역의 전망과 대책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농업은 토지집약적인 곡물 생산으로부터 노동집약적인 채소, 과일, 특용작물 등으로 재배 전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지역 간의 부존자원 여건과 비교우위에 따라 지역 간 생산의 전문화가 촉진될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라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유희 노동력이 많은 상태이고 농지제도도 농지유동을 자유롭게 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과수, 채소, 특용작물의 국제경쟁력은 상당한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고부가가치 고급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수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에 부응하여 농산물의 생산, 포장, 수송, 가공, 판매 등 전 분야에 걸쳐 고급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근거리에 있는 동북3성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시장을 겨냥하여 청정 유기농산물 생산에 정책의 최우선점을 두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주요국과의 양자협상 내용을 이행할 경우 관세쿼터 설정, 국가 독점이나 국영무역의 점진적 폐지 등에 따라 곡물

의 수입은 증가하고 채소, 과일, 육류 등의 수출은 증가하여 세계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시장에 본격 편입되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수입하는 곡물의 가격은 상승하여 우리의 수입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우리의 수출 품목인 채소, 과일의 가격은 하락하여 국내 농가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발생하게 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입대항 능력과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2) 수입관리제도를 효율화하며, 3) 불안정해지는 세계 농산물시장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재고관리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우선 품질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중국 역시 농산물의 품질제고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전문화의 분야나 품목을 차별화하여 우리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경합이 심한 수출시장에서 우리는 가급적 자본, 기술집약적인 농산물의 수출에 전문화하여 중국과의 경쟁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 수입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WTO의 회원국이 되 이상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취급해야 하므로 기존 WTO에서 허용된 수입관리제도의 한계 내에서 수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세이프가드 제도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관세화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제도(SSG)를, 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장기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GATT 19조를 원용한 세이프가드제도를, 그리고 중국산 농산물이 주로 수입되어 농가피해가 발생하는 고추, 마늘, 양파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제도를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시 중국의 불합리한 동식물검역에 대해서는 적극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식량수급의 차원에서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높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세계 농산물시장의 안정성은 저하되고 일부 사료곡물 가격은 상승하여 우리의 수입 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한

효율적 수입 전략과 재고관리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수입 비용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사료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2. 한중 농업협력 방안

중국의 국민소득 증가와 소비 패턴의 고급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고급 농산물이나 가공농산물을 중심으로 중국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 공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기자재의 수용에 따른 수출확대도 중요하다.

최근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무역마찰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후적 대처보다는 사전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당국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금까지 한중간 농업교류와 농산물 교역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노력보다는 경쟁적인 전략만 강화되어 왔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는 1) 종자, 비료, 농기계, 농약, 비닐 등 농기자재 산업, 2)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실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축산물 생산의 증가와 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사료 분야이다.

한중 농업교류협력 추진상의 문제점으로서 현행 정부 차원의 협력기구가 운영의 측면에서 경직성이 있고 협력사업 추진 주체의 다양성으로 효과적인 협력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또한 농산물 통상현안에 대한 상설조정기구가 미비한 점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무역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농산물 교역으로 인해 빚어지는 분쟁 등 각종 현안을 조정할 수 있는 통상협의체를 설립하여 양국의 공동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한중 농산물 통상협의체는 1) 기존 협력기구의 기능 강화 및 운영방식 개선, 2) 새로운 통상협의체 구성 등의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 농업 분야가 두루 참여하는 한중농산물통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양국 간 발생하는 농산물 무역마찰 등 통상 문제를 협의하는 방안이다.

5. 산 립 정 책 연 구

산촌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연구자 : 장우환, 장철수, 손철호

연구기간 : 2002.1 ~ 2002.1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세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산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산촌은 우리 세대가 보존하고 후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소중한 국토공간이다. 산촌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생태공간인 동시에 전통문화 계승공간,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의 공익적·다면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본이나 유럽 등 산림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산촌을 중요한 국토정책의 대상으로 다루어 왔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국토정책이나 농림정책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1995년에 산촌의 진흥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산촌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2년 당시 47개 산촌마을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61개의 산촌마을이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산촌의 실태와 범위, 산촌개발의 필요성, 외국의 산촌개발 사례와 시사점 등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촌개발사업의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살펴본 다음, 우리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산촌개발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

이 연구는 산촌의 실태와 개발의 필요성, 산촌개발사업의 평가와 문제점, 산촌개발사업의 개선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

기 위한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문헌 조사는 산촌개발과 직접·간접적 관련이 있는 국내외 단행본, 연구보고서, 논문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우리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산촌개발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촌개발사업의 평가를 통해 효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내외 산촌개발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2001년 산촌개발사업으로 개발 완료된 25개 산촌마을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산촌개발사업을 평가하고 사업효과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둘째로, 산촌개발사업이 완료된 25개 산촌마을에 거주하는 150명의 산촌주민을 대상으로 현지 면담 설문조사를 하고, 2002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연생태우수마을' 중에서 양평군 명달리 산촌마을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하였다. 셋째로, 일본을 포함한 외국의 산촌개발 사례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문헌조사와 사례조사에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산촌개발사업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3. 산촌개발의 평가와 문제점

산촌 지역은 산림의 점유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회·경제·문화적 수준이 낮은 인구 과소지역으로서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27% 이하, 인구밀도 1.44인/ha 이하인 읍·면 지역을 의미하며 행정구역상 498개 읍·면, 5,116개 법정리(각각 전국의 35%, 30%) 중에서 2,034개리가 산촌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산촌 지역은 인구의 과소화, 낮은 소득수준, 열악한 생활환경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산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21세기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 산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산촌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1995년부터 낙후된 산촌의 진흥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2년 당시 47개 마을이 완료되었으며, 61개 마을이 사업 추진 중이거나 사전설계중이고, 그 동안 약 1,26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산촌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산촌주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인구유지와 지역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반면, 산촌개발사업은 계획 수립단계, 사업집행단계, 사후관리단계의 측면에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4. 산촌개발사업의 개선방향

산촌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산촌개발협의체(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계획 수립 후에 산촌개발협의체와 지자체가 산촌개발과 관련한 역할과 의무를 규정한 개발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계획 수립의 현실성과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비용을 현실화하고, '선 계획 후 대상지역 선정'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계획의 지역별 차별화와 계획의 타당성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산촌개발사업의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의 추진 주체를 현행 지자체 중심에서 지역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주민 자율의 사업 발주 및 시공업체 선정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주택신축 용자금의 이용조건을 완화하고, 산촌경관과 조화되는 주택 개량 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산촌개발 시 국유림 등 주변산림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산촌개발사업의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며, 보완사업비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산촌진흥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산촌진흥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산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촌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횡적·종적 연대를 강화하고, 조건불리지역 산촌에 대한 직접 지불제, 우수 산촌개발마을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농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및 산촌유학제도 등의 신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임산물 교역과 대응 방안 연구

연구자 : 장철수, 장우환, 정정길

연구기간 : 2002.4 ~ 2002.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1년 12월 중국이 WTO 정식회원국이 됨으로써 세계무역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임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간 임산물 무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동북아 지역의 협력국가로 전환되면서 활발히 이루어져, 중국은 2001년 수출 대상국 2위, 수입 대상국 1위로 급부상하였다.

한편 한·중 간에는 임업 분야 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 체결(1994.10) 이후 임업협력약정체결(1998.6.), KOICA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2000.4.), 제3차 한·중 임업협력회의(2000.7.), 중국 임업·임산업 투자 설명회개최(2002.10.) 등 임업협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의 WTO 가입은 외국의 직접투자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중 간의 투자협력 증대뿐만 아니라 국제협상에서의 협력관계 증진이라고 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임산물교역 변화와 우리나라 임산물 부문에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2.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

주요 연구 내용은 중국의 임정변화와 임업현황, 중국의 WTO 가입이

자국 임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 임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임업 분야 대응 방안 등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자료 수집, 임업연구원, 농산물 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관련 전문가 면담 및 중국 현지 방문조사, 임산물 생산, 수출입통계, 관세율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중국의 WTO 가입이 자국 임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정책과 제도가 투명하고 공평해 져야 하며,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을 동일시하는 우대정책의 실시, 시장접근의 확대, 무역 관련 규제완화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임업관리, 국유임업에 대한 특혜제도와 조직구조 등의 개선과 함께 유통 및 무역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 상당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세계 WTO회원국들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받아온 비회원국으로서의 차별대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협상의 장으로서 WTO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국내에서 부족한 목재자원에 대한 수입이 확대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목재자원보유국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 효과를 크게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부터의 목재 수입증가는 중국의 국내자원 보호 및 육성을 활발하게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산림생태계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선진기술 도입 및 임산물의 품질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합판을 중심으로 한 중저가의 목질패널제품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밤,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 임산부산물을 중심으로 전 세계 WTO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4.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 임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 임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중국의 관세 인하로 인해 컨테이너바닥용 합판을 비롯해 파티클보드, 고밀도 섬유판, 파켓 패널 등 고부가가치 품목들과 생밤을 중심으로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투자장벽이 완화되면서 임 산업 부문의 중국투자 가능성 증대, 목재자원순수입국인 중국이 국내적으로 천연림보호사업의 전개와 함께 도벌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목재자원보유국들의 압력에 대한 국제협상에서의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서는 국내의 높은 관세를 회피하여 들어오는 유사 제품 또는 중저가의 값싼 임산물 수입증대에 따른 국내시장의 교란,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 밤,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 수출 주력품목들이 제3국인 일본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판, 파아티클보드, 섬유판 등 목질패널제품은 국제경쟁력이 낮은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밤, 표고, 송이 등은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표고는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5.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임업 분야 대응 방안

중국임산물수입확대에 대해서는 검역체계의 강화와 목재류의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질 제품의 국내반입을 막고 소비자와 관련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과의 연계를 통한 관세체계의 정비,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객관적이고 효율적 운용이 요구된다. 한·중 임산물교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와 함께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 단체나 협의회를 설립, 운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임산물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목재류의 경우 환경보조금 직접 지불제의 도입을 통해 목재보드류산업을 환경산업으로 육성하고, 대체재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원료성 제품의 수출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줄이고 고품질 제품생산 및 수출을 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목재류는 대부분을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의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노력과 함께 목재자원보유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도별, 수출세의 임의적용 등에 대해 중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밤 산업 동향

연구자 : 장우환, 장철수, 정정길,
손철호

연구기간 : 2002.6 ~ 2002.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과 중국은 세계 주요 밤 생산국이면서 주요 밤 수출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밤 생산 동향이나 수출입 여건이 변할 경우 임산물 중 단일 수출품목 1위인 우리나라 밤 수출과 밤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당시 세계 밤 생산량 97만 톤 가운데 중국이 63.4%, 한국이 9.3%(FAO통계 기준)를 각각 차지하며, 최근 중국은 매년 10%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국인 중국의 밤 생산, 가공, 유통, 수출입 등 밤 산업 전반에 관한 동향을 파악한 다음, 향후 국내 밤 산업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밤 생산, 가공, 유통, 수출입 등 밤 산업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여 중국 밤 산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밤 산업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

이 연구는 중국의 밤 재배 및 생산, 가공, 유통, 수출입 등 밤 전반의 산업에 대한 동향파악을 통하여 중국의 밤 산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중국의 밤 재배 및 생산 측면에서는 중국의 밤 품종의 종류 및 분포와 주요 보급품종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국 밤의 생산량과 생산 및 재배 관련 지원제도와 최근의 연구 동향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중국 내 한국산 밤 묘목의 식재와 재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밤 묘목의 특성 및 공급 현황을 살펴본 후 중국 내 한국산 밤 묘목의 이식 및 재배동향을 파악하였다.

중국의 밤 유통 및 소비, 가공 동향 파악에서는 중국의 유통구조, 소비구조, 그리고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밤 수출·입 동향 파악에서는 중국의 밤 수출·입 실적을 파악하고 아울러 밤의 통관 및 수출 보조금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밤 산업 동향 파악을 통해 향후 한국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밤 산업의 대응 방안을 생산측면, 유통·소비·가공산업 측면, 수출입측면, 정책 측면에서 각각 모색하였다.

3. 중국의 밤 산업 동향

밤은 중국이 생산하는 대표적 임산물로 2001년 당시 전국 22개 시·성의 밤 재배면적은 1백33만3천ha으로 추정되고, 생산량은 61만5천 톤에 달한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밤 생산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8년 이후 서부개발전략의 일환으로 산간지역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된 밤 재배면적 확충계획과 더불어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증가가 가속되고 있다.

중국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주로 관을계통으로서 전통적인 야생채취 형태의 밤나무 재배관리를 보였으나 최근 개량보급품종의 인공조림 밤나무 단지 조성이 늘어나고 있고, 집약적인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산 밤나무가 중국에 본격 반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이며 종자(19톤), 묘목(120천 본), 접수(130kg과 15천 본) 등의 형태로 중국에 유입되어 중국 山東省 日照市 黃墩鎮에 1,000ha의 밤나무 기지를 조성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경우 2001년 WTO의 가입으로 밤의 수출입구조가 기존의 5개 업체 중심의 국영무역중심에서 다양한 업체로 수출입 창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밤 가공산업의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4. 중국의 밤 산업에 대한 대응방안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밤 산업은 한국의 밤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국내외의 밤 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관계는 훨씬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분야, 유통·소비·가공산업 분야, 수출입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림정책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이 요구되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내 밤 생산 유통 실태와 해외 밤 산업의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장단기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밤 전문연구기구 및 전담부서의 설립과 인력확보가 요구된다.

둘째로, 밤 재배업자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여건의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밤나무관리 전문 작업단 육성·지원과 아울러 식품안전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무공해임산물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로, 품질의 차별화를 위한 고급품질의 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밤나무 관리강화 및 노령목 갱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령목 갱신을 위한 기술지원과 우량양묘 보급 등의 지원 강화, 국내 밤 생산기반 지원 강화, 밤 재배농가의 규모 확대를 위한 밤 생산자 조직 또는 협회의 활성화, 규모 확대자금의 지원 등이 요구된다.

끝으로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국내 밤 산업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중국 밤 재배 및 생산 동향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산 계통의 밤뿐만 아니라 최근 개량종 밤의 생산실태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개

량종 밤의 가공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못한 중국 밤의 가공가능성, 중국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밤 및 중국 개량종 밤의 품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중국 밤에 대한 품질분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신농업 · 농촌 특별대책연구

DDA협상 이후를 대비한 신농업·농촌 특별대책

연구자 : 김정호 외 14인

(신농업·농촌특별대책연구단)

연구기간 : 2002. 5 ~ 2002.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에 대비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특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동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DDA 협상의 출범, 쌀 수급 불안과 주요 농산물 소비의 정체 및 가격하락, 생활환경 낙후와 자녀교육 문제 등 복지 여건의 미흡 등으로 농어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연구자의 정책 제언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라는 두 단계로 추진되었다. 즉, 연구자가 최근 수행된 중장기 농정보고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방향과 관련시책 방안을 작성한 후 이를 농어업특위(검토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하여 토론하면서 확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 소비자,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하고 외국의 농정개혁 방향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3. 최종보고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의 주요내용

UR 이후의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도시와의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DDA 협상과 지역경제 통합 등에 따라 시장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어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농어촌이 활력 있는 국토공간과 지역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특별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사회 흐름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어업, 도시민과 함께 가꾸는 농어촌”을 대전제로, 정부 주도에서 시장 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양 위주에서 품질·안전성을 중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실현하고, 농어촌을 생산공간에서 복합산업 및 정주·교류공간으로서 활력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둘째, 고효율 농업을 지향하여 경쟁력 있는 경영체를 농업생산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지의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경영이양직접지불제와 기초생활보장제 개편, 농지은행 기능 또는 농지신탁제도 도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지원하며, 자영농고·수산고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신규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가회생 지원프로그램과 고정자산 유동화 촉진제도를 마련하며, 농가파산제도를 통하여 고령·영세·부실농가의 농지처분이나 퇴출을 지원한다.

셋째, 협동조합은 부실조합 정리와 합병지원 및 수협 회원조합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일선조합 경영을 정상화하며, 지역조합 및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하여 조합원의 이해가 경영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회 신·경분리의 단계적인 추진

과 금융업무 연합기능 강화 등을 통해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금융업무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넷째, 농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수확 후 가공처리기술 확대, IT·BT 실용화 및 신상품 개발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식품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하며, 소비지 유통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산지유통 시스템을 혁신하는 한편, 수출유망 품목의 세계 일류 상품화와 한국형 식생활보급, 푸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내수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다섯째, 식품안전 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농수산식품표시제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해 요소 추적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식품안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순환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친환경직접지불 보조금 인상 및 가축 사육두수 할당제 도입 등 규제와 보상 시스템의 조화를 추구한다.

여섯째, 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제를 확대 도입하면서 폐원보상 등의 작목전환 지원제도를 도입하며, 농업관측을 강화하고 생산자단체 자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사업을 확충함.

일곱째, 녹화된 산림의 자원화를 위한 경제림 육성과 육림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강화 및 산림재해 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환경보전·산림휴양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과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한다.

여덟째, 농어촌의 안정된 정주공간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발거점을 육성하고 개발의욕이 높은 마을 단위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농어촌의 경관과 쾌적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정비를 추진하고 「경관협약」 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지역개발 정책이 관계부처간에 종합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보완하며, 토지이용상세계획 수립을 통해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른 공간계획 체계를 확립한다.

아홉째, 농어촌 지역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농가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등 도시자본의 농어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

성하고 농공단지 내실화와 농어촌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도·농 교류 촉진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열 번째,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군별 교원·교과과정 협력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복식수업·상치교사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농어촌 학교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 지원, 추천입학제 확대, 근무수당 현실화 등을 추진하며, 농어촌 출신 고교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를 추진한다.

열한 번째,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하여 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농어촌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을 확대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영유아·여성 등에 대한 복지 증진 프로그램을 확충함과 아울러, 농어촌 복지 증진을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열두 번째, 농어업·농어촌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농특세를 목적세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여 연장하는 방안 및 농어업 분야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방농정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WTO뉴라운드 대비 농업·농촌 발전과제

연구자 : 김정호 외 14인

(신농업·농촌특별대책연구단)

연구기간 : 2002. 5 ~ 2002.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농업은 매우 어려운 시련기를 맞고 있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과잉기조하에서 가격이 정체되면서 농업소득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데다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도 낙후되어 젊은이들조차 영농 정착을 꺼리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하개발의제(DDA) 농산물협상은 시장개방 확대와 함께 농정의 국제화를 재촉하고 있으며, 2004년의 쌀 재협상은 커다란 난관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DDA 이후에 대비한 농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연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중장기적인 농업 발전 방향에 부응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담당해야 할 역할 및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연구자의 정책 제언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라는 두 단계로 추진되었다. 즉, 연구자가 최근 수행된 중장기 농정보고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방향과 관련시책 방안을 작성한 후 이를 농어업특위(검토 소위원회 또

는 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하여 토론하면서 확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 소비자,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하고 외국의 농정개혁 방향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3. 주요 연구 결과

경제사회 여건도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적 합리성과 경쟁원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업에 시장 기능이 더 많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정도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지향적이어야 하고 농촌은 농업생산의 공간에서 도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

개방화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체질이 강한 농업구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지·인력·금융 등의 제도를 정비하여 경쟁조건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농업의 성장동력으로서 수확 후 가공처리기술 확대, IT·BT 실용화 및 신상품 개발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소비지 유통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산지유통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특히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여 품질과 마케팅 경쟁력으로 승부하면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식품안전전략을 수립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추적관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미래 농업의 비전을 품목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쌀은 국민의 기초식량을 안전·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본연의 식량안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경쟁력 있고 사업성을 갖춘 전업농과 미곡종합처리장이 쌀 생산·유통의 핵심주체로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소득보전직접지불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고 가는 방향이다. 채소는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농업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전후방관련산업과 연계된 종합산업으로 성장하는 비

전이 제시되었다.

또한 과수는 고품질 및 안전성으로 중국산 등 외국산과 품질로 차별화되며, 특히 다양한 품종 및 재배·판매방식의 채택으로 시기별·유형별로 세분화된 산업으로 변모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화훼는 시설화·자동화된 기술과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정착하면서 생산 및 소비기반 확충과 수출 확대로 선진 화훼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삼은 세계 인삼중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수출전략산업으로 정착되고, 생산기반이 정비되고 상품화의 차별화를 통해 지역특산인삼 공급체계가 정착된다는 비전이다.

축산은 전반적으로 전문경영체 중심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공급체계가 정착되고 친환경축산이 보편화된다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한우는 고품질·안전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전업농 중심의 환경축산 체제가 정착되고, 낙농은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전업적 경영으로 발전하며, 양돈은 국내 수요 기반을 토대로 환경축산으로 발전하고, 양계는 기업적 경영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계란·육계 공급체계가 확립되도록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농업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유통혁신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특히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지유통 기능을 강화하여 유통사업에서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이 경쟁력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신용사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통하여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새로운 농촌 건설을 위한 농촌개발과 복지 증진대책 연구

연구자 : 김정호 외 14인

(신농업·농촌특별대책연구단)

연구기간 : 2002. 6 ~ 2002.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 벽두부터 농업과 농촌은 매우 어려운 시련기를 맞고 있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과잉기조하에서 가격이 정체되면서 농업소득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데다 농촌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자녀교육 여건도 미흡하여 의욕 있는 젊은이 들조차 영농 정착을 꺼리는 실정이다. 게다가 DDA 협상의 출범으로 농정 수단도 국제 규범에 맞추어 나가야 하므로 앞으로 농촌정책도 극히 제한적으로 채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DDA 이후에 대비한 농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연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하였다. 특히 기존의 농정에서 다루지 못했던 농촌 지역 공간정비, 농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농촌 지역의 교육 문제,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복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연구자의 제언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라는 두 단계로 추진되었다. 즉, 연구자가 최근 수행된 중장기 농정보고

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방향과 관련시책 방안을 작성한 후 이를 농어업특위(검토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하여 토론하면서 확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 소비자,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하고 외국의 농정개혁 방향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3.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

연구 결과는 농어업특위의 최종보고서인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이 연구의 보고서는 제1편 농촌개발과 복지 증진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제2편 새로운 농촌건설을 위한 정책과제 분석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은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와 전망, 농정 기초의 전환과 주요 정책과제, 농촌 공간정비와 지역 활성화, 농가소득 안정과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농촌 주민의 복지 증진, 농업 투융자 및 농정 추진 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농업·농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시장 지향적인 정책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양 위주에서 품질·안전성을 중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실현하고, 농촌을 생산공간에서 복합산업 및 정주·교류공간으로서 활력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제2편은 총 18개 장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농촌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개방화에 따른 농업 부문 영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농업의 중장기 지표를 전망하였다. 제2장에서는 식량자급률 전망과 목표 자급률을 분석하고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장은 농정 추진체제의 개편 방안으로서 특히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의 역할 분담과 지방농정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자본의 농어촌 유

치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조세 감면 등을 통해 도시자본의 농어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농공단지 내실화와 농어촌 산업화를 추진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농촌관광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농촌개발 분야로서, 제7장은 농촌의 미래상과 지표 전망 부분으로, 인구를 중심으로 본 농촌 정주여건 변화를 검토하고 농촌의 장래 인구 예측 및 미래 농촌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농촌의 총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제8장에서는 농어촌 공간의 계획적 정비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농촌계획의 존재 의의와 주요 쟁점, 농촌계획의 위상과 방향 설정을 위한 제안, 농촌계획의 작동을 위한 보완과제를 검토하였다. 이어 제9장에서는 소규모 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방안, 제10장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의 운영체계와 재원확충 방안을 검토하였다.

제11장부터 제18장까지는 농어촌 복지대책을 검토하였으며, 우선 제11장에서 총론적으로 농어촌 복지 증진을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제12장에서는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제13장에서는 농어업·농어촌 교육정책에 대하여 농어촌 교육의 개선방안과 농업계 학교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제14장에서는 농촌 지역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제15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6장에서는 농어촌 문화정책의 발전방향과 함께 농어촌 문화복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17장에서는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으로서 농가도우미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제18장에서는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른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농어촌 노인복지의 증진대책을 제안하였다.

7.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벤처 농기업의 실패와 활성화 방안

연구자 : 이동필, 김종선, 전일송

연구기간 : 2002. 1 ~ 2002.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과 함께 창의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의 창업 및 보육이 한국경제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8월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6482호)’을 제정하고 다양한 벤처기업육성정책을 도입·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정보 및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벤처농기업체가 나타나고 있다.

벤처농업의 활성화는 농업의 효율성제고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는 물론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해 농가 및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벤처농기업의 개념과 국내·외 관련 정책, 그리고 벤처농기업체의 실패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벤처농기업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에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국내외 벤처 관련 제도 및 정책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벤처농기업체 실패는 중소기업청이 발표하는 ‘벤처기업 현황자료(www.venture.net)’중에서 농업관련산업 분야를 재분류하고, 일반업체와 비교를 통해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농업 관련 벤처기업 42개 업체에 대해 경영 실태와 사업단계별 애로사항을 설문조사·분석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와 ‘벤처농업의 성공사례’로 알려진 업체를 사례조사하여 창업과정의 애로사항과 성공요인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3. 벤처농기업의 실태

2002년 6월 말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한 10,182개 중 농업의 범위를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업관련산업분야로 확대할 경우 농업관련산업의 벤처기업은 304개(3.0%) 업체에 불과하여 이 분야가 벤처기업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업체 중 IMF 이후 창업한 업체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도시 21.7%, 읍·면 지역 39.5% 등 농촌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업체가 많다.

벤처농기업체의 경영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사업계획단계》의 경우 창업관련정보와 기업경영전문지식 부족을, 《창업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절차, 창업자금조달, 판매망구축 등의 어려움을, 그리고 《성장·발전단계》에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부족과 판로확대 문제, 지나친 행정규제 등을 당면 문제로 들고 있다.

4. 벤처기업 관련 정책의 추진실태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482호)’에 의거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 입지, 기술인력, 조세, 판로 등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유사 지원정책이 중복 추진되고, 시책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지출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IT, BT산업, 신소재개발 등 첨단기술개발 분야에 치중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가 서울과 수도권, 기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농촌 지역에 위치하는 농기업 분야의 창업희망자가 기술경영지

도나 창업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농업 부문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농림부는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1998)과 농업투자전문조합결성(2001) 등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칫 벤처농기업육성정책의 목표나, 정책대상, 그리고 정책수단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5. 벤처농기업 활성화 방안

벤처농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인증 받은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유형 I)과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유형 II), 그리고 업체 형태가 아닌 농가단위로 운영되는 벤처농업(유형 III)의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들 유형별로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① 아이디어의 발굴과 구체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② 사업자를 벤처기업가 정신을 갖춘 전문경영자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③ 창업에서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각종 기술 및 정보 제공, ④ 농촌 지역의 특징을 살린 창업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창업보육사업의 확대, ⑤ 벤처농기업 인증제도의 도입, ⑥ 자금과 판로부족 등 벤처농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및 기존의 농정 차원의 유사사업과 연계성 강화, 그리고 ⑦ 틈새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농업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과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단기정책개발연구

미얀마 농업마케팅 개선사업

연구자 : 윤호섭, 허길행, 유철호

연구기간 : 2002. 3 ~ 2002. 6

1. 연구의 목적

미얀마의 농산물 유통 및 수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유통개선 및 수출 증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미얀마의 경제현황

- 시장경제로의 전환
1988년 이전의 25년 동안은 정부통제하의 미얀마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
1988년 시장경제로 전환 → 경제개혁 → 정부 개입 축소
- 5개년 계획 진행 중 → 2002년은 3차 계획의 3차 연도
1차는 1992/93 - 1996/97
2차는 1996/97 - 2001/02 → 연평균 8.1% 성장 (목표 성장률은 6%)
- 농업이 중요 산업
GDP에서 농업은 33%, 축산업은 8%를 차지
농산물 수출 증대가 중요 → 기본적인 수출입 정책

3. 농산물 유통 현황

미얀마 경제에서 농업은 매우 중요하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농업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유통 현대화사업이 주요 과제이다.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첫 조사사업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의 지원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가 2000년에 발표되었다. 이후 농산물 유통현대화 사업은 주로 가격정보의 수집 및 분산에 중점을 두어왔다.

수도인 양곤의 인구는 500만 명 수준이며, 160여 개의 시장이 있다. 주요 도매시장은 양곤시개발위원회(YCDC : 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가 관리하고 있다. 곡물류는 Bayint Naung Crop Exchange Center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과채류는 Thiri Mingalar Market에서 거래되고 있다. 거래 가격은 농업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와 YCDC 등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유통량 파악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시장관리사무소(Market Authority Office)는 YCDC 소속으로서 주요 기능은 상점 임대 및 주차관리 등이다. 이외에도 축산물과 관련된 도축장과 도계장이 YCDC 산하에 있다.

제2의 도시인 만다레이(Mandalay)는 인구가 80만명이며, 38개 시장이 있다. 주요 시장은 Kaing Tan Market (농산물 시장), Zay Cho Market (소비재 시장), Yadanarbon Market 등이며, 만다레이시개발위원회(MCDC : 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가 관리하고 있다. Crop Exchange Center의 거래는 활성화되어 있고 거래의 투명성도 높다. 거래 방법은 견본거래로 계약하고, 창고에서 확인 후 거래가 성사된다.

미얀마의 무역은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출입이 허가사항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농산물과 목재 및 수산물 등이며, 농산물 중에서는 쌀, 두류, 사탕수수(sugarcane), 고무(rubber), 황마(jute)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쌀의 수출 증대가 중요하며, 한국 시장에도 관심이 있다. 쌀 수출의 대부분은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관개부도 일부 수출하고 있다. 팥(Pulse)은 주로 인도에 수출하고 있다.

국경무역이 중요하며, 주로 중국 및 인도 국경에서 이루어진다. 1977년 이전은 물물교환형태였으나, 그 후 미국 달러 및 중국 위안(元)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경무역은 수출입업자간의 신

되에 기초한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1989년까지 농산물 수출은 정부통제하에 있었고, 1989년 이후 무역업이 자유로워졌다. 수출업자들은 국내외 가격 변동과 행정체계(Administrative system)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직접 수출업무에 개입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정부의 외환 필요량 확보와 외국 기업의 부당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출업무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많은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수출의 문제는 낙후된 가공기술과 창고 시설의 부족으로 품질이 낮고, 시장정보가 부족한 점등을 들 수 있다.

4. 개선 방향

농산물 유통 개선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생산 및 시장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농산물 유통의 주요 과제중의 하나가 수급안정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관개부는 농업생산에만 전념하고 있다. 농산물 수급 및 유통과 관련된 조직이 없고, 농업계획국에서 가격조사 정도만 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급 및 유통업무를 담당할 부서의 설치가 시급하다.

농업계획국에서 시행 중인 가격조사도 상인 면접 조사에 기초하고 있어 정확도를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조사자료도 6,500부 정도 인쇄되어 배포되고 있으므로, 농민들이 입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가격조사자료의 확산을 위해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곤과 만다레이의 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가공 및 저장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부도 협동조합이 농산물 유통사업을 적극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농산물 수출 정책은 우선 투명해야 할 것이다(예고 없는 수출 금지 등은 지양해야 함). 그리고 정부조직의 일부인 국영기업은 단기적으로

는 공사화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되, 장기적으로 민영화되어야 한다. 수출세는 단기적으로는 하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철폐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출업무에 요구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이 완화되어야 한다.

수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통신 및 도로 등 사회적 간접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터넷의 사용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2002 수확기 쌀시장 안정화 방안

연 구 자 : 박동규, 김명환

연구기간 : 2002. 8 ~ 2002. 9.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재고량이 적정 수준을 크게 초과한 상태에서 2001년산 생산량이 신곡 수요량을 상회하는 3,830만석이 되면서 2001년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3%나 하락하였다. 농가가 적정가격보장 및 정부수매 확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2004년에 예정된 쌀재협상 결과 관세화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쌀산업 구조개선 등 경쟁력 제고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시점이다. 2002년 수확기에도 작년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 대처방안이 사전에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2년산 예상 생산량, 수확기 시장 유통량,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별 수확기 가격을 전망하고 시장 안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2. 2002년 수확기 쌀시장 전망

2002년산 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만ha 줄어든 105만 3천ha이며, 10a 당 단수는 태풍 “루사” 등의 영향으로 일조량이 적어 평년 단수(503kg)보다 5~10%, 전년 단수(516kg)보다 7~13% 줄어든 450~480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02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9~14% 줄어든 3,300~3,500만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의 예상 생산량 3,300~3,500만석은 신곡 수요량 3,140만석을 약 160~360만석 초과하는 수준이다.

생산량 중 농가단위에서 소비하는 물량 비중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32.8%로 가정할 경우 1,082~1,148만석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출하량(생산량 - 농가소비량) 중 10~12월 동안의 출하 희망량 비중은 예년과 동일한 비율인 63.6%를 가정할 경우 1,411~1,496만석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매 이외에 정부의 시장개입이 없을 경우, 2002년산의 수확기(11~12월)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4% 상승한 15만 2천원~15만 8천원/80kg(정곡)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2001년 수준의 특별구입자금(5,000억원)을 투입하여 RPC 등으로 하여금 수확기 물량을 추가적으로 흡수하도록 할 경우 수확기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구입자금을 2,500억원 수준으로 축소 할 경우, 수확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한 15만 4천원~16만 1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쌀시장 안정화 방안

2002년산 생산량이 전년 대비 9~14% 줄어든 3,300~3,500만석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확기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01년 수확기에 특별대책으로 시행하였던 정부의 특별자금 지원 수준을 금년에도 유지할 경우 수확기 가격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수확기 가격 상승은 내년도 벼 재배면적 감소 폭을 둔화시키거나 증대시킴으로써 2003년산의 공급과잉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재고 누증을 완화하고 쌀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쌀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자금 지원을 일시에 없애면 RPC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1년의 풍작에 따라 일시 시행하였던 농협중앙회의 시가매입으로 농가의 조곡 수취가격이 시장가격보다 1.9% 높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시가매입방식의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농가가 농협의 시가매입

을 기대하여 시장출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수확기 초반에 출하가 지연될 경우 수확기 후반에 홍수출하로 인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 시가매입·방출 방식의 주체인 농협중앙회는 2002년에 시가매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조기에 공표하여 농가의 벼 출하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3 양곡연도의 정부양곡은 2002년도에 이월된 1,040만석과 신곡 수매량 548만석, MMA 수입량 125만석 등 1,713만석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정부양곡 방출에 따른 단경기 가격위험을 우려한 유통업체들이 수확기 원료곡 매입량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2002년산 생산량 잠정치가 집계되는 대로 수매량 중 일정량을 2004 양곡연도로 이월한다고 공표하여 수확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관리방침 등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변화, 시장 참여자의 시장신평 결여 등의 요인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쌀소득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2002년산부터 시행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화 시그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및 2002년 쌀산업 안정대책 연구

연구자 : 이정환, 김명환, 김정호,
박동규, 오내원, 임정빈,
서진교, 안병일

연구기간 : 2001. 12 ~ 2002. 2.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계절진폭 수준이 축소되고 산지 미곡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하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2001년산 쌀이 대풍작을 이루어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5.3% 하락하였다. 농가는 소득하락에 직면하고 벼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의 수매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쌀산업 및 쌀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새로운 쌀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전제조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2년도 쌀산업 안정화 방안과 장기적으로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농지이용규제 완화, 생산조정제 도입과 쌀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정책 도입 방향 등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2. 수급조정 및 재고감축 정책 방향

2002~05년에 명목가격이 연간 3%까지 하락하도록 재고를 관리하여 재배면적 감소와 소비증가를 유도해야 한다. 시장가격이 연간 3% 정도 하락할 경우 2005년도 국내가격은 관세화시 중국산 수입가격에 근접하여 쌀수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벼 재배면적도

줄어들고, 1인당 소비량 감소율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2~05년에 발생하는 과잉공급량 약 600만석을 대북지원 등으로 특별처분하여 재고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5년 이후에는 수급균형이 이루어져 과잉 공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쌀 생산농가 소득지원제도 확립

가격하락에 대응한 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지급단가를 2002년 수준에서 고정하여 병행하도록 한다.

소득보전직불은 이전 3개년 단위면적 당 평균조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당년 실질조수입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방식이며, 기준조수입에는 직불보전액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불액을 사전에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여 기금을 형성하도록 한다.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AMS 여유분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매량은 축소되어야 한다.

4. 쌀시장 안정 지원정책

수매량 감소에 대응하여 수탁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탁거래에 참여하는 농가에 유통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운영자금을 수탁거래 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곡거래소를 설립하여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양곡거래소는 기준가격을 제공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

공공비축물량을 소비량의 12~15%로 설정 운영하여 국내외의 일시적 공급부족에 대응하도록 한다. 2005년경까지는 재고가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공공비축제 시행은 2005년 이후가 될 것이다.

5. 쌀산업 구조개선과 경쟁력 지원정책

경영규모가 확대되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기 임차농지, 인접 농지에 대해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금리인하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노령 경영주의 농지가 유동화되도록 경영 이양직불제 운영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로 고품질 브랜드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지별, 품종별, 완점립비율 표시제를 도입하여 고품질쌀에 대한 판단기준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RPC간 통폐합이나 사업연합을 통해 시·군 행정단위로 규모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미질 향상을 위해 건조저장시설 확충과 시설현대화가 필요하며, 규모화된 RPC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2002년 쌀산업 안정화 방안

2002년 수확기 쌀시장을 안정시켜 쌀산업 증장기대책 추진 기반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시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001년산 공급량을 시기별로 조절하여 적정한 계절변동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파종기 전에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2002년 벼 재배면적 감소를 유도하고 파종기 후에는 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2002년산 수확기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개도국의 농업연구개발 국제공동연구

연구자 : 최정섭

연구기간 : 2002. 1 ~ 2002. 3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s both the largest funder and the largest provider of Korean Agricultural R&D and extension. It devoted substantial research resources into rice-related technological development. With strong financial and political support, the RDA bred a number of high-yield rice cultivars that have been widely used in Korea. In response to the URAA, the government created a new funding sources and a new agency for agricultural research, the Agricultural Research Promotion Center (ARPC). The ARPC is funded by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with a limited time-span of ten years starting from 1995 to 2004.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responded to competitive pressures in agriculture with addition commodity subsidies and attempts to increase protection. Faced with WTO limits on direct subsidy and with border protection declining, Korea has opted to devote substantial new resources to R&D and other productivity enhancing public-good investments.

The additional funds through the ARPC provided universities and private sector an expanded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gricultural research. However, since funds for agricultural R&D are administered by various agencies such as MAF, ARPC, RDA, Forestry Administration, and other agencies, the coordination in setting research goals and priorities is weak. This issue applies in most countries and is of probably of even more concern in plac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ith a federal system and

much effort controlled by individual universities.

The evolution of Korean R&D has relevance for issues much broader than Korea itself. As Korea grapples with issues of how to find a way for some parts of its agriculture to be competitive in a more open trading environment it must look to rapid changes in farm size, commodity mix on farms, a demographic and human capital transformation and innovative technologies. Obviously, these issues are not unique to Korea, but Korea may be ahead of many other countries of Asia in facing these questions in the context of incredibly rapid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By all accounts, Korean farm leaders expect the borders to open and they expect severe changes. However, current land prices cannot be sustained with the relatively low market prices (especially of rice) that such market opening entails; no matter what commodities are produced, what farm sizes or what technology is made available.

Given the severe adjustments facing Korean agriculture, the productivity of new R&D investments is not clear. To invest wisely research must be applicable to the commodities, farm sizes and organizations and regions that are likely to prevail a five to ten year hence. Hard-headed analysis may imply that current R&D bypass some of the productivity concerns of the million small rice farms that may well be gone by the time the research results are available for adoption. Furthermore, given a terrain that makes tiny plot sizes the only feasible possibility in much of the country, the payoff may also be for R&D investments that focus mainly on those regions of the country that are likely to remain in commercial agriculture. It maybe counter-productive to dilute the Korean R&D budget by investments in marginal areas that are unlikely to remain in agriculture and can never be made competitive in rice production. The challenge, of course, is to maintain a political consensus for support of agricultural R&D that

neglects parts of the country and many of the current farms.

The objective of a more productivity-based R&D policy may be achieved by tying agricultural R&D funding measures to broader funding for aid in the transition out of farming or for shifts across commodities. A budget for aid to rural areas and residents could be made broadly available with a self-selection into various arms of a program that included agricultural R&D, aid for rural schooling and other human capital development, and aid for rural non-farm infrastructure. All of this effort could be directed to smoothing the process of market opening for farm commodities to mitigate the losses in those commodities and regions that face severe losses. The rapidity of the transition that would accompany further opening to agricultural imports suggests that more than in most countries, effective Korean R&D investment policy must be developed in the context of economic analysis of the effects of changes in other economic policy that affects agriculture.

월간 농업농촌경제동향

연구자 : 최정섭, 김경덕, 정학균,
 송우진, 이용선, 김윤희,
 박재홍, 이은숙, 김연중,
 한석호, 김은주, 전철현,
 김병률, 홍승지, 서대석,
 김진현, 김성우, 송성환,
 정민국, 전상곤, 성동현,
 이형우

연구기간 : 2002.3 ~ 2002. 12

1. 연구목적

이 보고서는 매월 발행일자가 다른 채소월보, 과일월보, 과채월보, 축산월보의 종합본 성격을 가진다. 정책결정자에게 거시경제 환경과 농업·농촌 경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발간된다. 주요 내용은 일반경제 변화와 동향, 농업·농촌경제 변화 동향, 품목별 수급 동향, 지역언론 동향, 집중분석, 특별보고 등이다. 특히 농업·농촌 경제변화 동향편에서는 해당 월의 농업소득을 추산하여 시의 적절하게 농가의 소득변화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2. 일반경제 변화와 동향

2002년 세계 경제는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베네수엘라 파업으로 인한 고유가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경제는 대외경제 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연평균 6.2%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에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하반기에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다.

3. 농업·농촌경제변화 동향

2002년 11월 기준 농가판매가격은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하였다. 이는 청과물류의 큰 폭의 상승에 기인한다. 농가구입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5%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 교역조건은 전년동월대비 3.1% 개선되었다.

4. 품목별 수급동향

경종부분은 기상악화로 인해 단수와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축산부분은 쇠고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원유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낙농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다

5. 지역언론동향

지방 일간지 23종에 보도된 농업 관련 이슈를 발췌하여 매월의 언론동향을 알기 쉽게 분석하였다.

6. 집중분석

각 달의 집중분석에서는 3월 양파, 6월 원유, 한우, 7월 고추, 9월 마늘, 배, 10월 육계를 분석하였다. 특별보고는 5월 미국의 농업법, 7월 직접지불제, 9월 WTO/DDA, 한칠레 FTA, 수확기 쌀의 주제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연구자 : 이동필, 김종선

연구기간 : 2002. 1 ~ 2002. 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주류산업의 활성화, 특히 전통민속주산업의 육성은 수입외국산 주류를 대체함으로써 외화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산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여 농산물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쌀과 온갖 과일 및 약초로 빚은 전통민속주의 재현을 통해 국민건강의 증진은 물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연간 약 24조원으로 추산되는 주류시장에 대해 주세보전 및 징세편의 위주의 경직된 주류관리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아직도 이렇다 할 산업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류산업의 실태와 관련 제도, 그리고 주류 분야의 규제개혁 실태를 살펴보고 주류산업 특히, 전통민속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가. 주류관련제도와 제조 및 유통면허실태

- 주류관련제도의 개요
-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면허제도와 유통방법

나. 주류의 생산, 수출입 및 수급실태

다. 주류 분야의 규제정비 실태와 성과

라. 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전제조건
-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연구방법

가. 주류 관련 자료 및 통계자료 수집, 제표분석

- 주류 관련 제도의 실태 등은 관련 법령 및 규제개혁위원회 내 부자료 등을 통해 분석
- 민속주 제조 및 유통 관련 자료는 농림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서를 통해 수집, 정리
- 주류의 생산실태, 주류별 수출입실태, 주종별 납세액 등은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

나.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농민신문사와 공동으로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주류산업활성화 방안」세미나 개최(2002. 2. 18)
- 농민단체, 관련 전문가, 공무원, 업계, 언론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3.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세보전 및 징세편의를 위한 규제 위주의 주류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산업으로써 주류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나친 음주로부터 국민건강 및 청소년보호,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합리적 방식의 주세징수 및 주류관리정책 도입이 필요한데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제조장 및 주종별 면허제도를 제조장면허로 단일화하고, 제조업면허시 허가요건인 시설용량과 연간최저생산량기준을 생산량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함
- (2) 주종구분을 단순화하고 알코올함량에 따라 규제와 주세를 차등화

하며, 원료의 종류와 첨가물에 대한 제한 등 주류의 종류와 규격 기준 및 제조방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생산되도록 해야 함

- (3) 주류중개업을 포함한 도매업면허를 단순화하고, 유흥음식점용과 가정용으로 이원화한 주류유통을 통합함으로써 무자료거래와 탈세를 방지하고 소매업면허제도를 재정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4) 소규모주류제조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슈퍼·연쇄점 가맹점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농민주 생산규모를 현실화하며, 통신판매 규모와 거래처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농민주 등 소규모주류제조업체에게 세금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 국산 원료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해 주류에 사용할 수 있는 원부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류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생산지와 효능을 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6) 주류제조면허권을 농림부로 이관하고 농산물가공산업육성정책의 틀 속에서 원료의 수급과 자금지원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구제역 파급 영향 분석

연구진 : 최정섭, 정민국, 허 덕,
이철현, 김경덕, 권오복,
전상곤, 성동현, 송우진
연구기간 : 2002. 5 ~ 2002. 5

1. 연구의 목표

구제역은 지난 2000년 3~4월 경기도 파주 등 6개 지역에서 발생 확인된 후 2년 1개월만인 2002년 5월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소재 울곡농장 돼지에서 구제역이 재발하였다.

이 연구는 구제역 발생과 방역 상황을 파악하고 구제역이 축산물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구제역 관련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내용

- 가. 2002년 구제역 발생과 방역상황
- 나. 구제역 발생이 축산물수급에 미친 영향
- 다. 살처분과 백신접종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적 접근
- 라. 구제역관련 대책방향

3. 연구결과

구제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하는 List A 및 국내 법정 제1종 악성가축전염병으로 동물 및 축산물 국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인 급성전염병이다. 감염대상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偶蹄

類,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이다. 전파방법: 감염동물, 차량, 사료, 물, 기구, 사람, 공기 등으로 빠르게 전파된다.

2002년 5월 2일 안성시 삼죽면 소재 을곡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사결과 5월 4일 구제역으로 확인되었다. 2002년 구제역 발생 지역은 경기 안성(9건)·용인(4건)·평택(1건), 충북 진천(2건)으로 총 16건이 발생하였다. 6월 23일까지 16건의 구제역이 양성으로 판정된 후 추가 발생이 없어 8월 14일 종식이 선언되었다.

2002년 구제역은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16농가에서 돼지 위주로 발생한 반면 2000년에는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15농가에서 한우와 젖소 위주로 발생하였다. 바이러스 형태는 두 경우 모두 pan Asia 01형으로 같다. 방역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은 2000년에는 살처분과 동시에 백신접종을 사용한 반면에, 2002년에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여 결과적으로 청정국 복귀 일정을 앞당겼다.

구제역 발생 전후의 축종별 산지가격 변화는 2002년에는 2000년에 비해 산지가격의 변동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의 경우 2000년 1.4% 하락하였으나 2002년에는 1.6% 상승하였다. 돼지의 경우 2000년 15.9% 하락했으나 2002년에는 1.8% 상승하여, 구제역으로 인한 가격 하락 현상이 2002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축산물 수급 변화에 있어 2000년 구제역 발생시 3월 한육우 도축두수 전월대비 20% 증가하고 돼지 도축두수 전월대비 23% 증가하였다. 구제역 발생시 3월에 한육우와 돼지 집중출하되었다. 2002년 구제역 발생시 6월 한육우 도축두수 전월대비 15% 감소하였고, 5, 6월 돼지도축두수 전월대비 각각 7%, 4% 감소하여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집중출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소비 측면에서 2000년에는 4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가 14% 정도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돼지고기보다 쇠고기의 소비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2002년 살처분 정책과 수매정책의 적기 시행, 2000년 구제역 발생 경험 등으로 농가들의 사육심리가 안정되어 집중출하 현상은 많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산지가격의 변화폭도 작아졌다. 질병 발생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2000년과 2002년 모두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홍보한다면 축산물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도권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5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무해하다고 응답한 주부는 39%에 불과하여 구제역에 소비자에게 구제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구제역발생 후 국내에서 생산된 육류제품에 대한 소비의향은 축산물 소비를 감소시키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돼지고기 부분에서 41%, 한우고기 17%로 나타났고, 닭고기와 우유는 각각 4%로 조사되었다.

구제역 관련 단기대책으로 구제역 발생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고 정례적인 연습 실시가 필요하며, 구제역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차단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원인에 따라 박멸대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구제역 가축의 살처분 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소각 시설이 바람직하나, 지역이기주의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구제역 발생 지역 인근과 가축 집단사육 지역에 소각장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축질병에 발생에 대한 신속한 신고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보상을 가축공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간방역 조직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방역조직은 서비스를 받는 농가가 한 번의 접촉으로 방역 관련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서비스(one-stop service)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및 검역기술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질병의 해외유입 방지 시스템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연구자 : 김경덕, 이계임, 정학균,
송우진

연구기간 : 2002. 8 ~ 2002. 9

1. 연구 목적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특별과제는 2001년 국내외 및 농촌경제동향과 식품수급동향에 관한 보고서로서 농업정책 참고자료 및 홍보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2. 국내외 경제동향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상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2001년 우리경제는 성장률이 3.0%로 전년(9.3%)보다 크게 낮아졌다. 2001년 세계 경제는 미국 경기 부진의 영향이 유로지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경제에도 파급되면서 2000년의 4.1% 성장에서 2001년 1.5% 성장으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다.

3. 농림업 부가가치

2001년 농림어업 총 부가가치는 명목금액으로 24,127십억원이며 실질로는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이중 농업 부문 생산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반면 임업 부문은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다.

4. 식품수급동향

1982~2001년간 연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8.3%로 같은 기

간 소비지출액 증가율 10.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식품류별로는 외식비, 낙농품, 빵 및 과자류, 과실류, 육류, 어패류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곡류 및 식빵, 조미식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마늘산업의 당면 문제와 대책

연구자 : 최정섭, 김병률, 홍승지

연구기간 : 2002. 7 ~ 2002. 9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002년 7월 29일 무역위원회는 제176차 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해 달라는 농협중앙회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2003년부터 냉동·초산조제 마늘에 대해서 수입을 자유화한다는 2000년 7월의 한·중 간 마늘합의 부속서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년 동안 마늘 수입량은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감소 추세로 반전하였다. 무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2003년 1월 해제되는 경우 중국산 마늘 수입량은 다시 늘어나고, 그만큼 마늘 가격은 인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마늘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품목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여건의 전개에 따라 마늘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늘의 세이프가드 조치 해제가 마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내용과 효과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내 마늘산업 보호를 위해 2000.6월에 발동한 세이프가드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고, 세이프가드가 해제될 경우 국내 마늘

산업에 미칠 있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마늘산업의 효율성을 제소시킬 수 있는 대책 수립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함.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제표 분석을 실시하고,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필요한 파라미터를 추정함. 분석된 자료와 대안의 현실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의 대상기간은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이전인 1995년부터 2003년산 마늘이 유통되는 2004년 4월까지로 하였다. 대상 품목은 신선 마늘과 가공마늘(냉동·초산조제 마늘)이다.

4. 연구결과 요약

가. 마늘 세이프가드의 효과

UR 출범이후 중국산 신선마늘과 냉동·초산조제마늘의 수입 급증으로 수입 마늘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여 마늘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었다. 이에 국내 마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2000. 6. 1~2002. 12. 31 동안 깎마늘과 냉동·초산조제마늘에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게 되었다.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수입단가가 상승한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은 1999년에 45천 톤에서 2001년에 26천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국내 마늘 소비량 중 수입산 마늘의 점유율도 1998년에 12%에서 2001년에는 6%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나. 마늘의 유통 및 소비실태

국산 한지형은 품질이 우수해 전량이 통마늘로, 난지형은 주로 깎마늘로 유통되고 있으며, 마늘의 실수요처별 소비량 비율은 가정이 40%, 요식업소 45%, 가공업체가 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산 마늘은 신선냉장마늘(통마늘, 깎마늘), 냉동마늘(깎마늘 냉동 90%, 다진마늘 냉동 10% 정도),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세이프 가드 발동이후 신선냉장마늘은 수입단가의 상승으로 MMA 물량 이외에는 수입실적이 없었으나, TRQ 물량으로 수입되는 냉동마늘은 요식업소나 가공업체에 다지기용으로, 초산조제마늘은 가공업체에 장아찌용으로, 그리고 건조마늘은 라면스프와 카레소스용으로 꾸준히 유통되고 있다.

중국산 수입마늘 중 이미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인 건조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은 세이프가드가 해제될 경우에도 급격한 수입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산 마늘과 모든 용도에서 완전 대체가 가능한 깎마늘과, 요식업소나 가공업체에서 다지기용으로 이용되는 냉동마늘은 세이프가드 해제 시 수입단가 하락으로 국산 마늘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SG 해제의 영향

세이프가드가 해제될 경우 2003년부터 냉동·초산조제마늘과 깎마늘은 기본관세로 수입된다. 세이프가드 기간 부과되던 쿼터비와 최저가격제도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중국 내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2003년 이후의 수입단가는 세이프가드 이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태별로는 신선마늘은 kg당 2,500~2,600원, 깎마늘은 2,700~3,000원, 냉동·초산조제마늘은 900~1,06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2~2003년산 마늘의 공급량 중 마늘 수입량은 2002년산의 경우 MMA 물량을 포함하여 34~44천 톤, 2003년산은 53~56천 톤으로, 연평균가격은 1,800~1,87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000평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라. 정책 방향

세이프가드 해제에 따른 정책 방향으로는 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위한 주아재배 보급 확산, 노동력,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종·수확기계 개발 및 보급 강화, 그리고 마늘 농가의 규모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중국산 마늘과의 품질 차별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마늘 수확 후 상품화시설 설치 지원(GPC), 마늘 포장 유통 유도(브랜드화 및 품질 유지), 국산 마늘 가공제품 개발 및 소비홍보(기능성제품), 원산지 표시제 강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과일 · 과채 · 채소 · 축산 · 수급 및 반응함수 추정

연구자 : 김경덕, 최정섭, 정학균,
한석호, 송우진

연구기간 : 2002. 9 ~ 2002.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은 관련농가의 소득과 경영을 불안하게 하는 근본 요인이다. 농산물수급에 대한 시장정보의 부족은 농업인의 합리적 생산·출하의사결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교섭력을 약화시킨다.

WTO/DDA 농업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 농산물 시장수급분석은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와 함께 관련 정책당국의 농업협상력 제고 및 품목별 중·장기 적정수급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2년 농업관측 26개 품목으로 한정하였다. 26개 품목은 채소류 9개 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감자, 당근, 양배추), 과일류 6개 품목(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과채류 6개 품목(오이, 수박, 참외, 호박, 토마토, 딸기), 축산물 5개 품목(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품목별 수급 및 가격자료 중심이고 거시경제변수는 외생적으로 취급하였다. 분석 및 추정기간은 주요 농산물 통계조사방식이 1970년대 후반에 행정조사에서 표본조사방식으로 전환된 관계로 1980~2001년까지이다.

수급모형은 품목별로 재배면적함수, 단수함수, 일인당 수요함수, 순수

입함수, 재고함수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개별 추정한다. 재배면적함수와 단수함수를 곱하여 생산함수를 도출하고, 일인당 수요함수와 인구를 곱하여 수요함수를 도출한다. 순수입과 재고를 고려하여 총수요함수와 총공급함수를 만족하는 균형가격을 구한다.

추정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Eviews 4.1 이다. 추정·전망의 적합도 검정은 Theil의 불평등 계수(Theil's Inequality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추정 결과는 부록으로 처리하였다.

3. 연구결과

품목별 수급모형은 공급 부문과 수요부문, 가격방정식, 시장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급은 (당해 연도)국내생산량, (당해 연도)해외 부문 공급인 수입, 전년도 이월량으로 구성된다. 수요는 국내수요와 해외수요인 수출로 이루어져 있고, 국내수요는 당해연도 수요와 차기이월로 구성된다.

가격방정식은 농가판매가격과 소비자가격간의 함수관계, 생산량에 대한 가격반응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과 소비자 가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시장 청산되는 소비자가격을 구할 수 있고, 생산자의 농관가격지수와 소비자가격지수와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시장청산된 소비자 가격에 대응하는 농관가격을 도출한다.

공급 부문 중에서 당해 연도 국내생산량은 품목별 면적함수와 단수함수를 추정하여 구하고, 해외공급량은 수입함수, 전년 이월량은 재고함수를 추정하여 계산한다. 수요 부문 중 국내수요는 일인당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인구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해외수요인 수출은 수출함수, 차기이월량은 재고함수를 추정하여 계산한다.

순수입 수요함수에서 전기 이월량과 수입량이 추정 또는 계산된다. t 기의 I 품목의 저장수요는 전년도 저장수요와 t 기까지의 시장수급상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순수입 수요는 국내가격, 국제가격, 국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 환율 및 관세율, 인구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수급균형모형에서는 저장수요함수 또는 순수입 수요함수를

추정하면 나머지는 균형식에서 잔차로 계산 가능하다. 우리의 모형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축산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장수요함수를 계측하였고 순수입 수요함수는 잔차로 처리하였다.

경종 부문 중 과일류의 재배면적 반응함수와 축산 부문의 사육 및 도축함수는 생태 및 사육관계를 이용한 생태방정식(bio-equation)을 이용하여 추정의 정교성을 높인다. 생태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코호트 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과일 부문은 어린 유목을 식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다. 따라서 과일의 경우 전체재배면적보다는 성목과 유목면적을 구분하여야 정확한 생산량을 추정·전망할 수 있다.

신규유목식재면적은 유목이 성목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대수익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폐원면적은 경제적 기대수익뿐만 아니라 과일류의 생물적 수명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t년도의 과일류의 순입식면적은 생명주기(life cycle)를 고려한 t년도에서 예상 가능한 경제적 기대수익과 생명주기에 영향을 주는 작물재배면적의 초기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t기의 순입식면적이 추정되면 알려진 (t-1)기의 해당 품목 전체재배면적을 더함으로써 t기의 해당 품목 전체재배면적을 추정할 수 있다.

과일류는 유목과 성목면적을 각각 추정·전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정·전망된 전체재배면적을 성목과 유목으로 분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t기 유목면적의 순증가를 추정·전망한다.

축산 부문의 사육, 출산, 도축, 폐사두수를 생태방정식을 이용하여 유량변수로 전환하였다. t기의 사육두수 변화는 t기에 새롭게 추가되는 출산두수에 t기의 도축두수와 폐사두수를 뺀 것과 동일하다. 생태방정식은 성별·연령별로 세분된다. t기의 유량변수 출산두수, 도축두수, 폐사두수 중에서 경제적 변수로 상대적으로 설명이 용이한 것이 도축두수와 출산두수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축함수와 출산함수를 축산 부문의 기본 추정식으로 활용한다.

한·육우의 경우 암소의 연령별 출산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정의 정확함을 위해 사육암소의 연령을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출산두수를 분해하였다.

이 연구는 농업관측사업 대상 품목인 과일·과채·채소·축산의 26개 품목 수급 구조방정식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농업관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관련연구 및 정책수단 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멕시코의 농업구조 분석과 한-멕시코 FTA평가

연구자 : 최세균

연구기간 : 2001. 12 ~ 2002. 3.

이 연구는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 논의에 대비한 농업 부문 의 기초연구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멕시코의 농업현황, 국제경쟁력, 관세 및 비관세 현황, 수입증가 우려 품목 선정 등이다. 멕시코는 32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역외국들은 멕시코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일본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 민감 부문은 농업이 될 전망이다. 멕시코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맥주, 커피, 신선 채소류 그리고 열대산 과일류이다. 맥주는 연간 7억 달러 정도가 수출되고 있어 농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이다. 커피의 수출규모는 1997년 9억 달러에서 1999년 6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토마토, 고추, 아스파라거스 등 3대 수출품목의 수출규모는 1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오이, 호박, 양파, 돈육도 수출 규모가 연간 각각 1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 그 밖에 1억 달러 정도의 수출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품목으로 망고(1억 2천만 달러), 설탕, 멜론, 포도, 콩(대두 이외의 것), 담배 등이 있다.

돼지고기 수출규모는 연간 1억 3천만 달러 수준이며, 수출의 95%가 일본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일본으로 수출되는 농산물로 신선 및 냉동 야채, 커피, 면화 등이 있으나 교역규모는 크지 않다. 멕시코는 대미국 위주의 농산물 수출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태평양 연안의 항구 시설을 확충해 아시아 국가들로의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더

불어 중남미 국가들과는 개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 다변화 노력은 멕시코 농산물의 미국 시장 수출이 어느 정도 포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요 신선채소류 수입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에 달하는 품목들이 많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품목들의 수출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교역규모는 199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수출은 1995년 9억 4천만 달러에서 2000년 24억 달러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수입은 4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 5년간 6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멕시코 양국의 농산물 교역규모는 전체 교역규모에 비해 매우 작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멕시코 수출은 1995년 2천만 달러에서 2000년 2,500만 달러로 증가한 데에 그쳐 거의 정체되어 있다. 농산물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2000 기간에 10%에서 4%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멕시코의 농산물 교역은 미미한 상태로 전반적인 교역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 장벽, 지리적 장애요인, 열대산품에 있어서 멕시코 농산물의 낮은 국제경쟁력 등이 우리나라 시장개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은 커피(2000년의 경우 약 700만 달러)를 중심으로 치콜검(100만 달러 규모) 등이 있다. 가공식품은 캔디류(150만 달러)와 초콜릿, 츄잉검 등이 있다. 주류로는 데킬라와 맥주 등이 연간 100만 달러 정도 수입된다. 소규모이나 수입되고 있는(또는 최근 10년간 수입된 예가 있는) 농산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품목은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망고, 건조포도, 냉동딸기, 고추, 참깨, 열대과실류 주스, 육류 가공품 등이 있다.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고추, 오렌지, 포도, 잎담배, 아보카

도, 천연꿀, 참깨, 마늘 등이 있다. 그러나 신선채소와 사과, 배, 양파, 코코아 등은 수입증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쇠고기, 돼지고기, 커피,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딸기, 망고 등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어느 수입증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농업소득 안정정책

연구자 : 김태곤

연구기간 : 2001. 12 ~ 2002. 1

1. 미국의 농업소득안정정책

미국의 소득안정제도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지지하고 용자단가와 시장가격 또는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재고를 처분하면서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노리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 가격보전 직접지불은 소득보장성격의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농업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데 소요된 지출금액은 그동안 매년 증가하여 1996년 73억 달러에서 2000년 233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 결과 품목별 지불규모도 대폭 증가하여 쌀 농가의 경우 소득의 50.0%가 정부보조로 구성될 정도이고, 소맥의 경우는 41.5%, 사료작물은 30.0%가 정부보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와 WTO 농업협정의 관계를 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손실지불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감축대상정책(amber box)으로 WTO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가격보전직접지불도 농산물 가격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감축대상정책이다.

미국은 그 동안 농업보호 감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또 다른 나라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최저가격을 지지하여 무제한의 재고를 수용하고, 실질적인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또, 임시대책 등으로 직접 지불을 교묘히 증액하여 농업보호를 높여 나가고 있는 등 보호감축노선에서 후퇴하고 있다.

특히, 200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차기 농업법 제정 과정에서 구상하고 있는 가격보전직접지불은 종전의 생산자유통직접지불을 그대로 계승하는 형태로 전환된 고정금액의 직접 지불과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가격에 반동하는(counter-cyclical) 지불, 즉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지불금액이 하락하고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지불금액이 상승하는 형태의 변동금액 등 2가지 지불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고정적인 직접 지불이기 허용대상정책이다. 그러나 후자는 시장가격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감축대상정책인 것이다. 미국 하원은 이러한 정책을 2002년 10월부터 10년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의회 주도 속에서 행정부와의 조정을 거쳐 정책화될 것이다. 이것이 최근 미국 농정의 본질이다.

2. 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일본은 농산물 수출지향의 미국과는 달리 수입국의 입장에서, 수입농산물의 영향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농가경영의 안정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작경영안정대책을 비롯하여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을 확충하고 있다. 품목별 대책은 가격하락분을 보전하는 제도와 시장가격과 생산비와의 차액 등을 보전하는 제도가 있으며, 생산자도 비용의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경영단위 소득안정정책은 품목별 소득안정대책이 초래하는 수급불일치를 해소하고, 가격하락에 의한 영향을 완화하여 경영의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며, 인정농업자나 주업농가 등 특정 농가에 시책을 집중하여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정책의 WTO 협정의 관계를 보면, 도작경영안정대책은 생산조정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계획하의 직접 지불(Blue Box)이다. 기타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은 감축대상정책(Amber Box)으로 WTO에 통보되었다. 그리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경영단위 소득안정정책은 정책의

안정성을 위하여 허용대상정책(Green Box)으로 고려하고 있다.

3. 종합

최근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시장가격이 하락하거나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가격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영계층은 영세농가나 겸업농가보다는 대규모 전업농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소득안정대책이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변동에 착안하고, 지불금액이 위협의 정도에 따라 변동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공통의 특징이다.

종래의 가격정책은 소비자의 요구가 생산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워 생산자의 경영능력 육성에 장애가 된다든가, 또 전체 생산자에게 효과가 일률적으로 미치지 때문에 농업구조 개선에 제약이 있었다.

또, WTO 체제에서는 관세화에 의한 시장유지를 전제로 하면서, 무역왜곡적인 농업보호에서 전환, 경쟁조건의 확보와 농업경영의 안정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해지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소득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소득안정정책의 기본 방향은 농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응, 그 영향을 완화하여 경영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여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가 계층을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영안정정책을 검토하는 경우 고려 사항으로는, 첫째 어떤 계층의 농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전업농을 비롯하여 겸업농, 취미농 등 다양한 경영이 혼재하는 경우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선결되어야 한다. 미국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일본은 전업농을 중심으로 대상 농가계층을 한정하고 있다.

둘째, 농산물은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가 감소하고, 약간의 공급과잉이 대폭적인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 경직적인 특징이 있다. 또 품목별로 보전금액을 높이면 과잉 문제가 쉽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품목

별 대책이 초래하는 수급불일치 문제를 감안하여 적절한 가격지지의 수준과 지지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목표가격, 용자단가, 직접 지불이라는 3가지 지표로서 조정하는 방식이며, 일본은 지역별·경영유형별로 대표적인 모델경영을 지표로 하고 있다.

셋째, 위험에 대한 대응도가 높아야 한다. 최근 가격 변동, 자연재해 등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위험관리의 정도가 높은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고정금액의 직접지불제는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다. 미국의 가격보전직접지불도 일본의 경영단위 소득안정정책도 변동적인 지불이다.

마지막으로, 경지가 영세하고 지형이 험소하여, 작목이 제한되는 등 구조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은 경영안정정책과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북고성군 온실농장 협력사업 사례와 정책과제

연 구 진 : 김영훈, 권태진

연구기간 : 2002. 4 - 12

북측 고성읍에 소재한 고성온실농장은 남측과 협력사업을 위해 설립된 농장이다. 이 농장은 3만평으로 비록 경지규모는 작지만 경영규모는 작다고 볼 수 없다. 온실 설비를 갖추기 위한 초기 투자규모가 100만 달러에 달하고 상시 근로자도 80여명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 협력사업은 현대아산이 설비와 농업기자재를 turn-key 방식으로 수출하고 고성온실농장은 생산된 업체류와 과채류로 상환해 나가는 경제협력사업의 형태로 출발했다.

이 농업협력사업의 당초 계획에 의하면 시작 4~5년 후 현대아산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고성온실농장은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유동자금 부족으로 인해 농업협력사업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농업협력사업에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은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었다. 즉, 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북고성군 농업협력단'을 설립하여 추진기로 하고 경협사업은 농장과 현대아산의 상업적 거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협력단에는 세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기업 및 농민단체는 고성온실농장에 대해 농업기자재 및 영농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대아산은 농산물 구입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면서 한편으로는 협력단과 고성온실농장간의 연락 및 지원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협력단 업무를 담당하고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에 대

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2002년 고성온실농장에 대한 협력단의 지원은 4월과 10월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지원된 물자는 비료, 종자, 농용비닐, 농기계장비 등 농업기 자재 뿐만 아니라 인도지원품도 포함되었다. 농업기술지원은 농업기술 자가 수차례 농장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부족한 유기질비료 확보를 위한 돼지사육 지원에 관해 협력단과 고성온 실농장의 협의가 마무리되어 2003년부터는 소규모로 돼지사육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농장협력사업 중 경험 부분이 정상을 회복하여 추진된다면 남측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금강산 관광지구에서 필 요한 농산물을 현지에서 확보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②협력사 업 추진을 통해 대북 협력의 인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북측에 주는 효과는 좀 더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다. ①북고성군 주민에 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인도적 지원 효과, ②효율 높은 농자재와 농업생 산기술이 전파되는 효과, ③새로운 농장관리 방식과 소비자 위주의 상 품관리기법 등이 전파되는 효과, ④주민을 고용하고 농산물을 현지 판 매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

이러한 효과뿐만 아니라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은 ‘상업적 농업협력 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 로 일방적 지원을 점차 상업적 협력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상업적 차원에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협력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 장’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재를 생산하는 남북경협사업에서는 남한이 ‘시장’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남북한 농업협력을 통해 생산된 북한산 농산물의 ‘시장’은 아 직 남한지역에서 제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기술지원을 하더라도 북한 산 농산물의 상품성이 아직 낮으며, 신선해야 하는 농산물의 남한 반입

절차와 물류 문제가 존재하고, 남한의 국내 농업 보호정책에 기인한 북한산 농산물 반입 장벽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간 농업 협력 초기 단계에서는 협력사업을 통해 생산된 북한산 농산물의 시장이 북한 내에 존재하는 ‘특수한 지역’이 필요하다.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는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의 결과로 산출된 농산물의 ‘시장’을 제공하는 특수한 지역에 해당된다. 금강산 관광객의 소비를 겨냥한 남북협력농장의 실험은 신의주특별행정구와 개성공업지구의 배후지역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농업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2002년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발견된 몇 가지 문제는 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북측의 문제로서 농장의 자생력 확보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고성군 내 농산물 판매와 현대아산과의 거래를 통해 현금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본의 투입을 남측의 물자지원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남측의 문제도 있다. 이는 주로 협력사업 참여자들이 북측 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의 장단기 목표를 뚜렷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대북 지원절차와 기존의 지원창구가 무시되는 사례, 북측의 요청보다 우리 측 지원의사가 먼저 전달되는 사례, 협력농장 방문에 집착하는 사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남북한 양측에서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은 현재 농업 부문에서 유일한 ‘상업적 협력사업’인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직 남북한 관계가 불안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농업협력사업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당분간 세심한 관찰과 보육이 필요하다.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 부문 대책

연구자 : 최세균, 어명근, 서진교,
박준기, 이병훈

연구기간 : 2002. 8. ~ 2002. 10.

이 연구는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영향을 계측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부문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수 부문의 피해는 계절관세 적용 품목인 포도와 관세철폐 대상 품목인 복숭아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숭아의 관세는 10년간에 걸쳐 철폐하고, 포도는 우리나라의 단경기인 11월부터 4월 사이의 계절관세를 10년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 복숭아에 대한 식물검역 규제조치는 2008년부터 해제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과일 농가의 소득 감소는 2004년 30억원으로 시작하여 2010년에는 45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11월~4월 사이)를 10년간에 걸쳐 철폐하는 데 따른 포도농가의 소득 감소는 연간 30억원에서 시작하여 관세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5년 후에는 1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숭아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칠레산 복숭아에 대한 식물검역 규제가 2008년에 해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복숭아 농가의 소득 감소는 2008년 148억원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는 23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과일 농업은 관세와 식물검역조치 가운데 식물검역에 의존하여 보호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은 물론 향후 이루어질 DDA 협상, 양자협상 등에 있어서 동 식물검역 관련 협상이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관세수준 이상으로 크고 관세는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이므로 관세를 통한 시장보호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축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쿼터 허용은 그 규모와 칠레의 수출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DDA 협상 이후에 관세감축을 포함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협상이 있을 경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칠레와의 FTA 협정체결로 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나타나게 될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과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격하락 등으로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폐원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폐원을 유도하고,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하여는 소득보전 방식을 병행하여 과수산업 구조조정과 소득보전을 동시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폐원보상은 농가의 기대소득을 고려한 기대소득 보상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원보상 제도는 식물검역 해제로 칠레산 과일의 수입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미리 실시하고, 칠레산 과일이 수입될 경우 소득보전 직불제에 의한 피해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조기폐원 유도를 위한 연차별 보상 차등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과일 수급 상황에서 칠레산 과일이 국내에 출하될 경우 해당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지원 정책인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보전 직불제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소득보상률은 재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소허용보조 수준과 농가의 참여의식 고취 등을 고려할 때 소득보전 직불제는 프로그램 참여 농가가 일정부분을 자조금 등의 형식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200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2002. 1~12

찍은날 2003. 3 퍼낸날 2003. 3

발행인 이 정 환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문원사 739-3911~5
